

연구보고 2016-28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최효미 김길숙 이동하 임준범

머 리 말

지난 2013년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도입 이후 매년 약 9조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재정 소요에 상응하는 효과가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혼돈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 정책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행태 및 지출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숙고한 연구이다. 5개년 연속과제의 4차년도 연구인 2016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는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뿐만 아니라,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등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 수행을 위해 수고한 연구진과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에 응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3.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18
II. 연구 배경	24
1.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	24
2.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및 변화	37
3. 국외 영유아 가정 비용 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54
III.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62
1. 분석 자료의 특성	62
2.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66
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 변화	75
4.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효과	82
IV.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94
1.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94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02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30
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138
5. 소결	148
V.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51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체감	152
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추가 이용 의사 및 유보가격	157
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72
4. 소결	188

VI. 정책 제언 및 결론	191
1. 기본 방향	191
2. 정책 방안	192
참고문헌	205
보 론	215
부 록	235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37
[부록 2] 기타 부표	260
[부록 3] 심층면담자 특성	265

표 차례

〈표 I-2-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V) 주요 연구내용	14
〈표 I-2- 2〉 심층면담 인원	17
〈표 I-2-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17
〈표 II-1- 1〉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5
〈표 II-1- 2〉 유치원 정규 교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5
〈표 II-1- 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6
〈표 II-1- 4〉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6
〈표 II-1- 5〉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7
〈표 II-1- 6〉 유치원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28
〈표 II-1- 7〉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29
〈표 II-1- 8〉 시간제 기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30
〈표 II-1- 9〉 개인·그룹 지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30
〈표 II-1-10〉 학습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31
〈표 II-1-11〉 개별 돌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31
〈표 II-1-12〉 영유아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2015년)	32
〈표 II-1-13〉 기관별 영유아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33
〈표 II-1-1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34
〈표 II-1-15〉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전체비용	34
〈표 II-1-1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의 특별활동 비용	35
〈표 II-1-1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비용	35
〈표 II-1-18〉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36
〈표 II-1-19〉 혈연·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36
〈표 II-2- 1〉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지원 정책 개요	37
〈표 II-2- 2〉 영유아 가구 유아학비 지원 정책 변화	38
〈표 II-2- 3〉 영유아 가구 보육료 지원 정책 변화	40
〈표 II-2- 4〉 유아학비 지원단가 추이	42
〈표 II-2- 5〉 연도별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2006~2015)	42
〈표 II-2- 6〉 2016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46

〈표 II-2- 7〉 2016년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정책 현황	47
〈표 II-2- 8〉 2016년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48
〈표 II-2- 9〉 영유아 가구 가정양육수당 정책 변화 추이	50
〈표 II-2-10〉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변화 추이	51
〈표 II-2-11〉 2015년 양육수당 지원 현황	53
〈표 II-2-12〉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54
〈표 II-3- 1〉 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가족/아동/출산/양육 수당)	56
〈표 II-3- 2〉 네덜란드의 아동 수당(2016. 1. 기준)	58
〈표 II-3- 3〉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수당(2016. 5. 19. 기준)	61
〈표 III-1- 1〉 연도별 자녀 보육연령-출생년도 및 비용 지원 정책 대상 색인	64
〈표 III-1- 2〉 출생년도-보육연령별 분석 대상자 수	65
〈표 III-3- 1〉 출생년도-보육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전체 응답자 평균)	76
〈표 III-4- 1〉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85
〈표 III-4- 2〉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보육지원 확대정책의 효과)	89
〈표 III-4- 3〉 분위회귀분석 결과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91
〈표 IV-1- 1〉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95
〈표 IV-1- 2〉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97
〈표 IV-1- 3〉 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97
〈표 IV-1- 4〉 응답 가구 특성	100
〈표 IV-1- 5〉 응답 가구 자녀 수	101
〈표 IV-1- 6〉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	101
〈표 IV-1- 7〉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 수	102
〈표 IV-2- 1〉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03
〈표 IV-2- 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04
〈표 IV-2- 3〉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아동당 월평균비용)	106
〈표 IV-2- 4〉 교육·보육서비스 시간제 사교육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06
〈표 IV-2- 5〉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08
〈표 IV-2- 6〉 모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09
〈표 IV-2- 7〉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비용	110
〈표 IV-2- 8〉 특별활동 개수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111
〈표 IV-2- 9〉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11

〈표 IV-2-10〉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12
〈표 IV-2-11〉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종류별 이용비율 및 비용	113
〈표 IV-2-12〉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14
〈표 IV-2-13〉	모의 취업상태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15
〈표 IV-2-14〉	유치원 설립유형별 총 이용비용	115
〈표 IV-2-15〉	특성화프로그램 개수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 및 비용	116
〈표 IV-2-16〉	아동연령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17
〈표 IV-2-17〉	가구소득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17
〈표 IV-2-18〉	기관 유형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18
〈표 IV-2-19〉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119
〈표 IV-2-20〉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0
〈표 IV-2-21〉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0
〈표 IV-2-22〉	특별활동 개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121
〈표 IV-2-23〉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22
〈표 IV-2-24〉	아동 연령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23
〈표 IV-2-25〉	가구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4
〈표 IV-2-26〉	이용 서비스 종류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비용	125
〈표 IV-2-27〉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26
〈표 IV-2-2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26
〈표 IV-2-2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27
〈표 IV-2-30〉	교구활동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28
〈표 IV-2-31〉	통신교육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28
〈표 IV-2-32〉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30
〈표 IV-3- 1〉	자녀수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32
〈표 IV-3- 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32
〈표 IV-3- 3〉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33
〈표 IV-3- 4〉	가구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월평균 비용)	135
〈표 IV-3- 5〉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 보육비용(가구당 비용)	136
〈표 IV-3- 6〉	가구 소득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 보육비용 (가구당 비용)	137
〈표 IV-4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40
〈표 IV-4 2〉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아동당 비용 : tobit)	142

〈표 IV-4- 3〉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	143
〈표 IV-4- 4〉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월평균) ……	144
〈표 IV-4- 5〉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 ……	145
〈표 IV-4- 6〉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	146
〈표 IV-4- 7〉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	147
〈표 V-1- 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	152
〈표 V-1- 2〉 아동 연령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	154
〈표 V-1- 3〉 가구 특성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	155
〈표 V-1- 4〉 아동 연령별 비용 만족도(아동별 조사) ……	156
〈표 V-2- 1〉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	157
〈표 V-2- 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	158
〈표 V-2- 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시간 추가 의향 (아동별 조사) ……	160
〈표 V-2- 4〉 기관특성 및 이용비용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	163
〈표 V-2- 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	164
〈표 V-2- 6〉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	165
〈표 V-2- 7〉 이용기관 및 유보가격수준별 유보가격 초과 시 서비스 이용 계획 (아동별 조사) ……	167
〈표 V-2- 8〉 아동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 (아동별 조사) ……	168
〈표 V-2- 9〉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 (아동별 조사) ……	169
〈표 V-2-10〉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아동별 조사) ……	170
〈표 V-2-11〉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171
〈표 V-2-12〉 모 취업상태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	171
〈표 V-2-13〉 가구 특성별 지불 금액 증가에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 (아동별 조사) ……	172
〈표 V-3- 1〉 가구 소득별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가구별 조사) ·	176
〈표 V-3- 2〉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	178

〈표 V-3- 3〉 가구 특성별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179
〈표 V-3- 4〉 모 취업상태별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	180
〈표 V-3- 5〉 아동연령별 적당한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가구별 조사) ..	180
〈표 V-3- 6〉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 시간(가구별 조사)	181
〈표 V-3- 7〉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 비용(가구별 조사)	182
〈표 V-3-8〉 가구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가구별 조사)	186

그림 차례

[그림 I-2-1] 연구 수행 체계	18
[그림 I-3-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2016년 실태조사 기준)	20
[그림 II-2-1]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및 유아교육 지원 재정 규모	44
[그림 II-2-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재정규모 및 지원 아동 수	45
[그림 II-2-3] 양육수당 예산규모 및 지원 아동 수	52
[그림 III-2-1]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보육기관 이용 패턴(출생코호트 집단별) ..	69
[그림 III-2-2]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영아기)	72
[그림 III-2-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유아기)	74
[그림 III-3-1]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	78
[그림 III-3-2]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	81
[그림 III-3-3]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2세) ..	82
[그림 III-4-1]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87
[그림 III-4-2]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지원확대 전후 비교)	90
[그림 IV-1-1] 아동 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	99
[그림 IV-3-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비용) ·	138
[그림 IV-4-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143
[그림 IV-4-2] 영유아 1인당 사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144
[그림 V-1-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아동별 조사)	153
[그림 V-1-2]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종류별 만족도-평균(아동별 조사) ..	156
[그림 V-2-1] 이용시간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159
[그림 V-2-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161
[그림 V-2-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162
[그림 V-2-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추가 지출 의사: 전체(아동별 조사)	163
[그림 V-2-5]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	167
[그림 V-3-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173
[그림 V-3-2]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174
[그림 V-3-3] 정책 지원 필요 대상(가구별 조사)	177
[그림 V-3-4]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183

- [그림 V-3-5] 가구소득 수준별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 184
[그림 V-3-6]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가구별 조사) · 185
[그림 V-3-7]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가구별 조사) 187

보론 표 차례

〈보표 1- 1〉 0-5세의 16개 지역별 분포	218
〈보표 1- 2〉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남) 분포	218
〈보표 1- 3〉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여) 분포	219
〈보표 1- 4〉 행정자치부 읍면동별 세대수	220
〈보표 1- 5〉 국가기초구역 표본수	221
〈보표 1- 6〉 120개 표본 국가기초구역 분포	221
〈보표 2- 1〉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과정 참여이유 및 개선점(아동별 조사)	224
〈보표 2- 2〉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이유 (아동별 조사)	225
〈보표 2- 3〉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작성(아동별 조사)	226
〈보표 2-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도움정도 (아동별 조사)	226
〈보표 2- 5〉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개선사항 (1+2순위)(아동별 조사)	227
〈보표 2- 6〉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28
〈보표 2- 7〉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28
〈보표 2- 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29
〈보표 2- 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30
〈보표 2-10〉 가정 내 학습지 혹은 독서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아동별 조사)	230
〈보표 2-11〉 아동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31
〈보표 2-12〉 통신 교육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31
〈보표 2-13〉 개별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32
〈보표 2-14〉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비율 및 이유(아동별 조사)	233

부록 표 차례

〈부표 2-1〉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서비스 이용자 평균) ..	260
〈부표 2-2〉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실질비용)	261
〈부표 2-3〉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262
〈부표 2-4〉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263
〈부표 2-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1)	264
〈부표 3-1〉 심층면담자 특성	265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총 5개년 연구로 진행 중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비용 실태 및 정부 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임.
- 정부는 2013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전 연령에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 확대라는 정책 변화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비용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또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숙고해보고자 함.
- 또, 2016년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영유아 가구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과 정책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I)~(III)차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등 선행연구 탐색을 통한 비용 변화 추이를 관찰함.
 - 영유아 및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분석을 통해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함.

- 2016년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세부 지출 내역 및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등을 파악하고, 2016년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함.
-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유추해 보고, 영유아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실태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
 - 문헌연구를 통해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현황 변화 추이를 고찰함.
 -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사건계열분석과 분위회귀분석 등을 활용함.
 - 실태조사는 크게 2016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 및 추정을 위한 부분과 영유아 가구의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됨.
 - 실태조사는 전국(제주 제외)의 1,300개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관측치가 작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가중 표집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는 등 비용 추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 20여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
 -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방법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2. 연구 배경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비 부담 완화가 2004년도에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부터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

-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 지원은 초기 지원 배경에서는 다른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었으나 정책변화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일원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9년도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일반 영유아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음. 하지만, 2009년도의 보육료 지원은 대상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었음.
- 2012년도에는 0~2세와 5세에 한해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됨.
- 2016년도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 6만원, 사립 유치원 22만원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는 일반 아동 기준 0세 41만8천원, 1세 36만8천원, 2세 30만4천, 3~5세 22만원임.
-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아동수당임.
 -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3년도에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84개월 미만 영유아로 지원 대상이 확장되었음.
 - 2015년 가정양육수당 자녀 연령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인구 대비 31.7%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았으며, 이 중 0세 아동이 가장 비율이 높음.
 - 2016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는 일반 아동 기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84개월 미만 10만원임.

3.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가. 분석 자료

- 정책 지원 확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7차년도(2014년)까지 총 11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총 11개 차수에 걸쳐 9,301명임.

나.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 출생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사건계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임.
-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코호트에서 0세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2012년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의 수혜 집단인 2009년생 이후 아이들의 경우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복수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기 이전 코호트인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학습지를 조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반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수혜 집단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이전 코호트에 비해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다.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 변화

-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명목, 지출액이 없는 경우 0으로 처리)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동일 연령대 기준 평균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용 감소 효과는 2012년도에 국한되고,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된 2013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띠며.

라.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효과

-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실질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가 취업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교육·보육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가구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지출 비용이 적은 분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 전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분위별 가구소득 탄력성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요컨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로 비용 지원이 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증가가 컸음을 알 수 있었음.
 -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지출 편차를 줄이는 것에 기여했으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됨.
 - 단,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원 확대 이후 오히려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4.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가.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총 1,312가구(가구 내 영유아 자녀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은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표집 블록수를 12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

- 응답 가구의 아동은 남아가 51.6%, 여아가 48.4%로 성비는 비교적 균등하며, 연령도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분포.
 -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49.4%, 3인 이하의 가구가 31.9%임. 가구 소득은 300~399만원이라는 응답이 34.9%, 400~499만원이라는 응답이 21.6%임.

나.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 응답 가구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6만 9천원임.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더 나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월평균 비용이 높음.
 -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모가 취업상태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시 월평균 비용은 6만5천원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높아짐.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은 과목당 평균 2만1천원, 월평균 5만8천원임.
- 유치원 이용 시 월평균 비용은 19만4천원이었으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연령이 3세에서 5세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 보임.
 - 사립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평균 23만6천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용 4만8천원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있음.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과목당 평균 3만5천원, 월평균 8만4천원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비용에 비해 약간 높음.
-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비용은 61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의 총액 평균은 11만8천원이었으며, 아동 연령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 및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다수가 혈연 도우미를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비용은 56만3천원임. 아동 연령이 0세일 때 이용비용이 가장 높음.

다.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3만4천원이었으며, 총 자녀수 및 영유아 자녀수가 2명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함.
-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은 소득 대비 평균 5.4%, 지출 대비 평균 7.6%인 것으로 나타남.

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은 월평균 19만5천원이었으며,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4만2천원, 시간제 사교육비는 4만원으로 추정됨.
 - 이를 이용하여, 연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규모를 추산해보면, 6조 4,114억, 8,534만원에 달함. 이 중에서 총 사교육비용은 1조 3,809억 3,530만원으로 총 비용 대비 21.5%임.
 - 연간 총 시간제 사교육비는 1조 3,151억 7,648만원으로 총 비용의 20.5%임.

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실태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살펴봄.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시간제 학원 등 시간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반면, 만족도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4시간이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의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2시간이었음.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를 질문하자, 현재 이용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의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시간을 늘리지 못한 이유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라는 응답이 26.4%로 다음을 차지함.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증가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 증가를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6%로 절반가량을 차지함.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 가격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5만7천원까지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음.
-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은 '좀 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34.3%였음.
 -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이용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줄어드는 시간만큼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아동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긴 했으나, 3세 이상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적극찬성 + 찬성)는 의견은 83.4%였으며, 현재 지원 비용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0%, 현행 지원 수준보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였음.
 -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적극찬성 + 찬성)는 의견은 84.9%였으며, 현재 지원 비용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3.9%, 현행 지원 수준보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1%였음.
-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으로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1.1%로 가장 많았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24.7%, 특정 연령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13.7% 있었음.
 - 전 계층에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 금액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높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16.6%,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7.7%,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6.9% 순으로 조사됨.
 -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6.2시간이 비용 지원이 필요한 적당한 시간이라고 응답함.

- 취약 계층만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는 저소득층 66.7%,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50.9%, 장애 영유아 45.4%, 다자녀 20.4% 순이었음.
-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8.9%로 대부분이었으며, '부모 직접 양육' 12.9%,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5.6%,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2.6% 순이었음.
-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별 필요성(7점척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7점 만점에 평균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필요성과 별개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41.8%로, 다른 항목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임.

6. 정책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담 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보육 시간(국가지원기본시간)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 및 적정 수준의 국가지원기본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무상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지원기본시간이 확정되면, 국가지원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
 -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함.
- 가정 내 양육 지원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는 한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영유아 아이들에게 부모 혹은 친구와 함께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과도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도 강화.
 - 정부의 지도·감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전 계층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이러한 지원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와 중재 프로그램 실시.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급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로는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취약 1년 전(5세아)에 한해 초등 입학 이후 학업 지체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는 아이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
-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간접적 비용 경감 효과 유도.
 -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전환 유도.
 -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과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나가야할 것임.
 -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장을 통한 부모교육 등을 추진.
 -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가 우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총 5개년 연구로 진행 중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비용 실태 및 정부 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 양육수당) 하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무상교육·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전 연령에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김은설 외, 2016 : 394~398), 문제는 영유아 가구 전 계층에 교육·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¹⁾ 마련의 고충이다. 실제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안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 1) 관련 예산 총액은 2016년 8조 6,377억 4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고 지원 예산은 4조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었고, 국고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교육부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oeblog/220603412041>, 2016년 3월 15일 인출).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3조 1,065억 8100만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조 2,192억원,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시간차동형보육 지원사업으로 119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보육사업안내 부록, p.241).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국고지원 뿐 아니라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규모는 최소 9조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 2) SBS뉴스(2016.1.17.일자), [취재파일] 누리과정에서 시작한 '보육대란' 정말 오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501, 2016년 3월 15일 인출. / 조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이하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³⁾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실시되게 된 것은 2013년 이후로, 그 전에는 일부 연령 혹은 특정 소득계층에 한해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나정, 2014). 또한, 2012년도에는 0~2세와 5세에 한해서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실시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부의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이 제도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밀려 급작스럽게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백선희, 2012; 신하영, 2013; 윤희숙, 2014; 전윤정, 2014). 즉, 현행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은 그 효과성보다는 당위성이 보다 강조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도입 이후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아 부모들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고(민연경·장한나, 2015: p.111), 교육·보육 기관 대기자 증가 및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촉발되는 등(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 217)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윤희숙, 2014; 조경엽·유진성, 2013; 박미경·조민호, 2014)는 소수에 불과하여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적었던 이유로는 제도 도입 이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만큼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보다 면밀한 고찰과

일보 (2016.11.1.일자), '누리예산' 편성 놓고 몸싸움, 난장판 된 경기도 의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1/2016010101664.html?anyNewPop, 2016년 3월 15일 인출 / 연합뉴스(2015.11.10.일자), 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혼란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9/0200000000AKR20151109126200054.HTML>, 2016년 3월 15일 인출하였다.

- 3) 편의상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전 계층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및 양육수당을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I 장 3절 용어의 정의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 4)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등에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보육 비용' 등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연구논문 중에서, 2013년 이후 정책 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 중 계량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윤희숙(2014)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며, 조경엽·유진성(2013)은 소득재분배효과를, 박미경·조민호(2014)는 보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검증을 통한 정책의 방향성 모색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보건복지부(2013c)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 계층 무상 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가계 부담의 완화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 일·가정양립 지원,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 등이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기대효과로 주로 언급되곤 한다(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10~1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 변화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비용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또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한편, 1,300여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6년도 영유아 가구의 구체적인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등을 함께 고찰해봄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4차년도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III)차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⁵⁾ 등 선행연구 탐색을 통한 비용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둘째, 영유아 및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분석을 통해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특히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현행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탐색해보았다.

5) 연속과제 이전에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가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연속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1차~3차년도의 연구 결과는 II장 1절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2016년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세부 지출 내역 및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등을 파악하고, 2016년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하였다.

넷째, 영유아 가구의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와 의견을 분석하고,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유추하여, 영유아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2) I 차~IV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V)』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I-2-1>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2013년도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양미선 외(2013) 대비 201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2015년 5월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2016년도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유형별 및 세부항목별 교육·보육 비용 지출 실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년도 연구와 연속성을 가지며,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 및 비용 지출 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표 I-2-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V) 주요 연구내용

I 차 연구 (양미선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정리 · 2013년도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을 산출 · 2013년도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총 교육·보육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산출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대비 2013년도 교육·보육서비스별 이용 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분석 ·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 · 영유아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

(표 I-2-1 계속)

<p>II차 연구 (양미선 외,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정리 · 2014년도 아동 연령 및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 1인당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비용과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출 · 2014년도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총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산출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양미선 외(2013) 대비 201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분석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p>III차 연구 (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정리 · 2015년 실태조사를 기초로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항목별로 제시 · 2015년 가구소득별·영유아연령별로 총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 규모를 본 조사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규모 추정 · 가구소득별·영유아연령별 비용 지출 결정 요인 분석 · 사교육 비용의 월평균을 이용한 연간화 작업으로 2015년도 연간 규모 추정 ·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의견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p>IV차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정리 ·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분석 및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세부 항목별로 제시 · 2016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추정 ·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의견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가 4년째에 접어드는 연속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1~3차년도 추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현황 변화와 2013년~2015년의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승인통계 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현황 변화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인 1~3차년도 연구와 '전국보육실태조사' 연구 내용은 2016년도 실태조사 설문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한편,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변천 과정과 재정 지원 변화 추이 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보았다. 이 외에도 국외 사례로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 2차 통계 자료 분석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패턴의 변화 등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시된 2012년도와 2013년도 전후를 기준으로 정책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았다.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사건계열분석과 분위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사건계열분석은 2004년생~2014년생까지 총 11개년 동안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관찰 추적하기 위한 방법이며, 분위회귀분석은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시행 전후로 정부의 지원 확대가 교육·보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가구소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 실태조사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크게 2016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 및 추정을 위한 부분과 영유아 가구의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된다. 실태조사는 기존 1~3차년도 추정연구와 큰 맥을 같이 하되, 4차년도 연구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가구 표본을 축소하는 형태로 조정하였다. 또한 표본의 축소에 따라 특정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이 조사되지 않거나 학부모들의 지출 비용 응답이 부정확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응답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비해 설문을 간소화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제주 제외)의 1,300개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다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표본 규모 축소에 따라 관측치가 매우 작아질 위험이 높으므로, 가중 표집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는 등 비용 추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표집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는 IV장에 제시하였다.

4) 심층면담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 20여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가구 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1-2-2〉 심층면담 인원

	외별이	맞벌이	전체
저소득층	6	-	6
중산층	6	6	12
농촌지역	1	1	2
전체	13	7	20

단위: 명

5)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방법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표 1-2-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회차	자문 분야	연구분야
1차	설문지 전문가 자문	보육, 유아교육
2차	연구내용 검토	사회복지 2인, 소비자경제, 경제
3차	정책 실무 자문	유아교육 정책실무자 2인
4차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검토	보육, 사회복지, 경제
5차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검토	교육, 유아교육, 보육
6차	정책 자문	유아교육, 보육 2인

다. 수행 체계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I-2-1]과 같다. 본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도 그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방법	연구내용	세부 내용	보고서 구성
문헌연구	2013~2016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 1~3차년도 연구 결과 『전국보육실태조사』 연구 결과	⇒ II 장 1절 ⇒ II 장 1절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현황	국내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현황 및 변화 국내 교육·보육 비용 지원 재정 변화 추이 국외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현황 (국가사례 : 네덜란드, 스웨덴)	⇒ II 장 2절 ⇒ II 장 2절 ⇒ II 장 3절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노동패널자료(7차~17차)자료 분석	⇒ III 장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2016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 및 추정	2016년 영유아가구 및 아동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2016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	⇒ IV 장 ⇒ IV 장
	영유아 가구의 정책 인지 및 선호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V 장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제도 개선점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점 모색	⇒ VI 장
↓ ↓ ↓ ↓			
정책 제언			⇒ VI 장

[그림 1-2-1] 연구 수행 체계

3.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가. 연구범위

본 연구는 영유아(미취학 아동)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양육비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용이라 함은 실질적인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지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로, 유치원 등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비(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18) 혹은 표준보육비용과도 다른 개념이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1~3차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1~3차년도 안에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다 최근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몇 개의 주요 용어와 새롭게 추가된 용어에 대한 정의만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용어의 정의는 1~3차년도 보고서의 용어의 정의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및 교육·보육 비용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교육·보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영어 학원이나 놀이학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것, 시간제 학원 혹은 학습지와 같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양육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표준보육과정 혹은 누리과정과 같은 정규 교육·보육 서비스와 둘째, 정규 교육·보육 과정 이후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시간 연장형 보육,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특성화활동과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는 선택적 교육·보육 서비스, 셋째,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거나 시간제 학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사교육 서비스, 넷째, 가정 내 양육을 위해 개별 인력을 활용한 개별 돌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시간제 학원 등의 사교육 서비스와 개별 돌봄 서비스는 현재 반일 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무관하게 복수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I-3-1] 과 같다.

한편,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서 영유아 1인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은 가구 내에 있는 모든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반일 이상 서비스 이용 기관			개인양육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정부지원금 형태		보육료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지원)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정규 교육·보육비	보육비 기타비용	수업료 기타비용	X	
	선택적 교육·보육비	시간연장형보육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방과후 특성화활동		
사교육 이용비용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	X		기관이용비 방과후과정, 특별활동비	X
	시간제 사교육비			시간제 학원(문화센터 등 포함), 학습지, 개인·그룹지도, 통신교육 등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개인 양육 서비스(혈연, 비혈연 돌봄 포함)			

- 주: 1) 정규 교육·보육서비스에 포함된 기타 비용은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으로 구성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와 개별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의 중복 이용을 고려한 도식임.

[그림 1-3-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2016년 실태조사 기준)

2) 선택적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보육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이용하긴 하나 정규 교육·보육 과정에 속하지 않은 추가적인 교육·보육 활동에 대해 수익자(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선택적 교육비는 어린이집의 경우 야간 돌봄이나 주말 돌봄과 같은 시간 연장형 보육,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같이 정규 교육·보육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주로 학습에 목적을 두고 오후 시간 중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인 특별활동비(어린이집의 경우)와 방과후 특성화활동비(유치원의 경우) 등을 포괄한다.

3) 영유아 사교육비 및 시간제 사교육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중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정부의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단, 가정 내 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은 사교육비에서 제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보육 이용비용,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학습지 및 교재교구 활용 교육 이용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교육 이용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사교육을 반일 이상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제 사교육비'로 구분하였다. 시간제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학습지 및 교재교구 활용 교육 이용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 교육 이용비용 등이다.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시간제 사교육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비용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지만 부모의 선택에 의해 비용이 지출되는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비를 사교육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은 직전년도 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의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양미선 외(2013) 혹은 양미선 외(2014)의 비용 구분 방식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47)은 초중등 등 기타 학령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교육 비용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그룹 지도, 시간제 학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이용비용만을 포함하고,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비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특성화활동비가 시간제

학원 및 학습지 등의 사교육 서비스를 대체하는 교육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보다 최근의 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4) 반일제 이상 학원

반일제 이상 학원은 미취학 영유아에게 주중 매일 반일 이상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의미한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은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5)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지원 정책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실시 시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나정, 2014: 52~53). 나정(2014: 52~53)에 따르면, 무상 교육·보육 정책은 1999년 이전에 이미 수립되고 법제화되었으나, 정책의 시행은 농어촌지역 만 5세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였다. 이후 2001년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비·보육비’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4년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만3·4세아 차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만0·2세와 만5세에 대해 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3년도에는 만3·4세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 계층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2년도 이후의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통칭하는 것이다. 2012년 이후의 정부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맥락에서 전 계층 지원 확대로 보는 경우(나정, 2014), 무상 보육정책으로 일괄하여 칭하는 경우(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 전윤정, 2014), 누리과정 지원금에 한해 무상보육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한 경우(민연경·장한나, 2015), 누리과정 재정지원 정책으로 정의한 경우(신하영, 2013)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제공은 2012년 이전에도 실시되고 있었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보육”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및 양육수당지원이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

보육 지원 정책”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2013년도 이후 모든 연령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 정책 변화는 “전 계층 전 연령 무상 유아교육·보육지원 정책”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 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등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금 변화에 대해서는 II장 2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연구 배경

1.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

이 절에서는 이전에 수행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I)~(III) 연구에서 도출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현황과 2015년도에 조사된 국가승인통계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1~3차년도 연구 요약

본 절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행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I)~(III)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 지출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는 횡단조사로 표본이 매해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 결과 수치의 증감을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 증감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특히, 2015년도 3차년도 연구는 조사 기준 시점이 5월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납입주기와 비용 등을 질문하여 월평균 한 이전 조사와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3차년도 연구는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2.9%로 1~2년차 연구에 비해 적었으며, 400만원 이상이 31.3%로 1년차 17.5%, 2년차 21.9%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다.

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추이

가) 정규 교육·보육비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비용을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9,800원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3세 이상의 경우에는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의 보육비용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한 결과는 2013년도에 비해 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증가로 그에 따른 보육료 지불 비율

이 늘어난 것에서 유추(양미선 외, 2014: 88~89)할 수 있으며, 2015년의 결과는 다른 년도와 다른 표집에 따른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표 II-1-1〉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43.1	52.9	52.0
0세	14.1	14.5	24.2
1세	26.1	32.9	39.3
2세	35.7	42.7	48.5
3세	55.0	71.6	63.5
4세	54.2	58.7	54.7
5세	52.5	59.5	48.7
<i>F</i>	39.2***	64.5***	80.2***

*** $p < .001$.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94.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90.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08.

〈표 II-1-2〉 유치원 정규 교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25.4	167.9	107.7
3세	136.5	168.9	103.4
4세	128.2	170.4	105.2
5세	116.3	165.2	112.1
<i>F</i>	31.9*	0.5	-

* $p < .05$.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2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15.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90.

유치원 교육비용은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연도별 추이 경향과 유사하였다. 2014년에는 연령별 최대 4만 8,900원(5세)에서 최소 3만 2,400원(3세)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2014년의 조사 대상 중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유치원에 지불하는 교육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양미선 외, 2014: 114). 반면, 2015년에는 2013년보다도 더 유치원 교육비용의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유치원 교육비용의 평균이 이전 년도들에 비해

감소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평균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3세 이상의 경우 감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나)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의 평균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5만 3천원, 2014년에는 5만 6,900원, 2015년에는 6만 2,700원으로 2013년에 비해 9,700원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활동 과목에 지불되는 비용이 매년 오름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해마다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이 줄어들었는데 2013년에는 31.0%, 2014년에는 23.3%, 2015년에는 8.8%로 한자리 아래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53.0	56.9	62.7
0세	-	-	-
1세	38.5	45.5	-
2세	49.7	52.5	58.4 ¹⁾
3세	55.3	61.4	61.9
4세	57.5	56.8	67.8
5세	58.5	61.3	66.2
<i>F</i>	17.1 ^{***}	17.6 ^{***}	-

^{***} $p <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97.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11.

〈표 II-1-4〉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67.0	74.8	83.5
3세	62.8	63.7	79.8
4세	69.1	74.6	77.7
5세	67.5	80.6	89.8
<i>F</i>	0.8	5.7 ^{**}	-

^{**} $p < .01$.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2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20.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95.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드는 평균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2015년에는 8만 3,500원(2014년 7만 4,800원, 2013년 6만 7천원)으로 2013년에 비해 1만 6,500원 증가했다. 이는 특성화프로그램의 이용 단가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 어린이집·유치원 총 이용비용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의 산출은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어린이집에 내는 총 비용으로 순 보육료를 포함하여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7종의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와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을 근거로 한 반면, 2015년에는 응답자가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입한 것을 토대로 산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의 연령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5년에는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총비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2013년,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5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월별, 분기별 등 다른 형태로 납입되고 있는 이용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5〉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83.0	99.4	87.6
0세	14.1	14.5	-
1세	37.9	45.6	-
2세	73.9	86.8	65.7
3세	104.1	131.1	101.8
4세	109.1	112.1	104.2
5세	107.9	118.8	97.4
<i>F</i>	119.5 ^{***}	150.9 ^{***}	23.0 ^{***}

*** $p <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04.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15.

유치원 총 이용비용의 산출은 어린이집의 총 이용비용과 마찬가지로 2013년과 2014년에는 정규 교육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종일반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 비용과 방과 후 과정 특성화활동 교육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되어 각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반면, 2015년에는 응답자가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 과정의 모든 비용(교육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합해서 총액을 기입하도록 한 금액을 근거로 유치원 총 이용비용을 산출하였다. 연도별 경향을 보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의 연령별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2015년에는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제시한 어린이집의 결과와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1-6〉 유치원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67.3	224.9	157.5
3세	174.5	213.7	137.1
4세	171.9	231.6	153.8
5세	158.9	224.5	173.1
<i>F</i>	1.5	1.5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33.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25.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99.

2) 반일제 이상 학원 서비스 비용 추이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선교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59만 9,600원, 2014년에는 85만 7,100원으로 25만 7,500원 증가한 데 반해,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만 2,600원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년도에 표집된 대상 유아가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 어떤 반일제 이상 학원 서비스 이용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들이 2014년에는 조사대상의 2.6%, 2015년에는 전체 조사 대상 3,075명의 1%인 31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해석 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세의 연도별 월평균 비용을 보면 2013년에는 73만 6,400원, 2014년에는 93만 6,400원으로 20만원 증가한 반면, 2015년에는 17만 1천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는 반일제 이상 유사 교육·보육기관 서비스 비용이 2015년에는 감소되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5세의 연도별 월평균 비용의 추이에 대한 해석은 조사된 유아가 다니는 기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3년에는 조사된 15명의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 영어학원 62.5%, 놀이학원 25.0%, 선교원 등 20.2%였으며, 2014년에는 14명의 대상 유아 중 영어학원 61.5%, 놀이학원 38.5%로 전년도에 비해 교육비가 비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유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15년의 17만 1천원은 1명의 유아만이 선교원을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I-1-7〉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599.6	857.1	584.5
1세	250.0	-	
2세	423.6	325.7	568.6 ¹⁾
3세	432.0	788.2	641.8
4세	667.1	883.0	788.8
5세	736.4	936.4	171.0
<i>F</i>	3.0 [*]	9.2 ^{***}	-

* $p < .05$, *** $p <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4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34.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19.

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추이

가) 학원 등 시간제 기관 교육비

시간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주당 횟수 및 시간 등 주기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기관을 이용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는 8만 7,200원, 2014년에는 10만 2,800원으로

1만 5,600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10만 9,6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0원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세의 경우 2014년(4만 4,800원)에 비해 2015년에는 9만 8,700원으로 5만 4,900원 증가함으로써 다른 연령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1-8〉 시간제 기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87.2	102.8	109.6
0세	36.4	38.3	-
1세	45.9	44.8	98.7
2세	79.5	66.3	76.5
3세	73.9	71.1	96.5
4세	92.0	102.5	109.8
5세	113.0	133.2	116.1
<i>F</i>	27.8***	44.5***	-

*** $p < .001$.

- 자료: 1) 양미선 외 (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4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39.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20~121.

나) 개인·그룹 지도 교육비

개인·그룹 지도를 받는데 드는 월평균 비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에는 12만 8,200원, 2014년에는 12만 2,200원, 2015년에는 9만 4천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세, 3세, 5세의 연령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I-1-9〉 개인·그룹 지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28.2	122.2	94.0
0세	-	-	41.3
1세	109.5	55.0	79.6
2세	114.7	100.1	75.5
3세	86.0	83.4	88.7
4세	137.5	111.2	92.6
5세	153.2	140.4	110.4
<i>F</i>	1.5	2.1*	-

* $p < .05$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5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47.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20~121.

다) 학습지 이용비용

학습지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마다 6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이용 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1-10〉 학습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63.1	62.5	67.5
0세	79.6	37.5	40.0
1세	63.3	40.9	58.8
2세	54.4	40.8	64.3
3세	55.0	48.3	65.1
4세	62.1	69.1	68.4
5세	72.0	73.8	70.3
<i>F</i>	6.4 ^{***}	28.2 ^{***}	-

*** $p < .001$.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64.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53.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20~121.

4)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추이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의 연도별 추이는 2013년 45만 6,700원, 2014년 52만 7,900원으로 7만 1,200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만 4,3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만 3,600원 감소했다.

〈표 II-1-11〉 개별 돌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456.7	527.9	204.3
0세	585.4	730.2	394.0
1세	338.5	484.6	307.0
2세	460.8	541.8	164.2
3세	471.8	541.0	172.8
4세	313.8	410.1	110.8
5세	431.9	375.5	196.4
<i>F</i>	3.1	6.0 ^{***}	-

* $p < .05$, *** $p < .001$.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70.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63.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p.124.

나. 2015년 보육실태 자료 분석

이 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의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내용인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항의 내용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16)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이는 연속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추정연구(III)'의 조사방식⁶⁾ 차이로 인해 조사 값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 값을 통해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1)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총비용의 월평균 비용은 12만 2,100원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0세아의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3만 6,900원이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증가하여, 5세의 경우 21만5,2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1-12〉 영유아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2015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천원(명), %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122.1	229.5	(3,560)	3.0
0세	36.9	180.5	(867)	0.7
1세	59.1	171.4	(566)	1.3
2세	91.7	177.5	(597)	2.3
3세	147.8	238.8	(524)	3.8
4세	175.8	246.3	(541)	4.4
5세	215.2	284.3	(465)	5.3
<i>F</i>			58.0 ^{***}	

^{***} $p < .001$.

주: 1) 교육·보육 비용은 유아교육·보육비, 시간제학원 이용비용, 개인 지도 및 학습지 이

- 6) 조사 시점(2016년 5월 기준) 당시의 지출 비용을 조사함에 따라, 연간 비용을 조사하여 월평균으로 산출한 I~II차년도 및 IV차년도 연구와 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

용비용, 개별돌봄서비스 등을 합산한 비용임.

2) 가구소득대비 비율: 가구소득 모름/무응답과 0원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115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어린이집·유치원의 월 이용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용이다.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평균 9만 6,4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2.7%에 해당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6만 1,5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1.9%에 해당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평균 13만 5천원으로 가구소득대비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3〉 기관별 영유아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보육·교육기관 이용 전체 영유아		
	평균	영유아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96.4	2,284	2.7
어린이집	61.5	1,497	1.9
유치원	130.5	742	3.5

주: 1) 가구소득대비 비율: 가구소득 모름/무응답과 0원은 분석에서 제외함.

2) 현재 기관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134, p.180, p.296 표를 재구성.

보육·교육기관의 특별활동 과목별로 월평균 이용비용은 평균 2만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F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기타		
미술	24.5	15.6	5.0	175.0	22.6	25.6	65.8	48.9	14.6***	(853)
음악	20.9	12.7	4.0	150.0	20.0	21.3	32.3	-	4.0*	(905)
체육	22.3	15.2	3.0	166.0	21.6	21.8	72.5	39.7	23.2***	(1,106)
과학	20.3	18.8	4.0	175.0	16.6	20.9	70.8	-	17.7***	(169)
수학	19.7	13.9	4.0	100.0	17.8	19.1	44.6	-	11.8***	(202)
한글	20.4	13.7	4.0	88.0	19.2	19.2	48.6	-	21.8***	(352)
컴퓨터	24.0	8.7	10.0	50.0	25.4	22.3	-	-	0.4	(14)
교구	22.6	13.2	3.0	150.0	20.6	25.0	62.6	-	7.6***	(537)
한자	21.7	18.4	4.0	84.0	21.1	22.0	30.0	-	0.2	(59)
영어	28.7	19.4	5.0	166.0	25.7	32.9	77.8	68.7	26.8***	(1,044)
외국어	20.7	10.9	4.0	50.0	25.2	16.7	-	-	3.6	(16)
기타	26.7	18.5	3.0	120.0	21.0	32.6	120.0	-	24.7***	(149)

* $p < .05$, *** $p < .001$

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144

3) 반일제 이상 학원 월평균 비용 및 추가비용

반일제 이상 기관의 월평균 비용을 순보육·교육비와 추가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반일제 학원의 월평균 전체 비용은 43만 4,300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교육·보육비가 35만 4,400원이었고, 추가 비용이 7만 9,900원이었다.

〈표 II-1-15〉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전체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434.3	354.4	79.9	(41)	9.3

주: 보육료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329.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영어, 과학, 교구 순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II-1-1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의 특별활동 비용

단위: 천원

특별활동 비용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평균	60.0	32.3	60.5	70.8	44.6	48.6	-	62.6	30.0	73.2	-	120.0
표준편차	25.1	15.3	20.6	19.1	37.7	14.6	-	90.8	-	46.3	-	-
최소	35.0	12.5	10.0	50.0	12.5	12.5	-	25.0	30.0	10.0	-	120.0
최대	120.0	50.0	80.0	100.0	100.0	80.0	-	150.0	30.0	150.0	-	120.0

주: 보육료 모릅/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326.

4)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비용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10~1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1만 6,8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53.5%로 가장 많은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10~15만원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다. 시간제 학원 이용 평균 비용도 영아는 6만 8,700원이었으며, 유아는 12만 4,800원으로 영아의 2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 원미만	15~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0.8	21.6	34.4	10.2	7.4	5.7	100.0(510)	116.8
영아	53.5	24.9	11.8	3.9	5.0	0.9	100.0(80)	68.7
유아	15.3	21.1	38.1	11.3	7.7	6.5	100.0(430)	124.8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370

한편, 학습지 등 개별 교육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예체능 프로그램이 월평균 14만 2,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 9만 9,600원, 학습지 7만 4,600원, 통신교육 3만 9,300원 순이었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평균 월평균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II-1-18〉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학습지	평균 (수)	67.4 (44)	75.3 (409)	160.0 (1)	64.1 (11)	66.5 (32)	61.7 (65)	66.0 (117)	83.6 (227)	74.6 (453)
예체능	평균 (수)	10.0 (1)	145.1 (40)	-	-	10.0 (1)	89.0 (5)	127.4 (13)	174.6 (22)	142.6 (41)
교재 교구	평균 (수)	54.2 (17)	115.2 (39)	84.2 (2)	72.4 (3)	41.4 (12)	115.2 (15)	102.9 (11)	122.5 (13)	99.6 (56)
통신 교육	평균 (수)	30.0 (2)	41.6 (7)	-	-	30.0 (2)	34.0 (3)	44.2 (2)	40.0 (2)	39.3 (9)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378

5) 개인양육지원 비용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1.4%로 가장 높고, 정기적인 현금 지불이 30.7%이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 지불 및 현물 지불은 10.0% 이내로 나타났다. 양육지원자 유형에 따라서는 조부모보다 친인척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비동거 친조부모에게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44.6%로 조부모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표 II-1-19〉 혈연·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적 현금 지불	비정기적 현금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함	계(수)	$\chi^2(df)$
혈연양육지원자(전체)	30.7	5.8	2.2	61.4	100.0(373)	27.8(15)*
동거 친조부모	18.9	8.0	-	73.2	100.0(96)	
동거 외조부모	30.2	8.1	1.1	60.5	100.0(86)	
비동거 친조부모	44.6	4.0	0.9	50.5	100.0(79)	
비동거 외조부모	29.3	3.6	7.0	60.1	100.0(92)	
동거 친인척	48.0	-	-	52.0	100.0(4)	
비동거 친인척	45.1	-	-	54.9	100.0(16)	
비혈연양육지원자(전체)	94.7	4.7	0.5	-	100.0(31)	

* $p < .05$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350 재구성함.

2.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및 변화

이 절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현황과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비 부담 완화가 2004년도에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부터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가구에 대해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현금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이 대표적이다.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 지원은 초기 지원 배경에서는 다른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었으나 정책변화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일원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영유아가구 지원 사업으로 ‘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사업’과 ‘나.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가구 지원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표 II-2-1〉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지원 정책 개요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사업
영유아 가구(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정 내 양육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가. 0-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1) 교육·보육비용(유아학비·보육료)지원 정책 변화 개요

영유아 가구 부담 교육·보육비용 지원정책은 정책변화 특성상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분야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 총 2개 부처의 정책사업의 추이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유아교육분야 정책 변화

먼저 교육부의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2005년까지 5세 아동 100% 취학전 교육”을 제시하고, 도서벽지 및 저소득층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여 이를 목표로 유아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나정, 2014: 52에서 재인용).

1997년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아무상교육을 법제화하였고, 동시에 영유아보

육법에서도 취학 직전 1년 어린이집 보육을 무상 실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나정, 2014: 52). 이후 1998년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법조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계승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였다(장명림·황성온·김미나, 2012: 26). 1999년에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5세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였다(나정, 2014: 53). 이후 2001년에는 농어촌 지역을 벗어나 저소득 자녀 유치원 학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제도 명칭도 “5세아 무상교육비 보육료 지원”으로 개칭하였다(나정, 2014: 53).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만5세 무상교육비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로, 만 3-4세 아동에게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다(나정, 2014: 53).

2011년에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신 맞벌이 가구의 지원 대상을 확대되었으며,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 종일반비 지원이 실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5). 2012년에는 5세 교육비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전 소득계층이 지원받게 되었고(교육과학기술부, 2012: 3), 3-4세 교육비 지원은 명칭이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7). 또, 2012년에는 유아교육법의 유아무상교육대상이 취학 전 3년으로 확대 개정되었다(나정, 2014: 52). 이후 2013년에는 누리과정 지원이 3-5세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 소득계층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3). 2013년 이후로는 전 계층 전 연령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즐거운카드/아이사랑카드로 일원화되어 지원되게 되었다(교육부, 2015: 6).

〈표 II-2-2〉 영유아 가구 유아학비 지원 정책 변화

연도	정책내용
1994	[정책] 교육개혁위원회 “2005년까지 만5세 아동 100% 취학전 교육 목표로 저소득층 유치원무상교육 실시”
1997	[법] 초중등교육법 유아무상교육 법제화: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순차 실시
1998	[법] 유아교육진흥법 무상교육 명시
1999	[정책]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일환으로 농어촌 5세 아동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질 제고 방안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표 II-2-2 계속)

연도	정책내용
2001	[정책]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확대 결정 5세아 무상교육비 보육료 지원 명칭 개칭
2004	[정책]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법] 유아교육법 제정
2011	[정책]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2012	[정책]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도입(만5세) 만3-4세 교육비 → 유아학비 명칭 변경 [법]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2013	[정책]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확대실시(만3-5세)
2015	[정책]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카드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 자료: 1) 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 분석 :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p.52~53.
 2) 장명림·황성운·김미나(2012). 2013-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p.25~26.
 3)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p.5.
 4)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p.3.
 5)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p.3.
 6) 교육부(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p.6.

나) 보육분야 정책 변화

한편, 보육분야에서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사업 연혁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보육료 지원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시작한 1921년부터 정책적 관심사였다. 이후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7).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 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된 기관이 운영되다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면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1987년에는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탁아사업과 1989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 사업이 분리되어 실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7). 그러나 아동보육시설이 여러 부처에 의해 관리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에 기초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보육사업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때부터 단순 탁아가 아닌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7~8).

1991년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부담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정부의 정책 목표로 한 시점은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 1991년에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부터이다(서문희·이혜민, 2014: 50). 보육료 지원초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50).

〈표 II-2-3〉 영유아 가구 보육료 지원 정책 변화

연도	정책 내용
1991	[법] 영유아보육법 제정: 보육대상은 요보호 영유아임.
1992	[정책] 저소득층 중심 보육료 차등지원
1995	보육사업 확충계획 시행
2003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계층 확대 지원
2004	[법]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책임을 명시 [정책] 국정과제 상정, 제1차 육아지원정책 실시 [정책] 보육료 지원 확대 실시,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까지
2005	[정책] 보육료 전액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법정 저소득층까지 [정책] 두자녀 보육료지원 실시
2006	[정책] 보육료 전액지원: 법정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2007	[정책] 보육료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
2009	[정책] 일반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영유아가구에게 지원 단가 100% 지원, 평균소득 50% 이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부분 지원.
2012	[정책] 0-2세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2013~ 현재	[정책] 0-2세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전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실시 [법] 영유아보육법 제 34조(무상보육) 1항에 영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자료: 1)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안내. p.7~19.

2)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p.17~26.

3)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제정 증가 추이와 효과 : 2004-2014. p.50~57.

4)보건복지부(2012a). 보육사업안내. p.278 & p.298.

5)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286.

6)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 분석 :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p.52.

1992년~2003년에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복지 보호대상자,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연령별 소득수준별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50). 한편, 2004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8).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보호 영유아가 주 보육대상이었으나, 영유아보육법에서 포함하는 보육대상은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5년 법정저소득층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받도록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으며,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최성은·우석진, 2009: 18~23). 이후 2006~2007년에는 점차 지원대상의 소득 구간을 확대해나가되, 금액은 차등 지원하였다(최성은·우석진, 2009: 23~24). 한편, 2009년도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일반 영유아로 바뀌는 전환점이 었다(서문희·이혜민, 2014: 51). 하지만, 2009년도의 보육료 지원은 대상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었다(최성은·우석진, 2009: 26). 2009년 이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2012년도에는 0-2세 영아 전 계층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되었고(보건복지부, 2012a: 298), 만5세에 한해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278). 이후 2013년부터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되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아에 대한 보육도 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나정, 2014: 52).

2)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및 지원 대상 변화 추이

유아학비 지원단가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단가가 기관 설립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별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 할 경우, 지원 단가는 <표 II-2-4>와 같다. 교육부 각 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1년 3-5세 전부 59,000원이고 2012년에는 공립유치원 지원 단가 30,000원만 제외하고, 2011년과 동일하였다. 2013년에는 3-5세 모두 60,000원이었고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아동이 사립유치원을 취원할 경우, 2011년에는 만3세 197,000원이고, 만4세 177,000원, 만5세 177,000원이었다. 2012년에는 만3세 197,000원, 만4세 177,000원, 만5세 200,000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만3-5세의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모두 220,000원으로 동일하였다.

〈표 II-2-4〉 유아학비 지원단가 추이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공립 유치원	만5세	59,000	국립: 59,000 공립: 30,000	60,000	60,000	60,000
	만4세	59,000	59,000	60,000	60,000	60,000
	만3세	59,000	59,000	60,000	60,000	60,000
사립 유치원	만5세	177,000	200,000	220,000	220,000	220,000
	만4세	177,000	177,000	220,000	220,000	220,000
	만3세	197,000	197,000	220,000	220,000	220,000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p.7.

2)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3)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4) 교육부(2014).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5) 교육부(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표 II-2-5〉 연도별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2006~2015)

단위: 천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6	350	308	254	158	158	158
2007	361	317	262	180	162	162
2008	372	327	270	185	167	172
2009	383	337	278	191	172	172
2010	383	337	278	191	172	172
2011	394	347	298	197	177	177
2012	394	347	286	197	177	200
2013	394	347	286	220	220	220
2014	394	347	286	220	220	220
2015	406	357	295	220	220	220

주: 보육료 지원금액은 정부지원시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실시,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실시.

자료: 1)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안내. p.179. 2)보건복지부(2007). 보육사업안내. p.295.

3)보건복지부(2008). 보육사업안내. p.263. 4)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227.

5)보건복지부(2010a). 보육사업안내. p.254. 6)보건복지부(2011a). 보육사업안내. p.257.

7)보건복지부(2012a). 보육사업안내. p.299. 8)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286.

9)보건복지부(2014a). 보육사업안내. p.310. 10)보건복지부(2015a). 보육사업안내. p.272.

어린이집 이용료인 보육료 지원 단가는 연령별로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각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는 2006년에 0세 35만원, 1세 30만8천원, 2세 25만4천원으로 연령별로 지원단가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2008년에는 3세 18만5천원, 4세 16만7천원, 5세 17만2천원으로 4

세의 지원단가가 가장 낮았으나, 2009년~2011년까지는 4·5세의 지원단가가 동일하였다. 이후 5세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된 2012년도에는 5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20만원이었으며, 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해졌다. 2013년 누리과정이 3·5세 모두에게 확대 실시됨으로써, 3·5세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또한 22만원으로 동일해졌다. 2014년에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 반면, 2015년에는 3·5세의 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과 함께 동결되었고, 0세 40만6천원, 1세 35만7천원, 2세 29만5천원으로 0·2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인상되었다.

한편, 2013년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아학비·보육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었다. 다시 말해,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결정짓는 소득 기준점이 자녀 연령에 따라 달랐다. 즉, 5세의 경우 4세 이하 영유아와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점이 달랐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학령기 직전 5세 유아의 생애출발선 상의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5세 무상 유아교육이 강조되어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재정 변화 추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의 경우,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후 2008년부터 유아학비 지원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조하나·박은혜, 2009: 30). 즉, 유아학비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지원 예산은 최근으로 올수록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부터 유아학비 지원예산은 4,564억원에서 2006년 8,242억원, 2008년 1조121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10년 1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2010년의 2배 규모에 해당하는 3조212억원까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증가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92). 2013년에는 4조1,397억원으로 전 연령 전 계층 무상교육으로 인해 증가폭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서문희·이혜민, 2014: 92). 한편,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의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II-2-1] 참조).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는 2004년 88,200명에서 2006년 229,100명, 2008년 280,000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459,500명, 2013년 661,900명까지 증가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 61).



주: 2012~2014년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이 포함되고, 2014년도는 예산액이며, 2013년 이전은 결산액임.

자료: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재정 증가추이와 효과 : 2004-2014. p.61과 p.92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그림 II-2-1]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및 유아교육 지원 재정 규모

한편, 보육료 지원 예산과 지원아동 수 추이를 보면 [그림 II-2-2]와 같다.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예산은 2004년 1,524억원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09년 1조2,822억원으로 1조원이 넘었고 2012년 2조3,913억원, 2014년 3조3,330억원까지 이르면서 증가 폭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서문희·이혜민, 2014 : 85).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아동 수 또한 증가하였다. 2004년 279,9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 점차 증가하여 2009년 779,800명 2012년에 134,590명, 2013년 147,110명까지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증가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 60).



자료: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재정 증가추이와 효과 : 2004-2014. p.60과 p.85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그림 11-2-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재정규모 및 지원 아동 수

4) 2016년도 영유아 가구의 기관 이용 시 비용 지원 정책 현황

가) 2016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2016년도에도 2013년 이후 전 연령 전 계층에게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실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생애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6: 1). 유아학비 및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전자카드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이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에 대한 비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영유아 부모가 기관이용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 수혜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더라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유지되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양육수당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교육부, 2016: 3).

〈표 II-2-6〉 2016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생애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비 부담 경감																															
선정 기준	-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며,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진행함 - 영유아 1인당 월 지원 단가는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다름 - 지원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정지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가능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 정부지원단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td> <td>국·공립</td> <td>사립</td> </tr> <tr> <td>교육과정</td> <td>6만원</td> <td>22만원</td> </tr> </table>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 정부지원단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rowspan="3"></th> <th colspan="3">어린이집(보육료)</th> <th rowspan="3">장애아동</th> </tr> <tr> <th colspan="3">일반아동</th> </tr> <tr> <th>연령</th> <th>중일/야간</th> <th>24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정규 과정</td> <td>만 0세</td> <td>430천원</td> <td>645천원</td> <td rowspan="4">438천원 (연령구분 없음)</td> </tr> <tr> <td>만 1세</td> <td>378천원</td> <td>567천원</td> </tr> <tr> <td>만 2세</td> <td>313천원</td> <td>469.5천원</td> </tr> <tr> <td>만 3-5세</td> <td>220천원</td> <td>330천원</td> </tr> </tbody> </table>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6만원	22만원		어린이집(보육료)			장애아동	일반아동			연령	중일/야간	24시	정규 과정	만 0세	430천원	645천원	438천원 (연령구분 없음)	만 1세	378천원	567천원	만 2세	313천원	469.5천원	만 3-5세	220천원	330천원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6만원	22만원																														
	어린이집(보육료)			장애아동																												
	일반아동																															
	연령	중일/야간	24시																													
정규 과정	만 0세	430천원	645천원	438천원 (연령구분 없음)																												
	만 1세	378천원	567천원																													
	만 2세	313천원	469.5천원																													
	만 3-5세	220천원	330천원																													

주: 0-2세 보육료 지원은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실시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며, 본 연구는 2016년 12월 기준 보육료 지원금을 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2016. 12.30일 인출).

2) 교육부(2016),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2016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는 일반아동기준 0세는 43만원, 1세는 37만8천원, 2세는 31만3천원, 3-5세는 22만원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7). 단,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3-5세 유아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관 운영비 등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 되는 점을 감안하여 6만원을 지원받는다(교육부, 2016: 1). 한편,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64만5천원, 1세는 56만7천원, 2세는 46만9,500원, 3-5세는 33만원이며, 장애 아동의 보육료는 연령에 무관하게 43만8천원이 지원된다8).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2016. 12.30 인출).

나) 2016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지원 정책

그 밖에 교육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유아학비 지원 이외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 한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6: 6). 이는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교육활동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유아에 해당한다(교육부, 2016: 7). 유치원 교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추가적인 기관이용에 대한 가계부담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업목적은 유아학비 지원과 동일하며, 지원금 산정 세부기준도 동일하다(교육부, 2016: 7). 지원 금액은 2016년에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아동 1인당 5만원, 사립유치원을 다닐 경우 월 7만원을 아동에게 지원한다(교육부, 2016: 1). 한편, 교육부(2016)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한 방과후 과정비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2-7〉 2016년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정책 현황

사업목적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3-5세 유아학비 지원대상자(1일 교육과정 8시간 이수자) 중 방과후과정 참여 아동에 한함.
지원내용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주관부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자료: 교육부(2016).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1과 p.6~7.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이 있다. 시간 연장형 보육료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시간연장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이다(보건복지부, 2016a: 297~299). 지원대상은 4개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297).

첫째, 시간연장 보육료는 이용시간이 주간보육(7:30~19:30)이후 19:30부터 24:00 자정까지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로, 최대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2016.12.30. 인출).

있다(보건복지부, 2016a: 297). 일반아동은 시간당 3천원, 장애아동은 4천원 지원 하며, 최대 일반아동은 월 18만원, 장애아동 월 24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a: 297). 둘째, 야간 보육료는 19:30부터 익일7:30까지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따른다(보건복지부, 2016a: 298). 단, 야간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간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298). 셋째, 24시간 보육료는 7:30부터 익일7:30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피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며, 24시간 지정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실시할 수 있고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a: 298). 마지막으로 휴일 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해당 아동의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a: 299).

〈표 II-2-8〉 2016년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시간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보육료	휴일보육료
사업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0-2세 보육료, 3-5세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보육료 지원아동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반 3,000원/장애4,000원	- 지원단가 0-5세보육료단가	- 지원단가 0-5세 보육료단가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보육료×150% (휴일어린이집 지정의 경우, 일보육료×100%)
	- 지원한도액 일반: 180,000원 장애: 240,000원	- 기준시간 19:30-익일7:30	- 기준시간 7:30-익일7:30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7:30) 동시이용	
	- 지원율 기준액×100%	- 지원기준 주간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이용할 경우만지원가능 (취학아동 원불가)	- 지원기준 부모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조손가정 등주간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한테 지원가능	
	- 지원시간 평일: 19:30-24:00 토: 15:30-24:00			
	- 지원한도시간 월 60시간			
기타	- 방과후보육료 지원 아동도 지원대상 추가	- 24시간 지정어린이집 에서만 실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실시	토요일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보육사업안내. p.297~p.299.

나. 가정양육수당

1) 가정양육수당 정책 변화 개요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아동수당이다.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9년 당시에는 24개월미만 영유아에 한해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되다가, 2013년도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84개월 미만 영유아로 지원 대상이 확장되었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⁹⁾). 처음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2009년도에는 저소득아동 중에서도 24개월 미만 영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339). 가정양육수당은 2011년에 지원 대상을 '만2세미만'에서 '36개월미만'으로 변경(보건복지부, 2012a: 7)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등록장애아동은 취학 전까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실시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전 연령 전 계층 영유아 가구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¹⁰⁾).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정책의 변화가 많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면, 2009년 가정양육수당제도 도입 초기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당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은 24개월 미만이었다(보건복지부, 2009: 245). 이러한 지원 대상 기준은 201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11년에는 지원 대상이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고(보건복지부, 2011a : 413), 지원금 또한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1a: 271).

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 (2016. 12.31 인출)

10)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 (2016. 12.31 인출)

〈표 II-2-9〉 영유아 가구 가정양육수당 정책 변화 추이

연도	내용
2008	12월.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2009	12월.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기준 명확화 양육수당 도입(저소득층 0-1세 아동대상)
2011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2012	농어촌 거주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별도기준 양육수당 지원
2013	양육수당 84개월 미만 전 계층 확대 실시

자료: 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i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 (2016. 12.31 인출).

- 2)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245 & p.339.
- 3) 보건복지부(2011a). 보육사업안내. p. 271 & 413.
- 4) 보건복지부(2012a). 보육사업안내. p.7.
- 5) 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302.

이후 가정양육수당 초기 지원동기인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가 실현되기까지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에는 84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2). 이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은 12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의 자녀는 10만원으로(보건복지부, 2013a: 302), 지원 대상 아동은 확대되었으나 지원금 수준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동일 시점 동일 연령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가정양육수당이 10만원~20만원 내외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0세아의 보육료 지원금은 40만6천원인(보건복지부, 2015a: 272)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은 20만원으로 20만6천원의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15a: 284). 1세아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금은 35만7천원(보건복지부, 2015a: 272), 가정양육수당은 15만원으로 20만7천원(보건복지부, 2015a: 284)으로 차이가 있다¹¹⁾. 하지만, 유아학비·보육료는 기관 이용에 따르는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 반해,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은 가정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보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아질

11) 물론 가정양육수당은 월령을 기준으로하고, 보육료 지원은 연령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시점에 따라 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수 있으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인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II-2-10〉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변화 추이

단위: 천명, 억원

	지원대상	지원연령	지원액
2009년~2010년	차상위 이하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2011년~2012년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2013년이후	전 계층	84개월 미만 초등 미취학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4개월 미만(미취학):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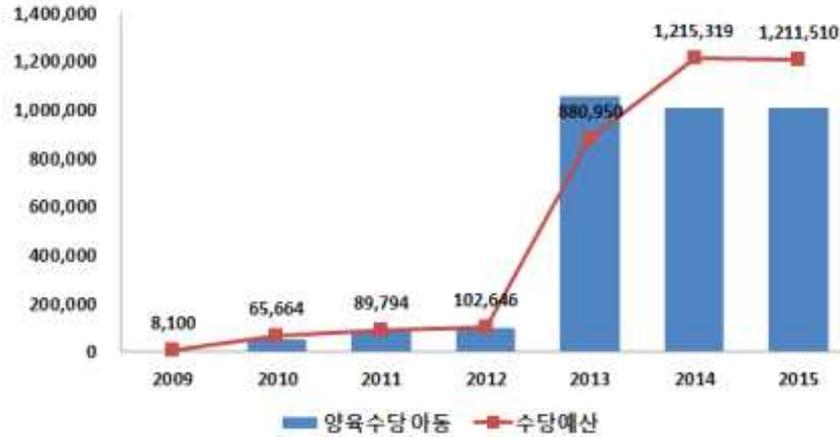
자료: 1)김수정(2015).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p.82의 내용을 재구성.
 2)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 p.245.
 3)보건복지부(2010a). 보육사업안내. p.269.
 4)보건복지부(2011a). 보육사업안내. p.271.
 5)보건복지부(2012a). 보육사업안내. p.313.
 6)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302.
 7)보건복지부(2015a). 보육사업안내. p.284.

2) 가정양육수당 재정 지원 추이

보건복지부의 각 년도 ‘보육통계’ 자료를 통해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51,838명에게 656억6,400만원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이 24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영아에서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영아로 확대된 2011년도에는 지원 범위가 89,756명, 897억9,400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02,653명, 1,026억4,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후 2013년도에는 84개월 미만 초등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 계층 영유아 가구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아동수 및 재정 규모도 크게 상승하여, 1,060,484명, 8,809억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었다. 2014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가 살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원 예산액은 2014년 1조2,153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43억6,900만원(38.0%)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2014년도 수혜 아동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높은 영아 자녀를 중심으로 양육수당 수혜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양육수당 아동	51,838	89,756	102,653	1,060,484	1,012,336	1,009,346
수당예산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1,211,510



- 자료: 1)보건복지부(2010b). 보육통계. p.191과 p.192.
 2)보건복지부(2011b). 보육통계. 양육수당sheet와 2012년 보육예산sheet.
 3)보건복지부(2012b). 보육통계. p.247과 p.150.
 4)보건복지부(2013b). 보육통계. p.237과 p.242.
 5)보건복지부(2014b). 보육통계. p.242과 p.249.
 6)보건복지부(2015b). 보육통계. p.250과 p.255.

[그림 II-2-3] 양육수당 예산규모 및 지원 아동 수

한편, 2015년 가정양육수당 자녀 연령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인구 3,187,718명 중 31.7%에 해당하는 1,009,346명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았으며, 이 중 0세 아동이 696,573명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영유아의 69.0%에 달했다(<표 II-2-11> 참조). 이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각 연령별 전체 영유아 수 대비 가정양육수당 지원율을 살펴보면, 0세아의 경우 80.8%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당해년도(2015년 출생아)의 경우에는 91.0%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0세(2014년 출생아)까지는 70.8%를 유지하다가, 자녀가 1세(2013년 출생아)가 되면 30.0%로 크

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세 영아의 13.6%만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았으며, 3세 이상에서는 8%내외의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5b: 235-250).

〈표 II-2-11〉 2015년 양육수당 지원 현황

	계	'15년생 (0세)	'14년생 (0세)	'13년생 (1세)	'12년생 (2세)	'11년생 (3세)	'10년생 (4세)	'09년생 (5세)
영유아 인구 수	3,187,718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447,817
지원 영유아 수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지원 영유아 수 대비 비율	100.0	38.3	30.7	13.1	6.6	4.0	3.8	3.6
연령별 영유아 인구 대비 지원율	31.7	91.0	70.8	30.0	13.6	8.4	8.0	8.0

주: 자녀의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보육통계. p.235와 p.250을 재구성.

이는 0세 이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정 내 양육이 여전히 가장 주된 양육방식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는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1세와 2세 영아의 가정양육수당 신청 또한 크게 감소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이는 어린 영아가 가정 내 양육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유아 부모의 행동 양태에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포함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이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제도가 보완되어야만 재정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2016년도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2016년 가정양육수당의 정책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2-12〉와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 12월말 기준)에 게시된 가정양육수당 안내문¹²⁾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영유아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장애아동

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6.12.31. 인출).

과 농어촌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비용 및 양육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36개월 미만은 20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아동 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낮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되며, 24개월 17만7천원, 36개월 15만6천원, 48개월미만 12만9천원, 이후 84개월까지 10만원이 지원된다.

〈표 II-2-12〉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목적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 연령기준: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 보유아동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경 신청 시, 아동 및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 - 출생이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월로 소급가능 - 지원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정지 - 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가능					
	<월령별 세부지원 금액>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12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미만	17.7만원
84개월 미만	10만원	만5세 미만 (최대 84개월)	10만원	36개월 미만	15.6만원	
				48개월 미만	12.9만원	
				84개월 미만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6. 12. 31. 인출).

3. 국외 영유아 가정 비용 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이 절에서는 국외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OECD국가의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들 국가를 사례로

살펴본 이유는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며, 스웨덴은 가족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연속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이전년도에 이미 연구가 수행된 나라는 국외 사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2차년도 연구¹³⁾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이 개관되어 있으며, 3차년도 연구¹⁴⁾는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의 영유아기 정부 재정 지원 정책과 영국, 미국, 호주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조사 사례가 개관되어 있다.

가. OECD 국가의 비용 지원 정책 현황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를 초래했으며 OECD 국가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정책적 지원을 줄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OECD, 2014: 11). 이러한 예로 OECD 국가 중 몇몇 국가는 2010년 이전에는 세금공제를 포함하여 아동 또는 가족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감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4: 47).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가족 지원 정책으로 가족 수당, 출산 휴가, 자녀 수당, 양육 수당, 세금 공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원을 늘리거나 감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는 저소득 가정에 일회성 급여를 지급했으며 프랑스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세를 감액한 대신 2014년부터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에게는 소득세를 증액시켰다. 호주,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은 수당 지급액을 동결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정부의 감축 조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OECD, 2014: 47). 구체적인 각 국가의 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는 <표 II-3-1> 과 같다.

13)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를 의미한다.

14)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를 의미한다.

〈표 II-3-1〉 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가족/아동/출산/양육 수당)

국가	급여의 유형	연도	자격 요건	급여 수준 또는 기간	프로그램 시작(+) 또는 종료(-)	세부사항
호주	다양	2013	-	-	+	관대함이 덜하거나 급여액 및/또는 소득 한도와 연계 없음. 유급 육아휴직 신규도입, 학령 자녀를 위한 수당 신규도입
오스트리아	가족수당	2009		+		일회성가족수당
	세금공제	2009		+		양육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캐나다	세금공제	2011		+		자녀에 대한 비환급(non-refundable) 공제 확대
	출산휴가	2012	-			채량에 따른 모성 및 부성 급여 유지
체코	소득세	2009	+	-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일시적 감액
	가족수당	2011/12		-		사회적 수당 폐지/부모 수당 감축
	출산휴가	2009		-		더 낮은 대체율
	출산수당	2011	-			좀 더 제한적이고 덜 관대한 방향으로 개정
에스토니아	세금혜택	2009		+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확대
	세금공제	2009		-		부가적 세제혜택 폐지
	가족수당	2011	-			유급 육아휴직과 병행 불가
	학자금대출	2009		-		학령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도
핀란드	자녀수당	2013		-		인플레이에 따른 조정 억제 (2013-15)
프랑스	가족수당	2009		+		일회성 가족 수당 보충
	소득세	2009	+			극빈층 세금 감액
	양육	2009/12	+	+		양육 바우처 일회성 확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 수당 접근성 확대
독일	가정양육 수당	2013			+	양육보조 없는 15-36개월 자녀를 둔 가정
그리스	출산휴가	2009	+			엄마가 민간부문 근로자인 경우 포함
	자녀수당	2012		+	+	새로운 자산조사적 급여
	가족수당	2012	-	-	-	대가족(세 자녀 이상) 수당 폐지
헝가리	가족 수당	2009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일회성 지급
	양육 제공	2009		+		저소득 가정으로 확대
	가족수당	2011		-		보편적 수당 일시적 동결
아일랜드	출산휴가	2009		+		더 높은 대체율
	양육	2009		+		유치원 무상교육(Free pre-school year) 연령 범위 제한 및 급여 감액
	자녀수당	2009	-	-		
이스라엘	가족 수당	2013		-		급여 감액 및 소득한도 도입
이탈리아	가족수당	2009		+	+/-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불 지급. 가족수당 일시적 증액
	출산수당	2009		+		일시 일시불 지급
	양육	2013			+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엄마들에게 양육 바우처 지급
일본	양육수당과 출산수당	2010-2012		+		금액 확대
한국	양육	2013	+			양육비 보조가 더 이상 소득조사적 아님
룩셈부르크	양육제공	2009		+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바우처 도입
네덜란드	양육	2013	-	-		지원 및 소득 한도 하향조정. 새로운 자산조사 도입

(표 II-3-1 계속)

국가	급여의 유형	연도	자격 요건	급여 수준 또는 기간	프로그램 시작(+) 또는 종료(-)	세부사항	
폴란드	가족수당	2012	+	+		급여수준 및 소득한도 상향. 2004년의 마지막 조정 이후 잠식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포르투갈	자녀수당	2009		+		저소득 교육수당을 모든 소득집단으로 확대	
		2010	-	-		교육수당확대 빈복 및 2008년부터 25% 급여 보너스	
		2011				소득한도 하향. 과지급을 줄이기 위해 평가 빈도수 늘림	
스페인	출산수당	2008-2010			+/-	출산수당(Birth grant) 2008년 도입, 2010년 폐지	
스웨덴	가족수당	2010		+		증액	
영국	자녀수당	2009		+		증액	
		2013		-		급여 수급에 대한 소득한도 도입	
		2009	-			소득한도 하향	
	세금공제	2011	-	+/-			자녀 요인 강화, 영아 요인 폐지, 좀 더 가파른 급여 철회
		2012	-				유자녀 부부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
	출산수당	2011-13			-		소득 변경에 대한 공제가 엄격해짐
		2011			-		"임신 중 보건" 수당 폐지
2011				-		세금공제 중 양육 요소가 비용의 70%로 삭감	
	2013	+				주당 15시간 무료 양육이 소외계층 또는 양육 중인 2세 자녀로 확대	

주: "-"는 관대함이 덜하다는 의미임. 즉, 프로그램의 취소, 자격요건 강화, 급여수준 하향, 연계 규정 등. "+"는 개혁이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p.47-48.

나. 국가 사례

본 절에서는 OECD 국가 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 일과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비용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PERFAR¹⁵⁾, 2016. 5)¹⁶⁾.

15) PERFAR은 Population Europe Resource Finder & Archieve의 약자이다.

16) PERFAR (2016. 5). Family policies: Netherlands(2014). <http://www.perfar.eu/policy/family-children/netherlands> (2016. 5. 18. 인출)

1) 네덜란드

가족 수당법(Family Allowance Act)은 1941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모의 수입에 따라 15세 이하를 둔 2자녀 이상인 근로자의 가정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최근에는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아동 연령에 따라서 가족 수당금이 상이하다. 그 외에 저소득 가정, 편부모 가정,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이 있으며 장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특별 수당이 있다(PERFAR, 2016. 5). 여기서는 아동 수당(Child benefit), 아동 버짓(Child budget), 보육 수당(Childcare benefi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아동 수당(Child benefit)

아동 수당은 아이¹⁷⁾를 키우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중 하나로 사회 보험 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으로부터 3달에 한 번씩 지급 받는다. 지급되는 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며(<표 II-3-2> 참조), 자녀가 부모와 살지 않거나, 장애아를 키우고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기본 요율(basic rate)의 2배에 해당하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0세에서 6세 미만이면 분기말에 197.67유로(한화 264,082원)를 받는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 2016.5a)¹⁸⁾.

〈표 II-3-2〉 네덜란드의 아동 수당(2016. 1. 기준)

단위: 유로(1€=1335.77원, 2016. 5. 19. 기준)

	0-5세	6-11세	12-17세
아동당	€197.67 (한화 264,082원)	€240.03 (한화 320,625원)	€282.39 (한화 377,208원)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5a). Child benefit.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leaflets/2011/10/20/q-a-child-benefit-information-for-parents> 에서 2016. 5. 18. 인출.

17)입양아, 수양 자녀, 의붓 자녀 포함한다.

18)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5a). Child benefit.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leaflets/2011/10/20/q-a-child-benefit-information-for-parents> 에서 2016. 5. 18. 인출.

나) 아동 버짓(Child budget)

아동 버짓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지원되는 정책 중 하나로 아동 수당 외에 부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으며 조세 및 세관 행정 수당사무소(Benefits Office of the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로부터 지급된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 2016.5b)¹⁹⁾. 대상 조건은 네덜란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실제 소득은 자녀수와 소득 하한선(income threshold)에 따라 달라진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 2016.5b).

다) 보육 수당(Childcare benefit)

보육 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수입과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 버짓과 마찬가지로 조세 및 세관 행정 수당사무소(Benefits Office of the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로부터 지급된다. 근로자, 구직자, 또는 시민 통합과정(civic intergration course) 중에 있는 자로써 자녀가 등록된 보육교사(registered childcarer)에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 2016.5c)²⁰⁾.

2) 스웨덴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이다. 유아학급(preschool class)부터 상위 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 해당하는 6~19세의 교육비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며 점심 급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다. 유아학교(förskola)의 교육비는 최대 SEK 1,287(한화 183,488원)²¹⁾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 수당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The official site of Sweden, 2016. 1. 4.)²²⁾.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 외

19)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 5b). Child budget. <https://www.government.nl/topics/child-benefit-schemes/contents/child-budget> 에서 2016. 5. 18. 인출

20)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 5c). Childcare benefit. <https://www.government.nl/topics/child-benefit-schemes/contents/childcare-benefit>에서 2016. 5. 18. 인출

21)SEK 1=142.57원(2016. 5. 19. 기준)

22)The official site of Sweden (2016. 1. 4.). 10 things that make Sweden family-friendly.

에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친화적인 정책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480일 동안 유급으로 지원되는 육아 휴직(Parental leave) 제도이다. 육아 휴직 시 부모는 390일(13개월)간 월급의 80%를 받게 되며, 2015년 기준 최대 SEK 37,083(한화 5,28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후 나머지 90일(3개월) 동안은 정액으로 지급받는다(The official site of Sweden, 2016. 1. 4.). 이 외에도 스웨덴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신 수당(Pregnancy benefit), 아동 수당(child allowance), 주거 수당(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이 대표적인 예이며,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Care of a sick child, VAB)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임신 수당, 아동 수당, 주거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임신 수당(Pregnancy benefit)

임산부가 육체적인 일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경우, 쉬운 일이나 덜 위험한 일로 옮길 수 있으며 임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적어도 정규 근로 시간의 1/4로 단축해야 한다. 임신 수당은 출산 예정일 전 60일째 날부터 받을 수 있고, 출산 예정일 전 11일째 날까지 지급된다. 대략 월급의 80%이지만, 일일 SEK 709(한화 101,082원)을 넘지 못한다(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c)²³⁾.

나) 아동 수당(child allowance)

아동 수당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재정 지원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자녀 수당이 더해져서 지급된다. 부모가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아동 수당을 공유할 수 있으며 매달 SEK 525(한화 74,849원)를 받고,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이 있는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에서 2016. 5. 19. 인출.
23)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c). Pregnancy benefit.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vantar_barn/graviditetspenning!/lut/p/a1/vZJfT4MwFMU_yx54JL3Q8mePMBW3KWq2xcELKaPD6ihdqUT36S3PZs5lpxu-3DT5nZ7Tg3K0RrmgPa-p5q2gu2HP_YLcXk2cZALzh-tjDJGPp0933o1zjwl6RjnKN0JL_YKyTSs0G06hWCdb0fGeWSAV76mWITHUWbFtFdxVTFvRUaKqKkiphQa2MaMU1051kQnBRW6DeS8Xfiu9Xg6Lc8AplEI AfEsexGRCwCbhbe0zY2PYwENcvA48ybCkxgIcmQh-5fBnQmYkgqOMGaDFmW8-Aft_GBi7FwNTQiBaxcl8ATFepuRyYgKidYJoFeKpu3g8P8PZqY81xeCv-30emQIPxf3QaP1PDZZNE-JPWxyW26Yp0tSmZQY29XRaPQFzLBhIA!!/dl5/d5/L0lDUmlTUSEhL3dHa0FKRnNBLzRKVXBDQSEHL2Vu/?keepNavState=true에서 2016. 5. 19. 인출.

경우에는 매달 SEK 1050(한화 149,699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아동 수당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녀수에 따른 아동 수당과 다자녀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표 II-3-3> 과 같다(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a).

<표 II-3-3>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수당(2016. 5. 19. 기준)

단위: SEK(SEK 1=142.57원, 2016. 5. 19. 기준)

자녀 수	부모 공동 양육권의 경우			부모 단독 양육권의 경우		
	아동수당	다자녀수당	총액	아동수당	다자녀수당	총액
1	SEK 525 한화 74,849	-	SEK 525 한화 74,849	SEK 1,050 한화 149,699	-	SEK 1,050 한화 149,699
2	SEK 1,050 한화 149,699	SEK 75 한화 10,693	SEK 1,125 한화 160,391	SEK 2,100 한화 299,397	SEK 150 한화 21,386	SEK 2,250 한화 320,783
3	SEK 1,575 한화 224,548	SEK 302 한화 43,056	SEK 1,877 한화 267,604	SEK 3,150 한화 449,096	SEK 604 한화 86,112	SEK 3,754 한화 535,208
4	SEK 2,100 한화 299,397	SEK 807 한화 115,053	SEK 2,907 한화 414,451	SEK 4,200 한화 598,794	SEK 1,614 한화 230,108	SEK 5,814 한화 828,902
5	SEK 2,625 한화 374,246	SEK 1,432 한화 204,160	SEK 4,057 한화 578,407	SEK 5,250 한화 748,493	SEK 2,864 한화 408,321	SEK 8,114 한화 1,156,813
6	SEK 3,150 한화 449,096	SEK 2,057 한화 293,267	SEK 5,207 한화 742,362	SEK 6,300 한화 898,191	SEK 4,114 한화 586,533	SEK 10,414 한화 1,484,724

자료: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a). Child allowance.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ut/p/a1/hY5NDolwEIXPwgFkiqBhWyFi6kINC3A2BpKhkkCpWk9vuBefbuXfO8HEGpA1bheNrbXqhkWj9tbsizqMjYM53iDeOXcxQnp7UQJZuB6wywL-LsX74C_CA_GgSgHHQ7v6l2gM_yVeV82eWqjVMJaKgiQya868lC7b0PpXZk1EjKhhNBSQoeY81WuHfSB8EbAh9Pfg!/?1dmy&urile=wcm%3apath%3a%2Fcontentse_responsive%2Fprivatpers%2Fforalder%2Fnar_barnet_ar_fott%2Fbarnbidrag 에서 2016. 5. 19. 인출.

다) 주거 수당(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주거 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매달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자가 혹은 월세 여부에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수당 지원 조건으로는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연소득이 SEK 426,000(한화 60,734,820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으로 주거비가 월 SEK 1,400(한화 199,598원)이상이어야 한다(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b)²⁴⁾.

24)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b). 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ut/p/a1/hY5NDolwEIXPwgFkiqBhWyFi6kINC3A2BpKhkkCpWk9vuBefbuXfO8HEGpA1bheNrbXqhkWj9tbsizqMjYM53iDeOXcxQnp7UQJZuB6wywL-LsX74C_CA_GgSgHHQ7v6l2gM_yVeV82eWqjVMJaKgiQya868lC7b0PpXZk1EjKhhNBSQoeY81WuHfSB8EbAh9Pfg!/?1dmy&urile=wcm%3apath%3a%2Fcontentse_responsive%2Fprivatpers%2Fforalder%2Fbostadsbidrag 에서 2016. 5. 19. 인출.

Ⅲ.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출 변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은 가구 특성 및 자녀의 연령,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는 다를 것이며, 영아와 유아 또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계층 무상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출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정된 재정의 보다 효율적 집행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횡단면 혹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분석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에는 종단면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코호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출생 코호트에 따른 동태적 변화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책 지원 확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지는 패널 자료를 이용할 경우 표본의 차이에 따른 자료의 왜곡이 적기 때문이다. 즉, 표본 규모가 크지 않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표집 방식 및 표본 특성에 따라 지출 비용 또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매해 변동하는 지출 변화가 실제 지출의 변화인지, 표본의 특성에 따른 지출 변화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분석 자료의 특성

노동패널 자료는 한국에서 가장 종단면이 길게 구축되어 있는 자료인데다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장기에 걸친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7차년도(2014년)까지 총 11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정책 수혜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분석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출생당시부터 전 연령이 관찰되는 영유아로 구성하기 위해서 2004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패널 조사 자료의 한계²⁵⁾로 인해, 2007년생과 2008년생의 5세 당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코호트의 5세 때의 이용비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차수별로 보육연령별 출생년도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연령에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로, 2012년도에 0~2세와 5세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영유아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생과 2009년생~2012년생이며, 2013년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2007년생~2013년생이었다. 한편, 음영이 아닌 출생년도의 영유아들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 차등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은 경우이다.

한편, 표에서 박스처리가 된 출생년도들은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인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영아기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된 반면, 2013년 이후 굵은 글씨로 박스처리가 된 경우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시기임을 나타낸다. 즉, 전 연령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영유아들은 교육·보육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2007년생 이후 출생아들이다.

25) 2013년(16차)~2014년(17차) 노동패널 조사는 보육연령 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행태를 질문하지 않아(사교육 등 다른 서비스 이용 실태는 조사됨), 이들의 총 교육·보육비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노동패널 조사는 2007년생과 2008년생의 5세 당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행태에 관한 회고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자료 검증을 통해 차후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연도별 자녀 보육연령-출생년도 및 비용 지원 정책 대상 색인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기 준 연 도	2004년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1998년생
	2005년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2006년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2007년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8년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9년	<u>2009년생</u>	<u>2008년생</u>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10년	<u>2010년생</u>	<u>2009년생</u>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11년	<u>2011년생</u>	<u>2010년생</u>	<u>2009년생</u>	<u>2008년생</u>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12년	<u>2012년생</u>	<u>2011년생</u>	<u>2010년생</u>	<u>2009년생</u>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13년	<u>2013년생</u>	<u>2012년생</u>	<u>2011년생</u>	<u>2010년생</u>	<u>2009년생</u>	<u>2008년생</u>	<u>2007년생</u>
	2014년	<u>2014년생</u>	<u>2013년생</u>	<u>2012년생</u>	<u>2011년생</u>	<u>2010년생</u>	<u>2009년생</u>	<u>2008년생</u>

- 주: 1) 월령은 기준년도 1월 당시 자녀의 월령을 기준으로 함.
 2) 각 셀마다의 년도는 자녀들의 출생년도를 의미하며, 음영 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시기의 출생년도, 음영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구분되는 시기임.
 3) 출생년도에 박스처리가 된 경우는 양육수당이 지원된 시기로, 양육수당은 월령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기준년도에 일부 월이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박스 처리함. 영유아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적으로 적용된 시기는 박스 처리만 하였으며, 굵은 박스 글씨로 처리된 경우에는 전 계층 양육수당이 지원됨.
 4) 2013년(16차)~2014년(17차) 노동패널조사는 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행태를 질문하지 않았으며, 1998년생~2003년생은 2004년(7차조사) 이후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0세 이후 전 연령이 관찰되지 않아, 해당 차수의 출생년도를 사선 처리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표기함.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출생년도-보육연령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총 11개 차수에 걸쳐 9,301명이었으며, 출생년도별로 2004년생이 1,107명, 2005년생 1,010명, 2006년생 1,375명, 2007년생이 1,033명 등이었다. 2009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2014년 기준 특정 보육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응답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2007년생과 2008년생은 5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이 관찰되지 않아 분석 대상의 수가 적었다. 또한, 출생당해년도에는 당해연도 조사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관측치가 적었다. 각 출생코호트별로 각 연령의 응

답자 수는 150명~200명 내외로, 2006년생의 경우 2세 때 238명, 3세 222명, 4세 227명, 5세 226명이 관찰되어 다른 출생 코호트에 비해 응답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 이처럼 같은 출생 코호트의 응답자가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매해 응답가구의 응답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기인한다.

〈표 III-1-2〉 출생년도-보육연령별 분석 대상자 수

단위: 명

		보육연령(월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출 생 연 도	2004년생	67	158	158	163	176	204	181	1,107
	2005년생	64	143	138	153	181	170	161	1,010
	2006년생	82	179	201	238	222	227	226	1,375
	2007년생	51	168	201	202	205	206		1,033
	2008년생	77	189	191	196	200	203		1,056
	2009년생	63	161	183	189	193	188		977
	2010년생	100	183	191	195	197			866
	2011년생	124	176	194	195				689
	2012년생	122	194	197					513
	2013년생	101	151						252
	2014년생	52							52
	전체	903	1,702	1,654	1,531	1,374	1,198	568	9,301

주 :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0년(13차년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한편, 각 조사차수별 응답자 수는 우상향 대각선 방향의 응답자를 합산하면 된다. 즉, 노동패널 2010년(13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표의 음영 부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로 1,227명이며, 2011년(14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음영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1,279명이다. 노동패널 자료 내의 영유아 가구 수는 표본 추가가 이뤄지기 전인 2009년(12차년도) 이전에는 약 5,000개 내외의 응답가구 중 1,000가구 내외였으며, 2009년(12차년도) 이후부터는 약 6,500가구 중에서 1,200가구 내외의 영유아 가구가 조사되었다. 분석 대상자들의 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2.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이 절에서는 출생 코호트별로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구 내 아동별로 총 20여개 항목²⁶⁾에 대해 이용 서비스 종류와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에 포함된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종류로는 먼저, 개인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동거하는 가족/친지, 비동거 가족/친지, 동거하는 타인, 비동거하는 타인으로 총 4개 항목, 어린이집은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총 3개 항목, 유치원은 이용 시간에 따라 정규유치원(4시간), 시간연장제 유치원(6시간), 종일제 유치원(8시간) 총 3개 항목, 학원 서비스로 사설 놀이방, 학원 등 2개 항목, 그 외 시간제 교육·보육 서비스로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유료강좌, 문화센터 등 4개 항목, 그 외 기타 서비스 2개 항목, 16차년도 조사 이후 추가된 자녀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패널자료의 이러한 항목 분류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최근의 정책 변화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경우가 분리되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에 포괄되거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이용 시간은 알 수 없다는 점 등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 절의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와 지출 변화,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 등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세부적인 비용의 산출은 다음 장에 제시된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사건계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이다. 사건 계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이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의 배

26) 서비스의 항목명은 조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이 정책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정규유치원(4시간)과 같은 용어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용하지 않지만, 유치원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의 누리과정만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응답 되도록 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열 순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횡단 자료나 시계열자료 분석과는 달리 데이터를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건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분석 기법이다(Macindoe and Abbott, 2004). 이러한 사건 계열 분석을 이용하면,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발생 순서를 고려하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지연·이혜정, 2008; 반정호, 2010).

가. 출생 코호트*연령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지금부터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계열 분석을 실시할 경우 무수히 많은 사건 계열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용 패턴의 변화를 사건 연쇄 그래프로 그려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건 연쇄 그래프를 이용할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건 연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서비스의 종류가 많으면 사건 계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소한의 개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0.무응답, 1.어린이집, 2.유치원, 3.(다른 서비스 이용 전혀 없이) 부모가 직접 양육, 4.기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외)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 유형이나 이용 시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최우선 분류 기준이 되었으며, 1과 2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부모가 대체로 양육하지만 시간제로 학원을 이용하거나 학습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서비스 이용으로 분류된다. 즉, 지배적 서비스 종류의 순서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 기타서비스 > 부모가 직접 양육의 순이다. 이는 영유아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 이용과 병행되는 부모의 양육을 우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출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춘 기준이다. 한편,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 연령에 한 개의 서비스 이용 현황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복

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논의의 편의상 이러한 복합적인 서비스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출생 코호트별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의 변화를 사건 계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그림 III-2-1]의 2004년생~2006년생 코호트의 사건 연쇄 그래프는 7차년(출생당해~5세까지 7개 연령)에 걸쳐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응답자 725명²⁷⁾에 대한 491개의 사건 계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의 연령을 나타내는 X축의 값이 생활연령(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²⁸⁾. 하지만, 본문에서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래프에 제시된 생활연령을 보육연령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응답자가 0으로 사건 연쇄의 일련번호의 앞쪽 번호를 배정 받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로²⁹⁾, 매해 응답 여부에 따라 응답자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2세 이후 응답자의 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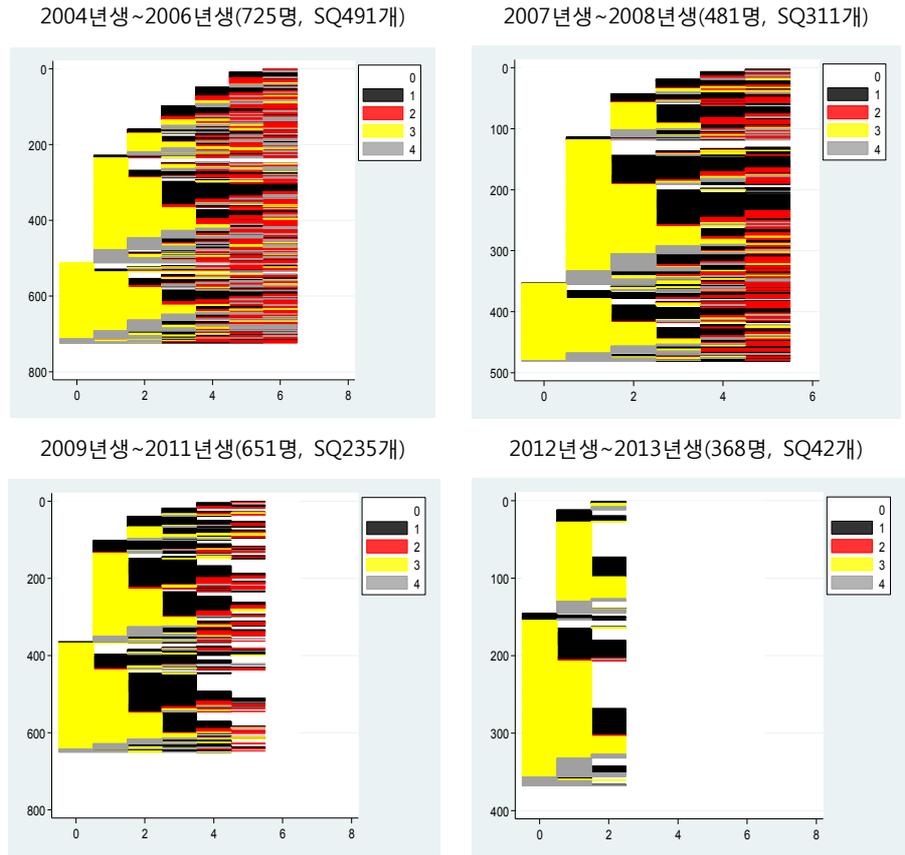
[그림 III-2-1]에 따르면, 2004년생~2006년생 코호트의 응답자는 출생당해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부모가 직접 양육(3, 노란색 표시 부분)하다가, 0세와 1세에는 일부 응답자가 기타 서비스(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학원 및 학습지, 교재/교구 활동 등)³⁰⁾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2세부터 어린이집(1, 검정색 표시 부분)의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3세 이후에는 부모의 직접 양육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2, 빨간색 표시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4세와 5세에도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의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코호트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가구는 1세 이하 영아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담당하다가, 2세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해서, 3세 이후 기관을 통한 교육·보육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7) 동일한 개인 725명에 대한 총 7차에 걸친 자료이므로, 240명*7차 = 5,075개의 자료가 분석에는 활용되었다.

28) 이는 사건 연쇄 그래프가 연속적인 연령의 증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로, 출생당해년도를 0세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29) 사건 연쇄의 정렬 방식이 000000 다음 0000001, 0000002의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이다.

30) 4, 회색 표시 부분.



주: 1) 범례는 0.무응답, 1.어린이집, 2.유치원, 3.부모가 직접 양육, 4.기타 서비스이며, SQ는 사건 계열의 수를 의미함. X축은 연령, Y축은 빈도를 나타냄.
 2) X축 연령은 생활연령으로 1세씩을 빼야 보육연령이 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2-1]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보육기관 이용 패턴(출생코호트 집단별)

한편, 2007년생~2008년생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도 2004년생~2006년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2세(그래프에서 X축 3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유아들의 교육·보육기관 이용이 보다 조기에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져서, 2세의 어

린이집 이용 비율이 더욱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세 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특히 주목해야할 점이 중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은 코호트라는 점이다. 즉, 2009년생의 경우 2012년에 2세(그림에서는 3세에 해당하는 구간)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생의 경우에도 2012년 1세 이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대상이었다. 2011년생은 0세부터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은 대상이다. 이 같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해당 연령, 즉 2009년생 이후 코호트의 2세 때의 기관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 코호트의 2세 때 어린이집 이용에 비해 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출생 당해년도부터 적용 받은 코호트인 2012년생~2013년생의 경우에도 2009년생~2011년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2년생과 2013년생 모두 출생당해년도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0세에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2013년생의 경우에는 출생당해년도부터 기타서비스(개인돌봄서비스, 시간제 학원 및 학습지, 교재/교구 활동 등)의 이용 비율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코호트 집단에서 0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1세부터 어린이집 혹은 기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다가, 3세 이후로는 유치원(2, 빨간색 표시 부분)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2009년생 이후 코호트에서는 분석 대상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해서 3세 이후 무응답(0, 흰색 표시 부분)이 많지만, 실제 응답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이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육연령 1세(그래프의 2세)와 2세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어린이집(1.검정색 표시 부분) 혹은 기타서비스(4.회색 표시 부분)가 증가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특히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중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코호트로 1세 이후 어린이집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지원이 기관 이용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와 조합 방식

이 항에서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조합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상 자녀의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조합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계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X축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보육서비스 조합 방식을 나타내는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 서비스의 개수를 의미할 뿐 순서 자체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X축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막대가 추가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범례는 0.무응답(흰색), 1.부모가 직접 양육(노란색), 2.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검정색), 3.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빨간색), 4.학원 이용(초록색), 5.학습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회색)으로 분류하였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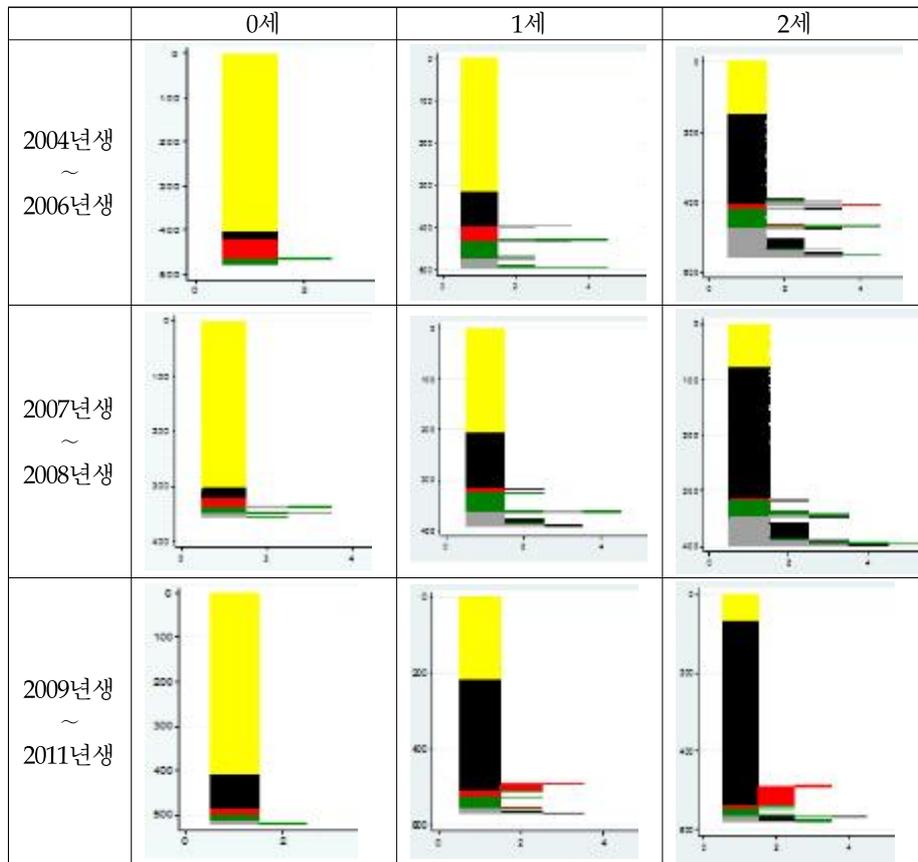
[그림 III-2-2]를 보면, 0세의 경우 대체로 하나의 교육·보육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2009~2011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1세의 경우 0세 때에 비해서는 다수의 서비스를 복수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뿐 아니라, 학원 이용 비율이 꽤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물론 어린이집의 이용은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크게 증가하였다. 복수 이용하는 서비스는 2004년~2006년생의 경우에는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가 많았던데 반해, 2009~2011년생의 경우에는 개별 돌봄 서비스와 학원을 복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세가 되면 서비스의 복수 이용 비율이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절반가량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학습지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학원 이용 순이었다. 이

31) 앞서 연령 증가별 이용 패턴에서는 개별돌봄서비스와 학원, 학습지 등이 모두 기타 서비스로 분류되었는데, 이 항에서는 서비스 조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 종류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때 복수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1) 범례는 0.무응답(흰색), 1.부모 직접 양육(노란색), 2.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검정색), 3. 개별 돌봄 서비스(빨간색), 4.학원(초록색), 5.학습지/개별교습 등(회색)을 나타냄.

2) X축은 이용 보육서비스의 종류로 단순한 일련번호 순일 뿐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니며, Y축은 빈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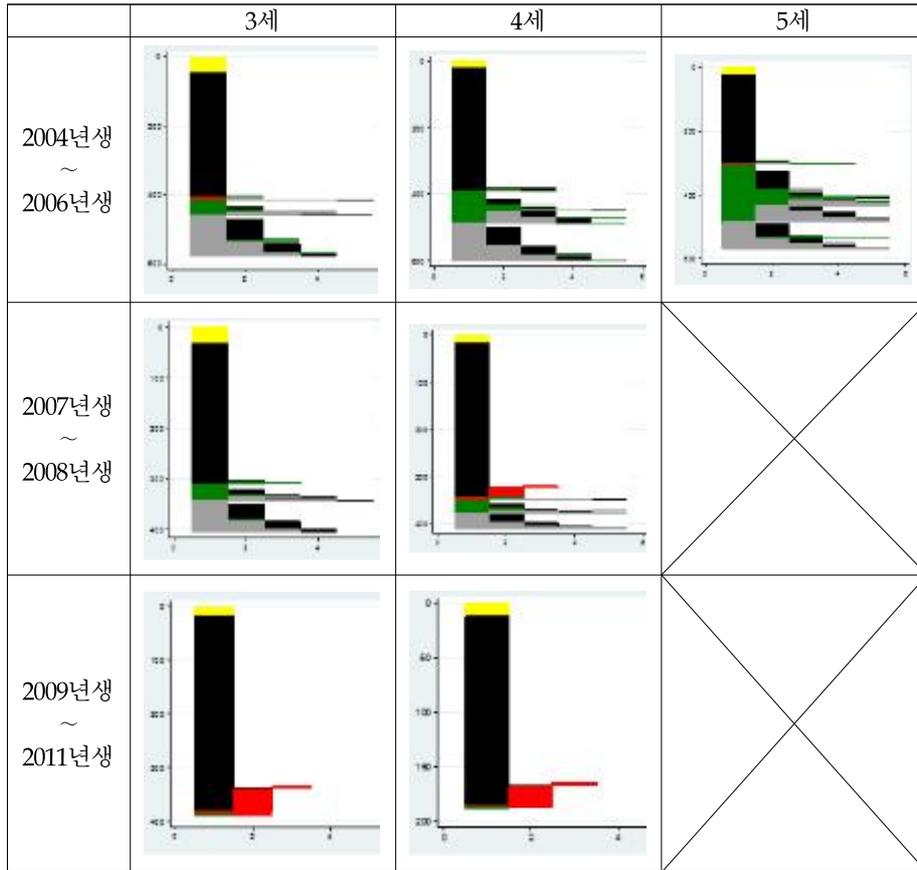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2-2]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영아기)

한편, 영아기와 달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기의 교육·보육서비스 조합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III-2-3]과 같다. 3세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반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때, 2009년생이 3세가 되는 해는 2013년, 2010년생은 2014년으로,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우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즉,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면서부터 학원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4세 때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조합을 살펴보면,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한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며,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학습지 이용 비율이 감소하긴 했으나 2004년생~2006년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04년생~2008년생이 4세였을 때, 교육·보육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009년생³²⁾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32) 2009년생이 4세일 때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관찰된 마지막 년도인 2014년으로, 2009년생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 주: 1) 범례는 0.무응답(흰색), 1.부모 직접 양육(노란색), 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검정색), 3.개별 돌봄 서비스(빨간색), 4.학원(초록색), 5. 학습지/개별교습 등(회색)을 나타냄.
 2) X축은 이용 보육서비스의 종류로 단순한 일련번호 순일 뿐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니며, Y축은 빈도를 나타냄.
 3) 2009년생~2010년생의 연령별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9년생의 경우 3세에 2013년, 4세가 2014년으로 3세와 4세에 모두 활용되었으나, 2010년생의 경우는 2014년도에 3세의 경우에만 이용되었음. 즉, 2009년생~2010년생 4세의 서비스 이용 조합은 2009년생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2-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유아기)

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 변화

지금까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출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총 지출 비용은 영유아 개인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모두 합산한 비용이며, 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교육·보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0원으로 간주하고 총 비용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 III-3-1>과 [그림 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생의 총 지출 비용은 0세 5만5천원, 1세 7만6천원, 2세 15만2천원, 3세 24만6천원, 4세 27만7천원, 5세 29만2천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기관 이용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평균 총 지출 비용을 산출해보면³³⁾, 오히려 0세의 총 지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1세~5세의 지출 비용이 20만원~30만원 내외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지출 비용도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 연령에서의 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1세의 경우 2004년생은 7만6천원이었으며, 2005년생 8만8천원, 2006년생 9만3천원, 2007년생 8만8천원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 연령에서의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소득 및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같은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즉, 2012년 이전 시기에 영유아 가구들의 지출 규모는 0세의 경우 10만원이하, 1세는 10만원 내외, 2세 10~20만원, 3세 이후 20~30만원 정도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2년(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시기) 이후의 교육·보육비 지출 현황이다. 2012년은 0~2세와 5세에 대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정책이 처음 시행된 해로, 정책 대상이 된 연령의 경우에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전년 대비 확연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당시 2세였던 2009년생의 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은 15만2천원으로, 2008년생의 2세 때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인 20만2천원에 비해 5만원 가량 낮았다.

33) <부표 2-1>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지출 수준은 <부표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2012년 당시 5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 2006년생의 경우에도 평균 26만7천원의 비용을 지출해, 2005년생의 5세 지출 평균 31만원에 비해 4만3천원 가량 낮았다. 이를 통해 2012년 당시 정부의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제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3-1〉 출생년도-보육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전체 응답자 평균)
단위: 만원, (명)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출 생 연 도	2004년생	1.1 (67)	5.5 (158)	7.6 (158)	15.2 (163)	24.6 (176)	27.7 (204)	29.2 (181)
	2005년생	2.5 (64)	5.5 (143)	8.8 (138)	17.9 (153)	24.1 (181)	30.5 (170)	31.0 (161)
	2006년생	1.0 (82)	5.9 (179)	9.3 (201)	16.3 (238)	26.6 (222)	28.8 (227)	26.7 (226)
	2007년생	0.3 (51)	4.8 (168)	8.8 (201)	18.7 (202)	27.7 (205)	29.3 (206)	
	2008년생	0.6 (77)	5.0 (189)	11.0 (191)	20.2 (196)	23.1 (200)	35.8 (203)	
	2009년생	1.3 (63)	4.0 (161)	12.7 (183)	15.2 (189)	35.7 (193)	35.4 (188)	
	2010년생	3.1 (100)	7.2 (183)	9.3 (191)	34.5 (195)	38.3 (197)		
	2011년생	1.3 (124)	4.8 (175)	23.9 (194)	30.1 (195)			
	2012년생	0.6 (121)	12.6 (194)	27.8 (197)				
	2013년생	3.6 (101)	12.9 (150)					
2014년생	3.3 (52)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2(15차년도)조사의 응답 값이며, 굵은 글씨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를 나타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전면 시행된 2013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3년도 이후로는 2011년 이전

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2세인 2010년생의 교육·보육비 지출 평균은 34만5천원으로, 2012년 기준 2세(2009년생)의 지출 평균 15만2천원의 2.3배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2013년 1세(2011년생)의 지출 평균은 23만9천원으로 2012년 기준 1세(2010년생)의 지출 평균 9만3천원의 2.6배였다.

앞서 [그림 III-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2010년생 이후 어린이 집 이용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 비용의 증가가 이용 비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하지만,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³⁵⁾, 2013년 이후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기관 이용 패턴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유아기의 지출 비용을 살펴보다도, 2013년 이후로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3년 당시 4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된 2008년생의 지출 평균은 35만8천원으로, 2012년 당시 4세여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07년생의 지출 평균 29만3천원에 비해 오히려 6만4천원 가량이 높았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실질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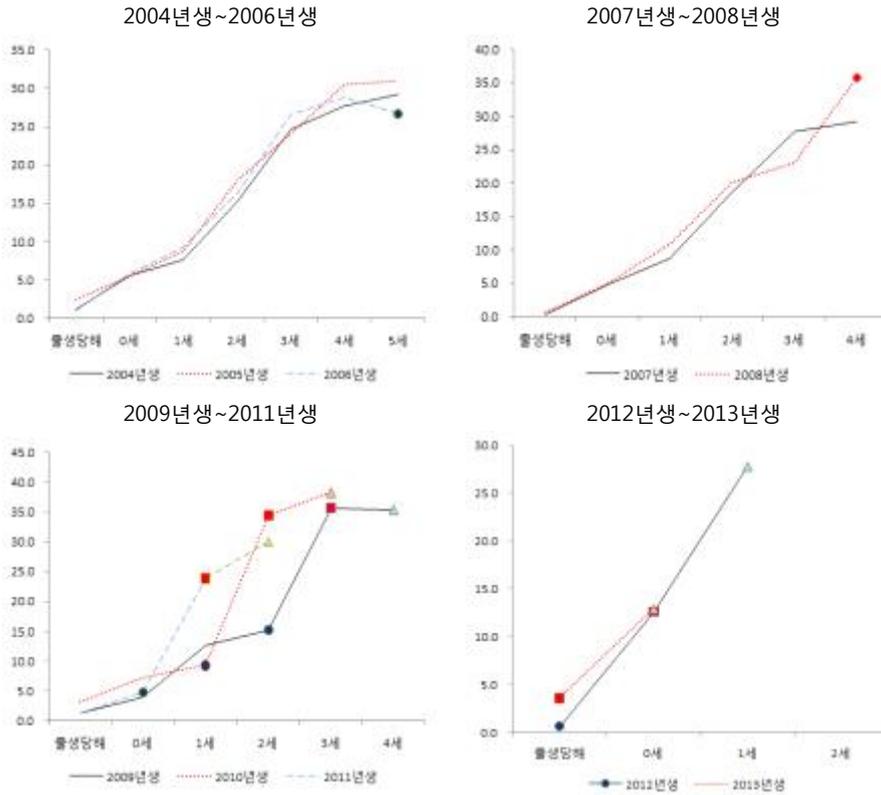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성을 보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를 [그림 III-3-1]로 제시하였다. [그림 III-3-1]은 각 코호트별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지출 평균을 그린 것인데, 그래프의 선 위에 동그라미 표식이 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이며, 네모 표식이 붙은 경우는 2013년도, 세모 표식이 붙은 경우가 2014년도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2년도(동그라미 표식)에는 모든 코호트에서 전년 대비 교육·보육비 지출이 둔화되거나 감소하였으며, 동일 연령에서의 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³⁷⁾도 이전 코호트에 비해 지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네모 표식)에는 모든 코호트에서 전년 대비 지출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동일 연령으로 비교해보아도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35) <부표 2-1>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실질 총 이용비용의 변화는 <부표 2-2>로 제시하였다.

37) 각 연령별로 수직 막대를 그려서 비교하면 된다.

단위 : 만원



주: 그래프의 표식 중에서 동그라미는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의 적용을 받은 경우, 네모는 2013년도, 삼각형은 2014년도의 적용대상을 의미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3-1]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한편, 이러한 현상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2012년 전후 정책 변화와 관련이 높은 코호트인 2008년생~2010년생의 교육·보육비 지출 분포를 그려보았다. [그림 III-3-2]는 2008년생~2010년생의 1세~3세까지의 교육·보육비 지출 분포를 나타내는 커널 밀도 그래프³⁸⁾이다. 여

38) 커널 밀도 추정치(Kernel density Estimation)는 임의 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hat{f}_h(x) = \frac{1}{n} \sum_{i=1}^n K_h(x_i - x) = \frac{1}{nh} \sum_{i=1}^n K\left(\frac{x_i - x}{h}\right)$ 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커널 밀도 추정치는 관측된 자료의 분포를 보고자 할 때 히스토그램과 함께 가장

기서 2008년생은 2010년에 1세-2011년 2세-2012년 3세였으며, 2009년생은 2011년에 1세-2012년 2세-2013년 3세였고, 2010년생은 2012년에 1세-2013년 2세-2014년 3세였다. 따라서, 각 코호트별로 2008년생의 3세, 2009년생의 2세, 2010년생의 1세 때가 2012년도에 해당하는데, 2009년생과 2010년생은 각각 2세와 1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2008년생은 3세로 전 계층 교육비·보육비 지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시기의 분포가 다른 시기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든 영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연령 증가에 따라 전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1세~3세까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2008년생의 경우 1세 때에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0원 근처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고, 30~40만원 근처에도 상당수가 모여 있는 쌍봉 형태를 띠고 있었다. 2세 때에도 여전히 쌍봉 형태를 띠고 있으나, 30~40만원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왼쪽 봉우리가 1세에 비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1세 때에 비해 2세 때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세 때에는 1세, 2세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25만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높은 봉우리 형태를 보였다. 즉, 2세 이전에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이용비용의 분포가 두 개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형태를 띠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3세에는 25만원을 전후로 밀집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2009년생의 경우에는 3세 때의 이용비용은 2008년생처럼 하나의 높은 봉우리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이용비용의 수준은 30~40만원 내외에 밀집된 형태로 2008년생에 비해 비용 지출이 약간 높아진 형태를 보였다. 1세 때의 이용비용은 2008년생과 마찬가지로 쌍봉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2008년생과의 차이점은 2008년생의 경우 왼쪽 봉우리가 오른쪽 봉우리에 비해 높았는데 반해, 2009년생의 1세 때 분포는 오른쪽 봉우리가 왼쪽 봉우리에 비해 높은 형태를 띠는 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연령인 1세 때의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패턴이 2008년생과 2009년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생의 경우 보다 어린 나이부터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2009년생의 교육·보육서비스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히스토그램이 비연속적 함수 형태를 갖는데 반해 커널 밀도 추정치는 연속함수라는 장점이 있다(이정원 외, 201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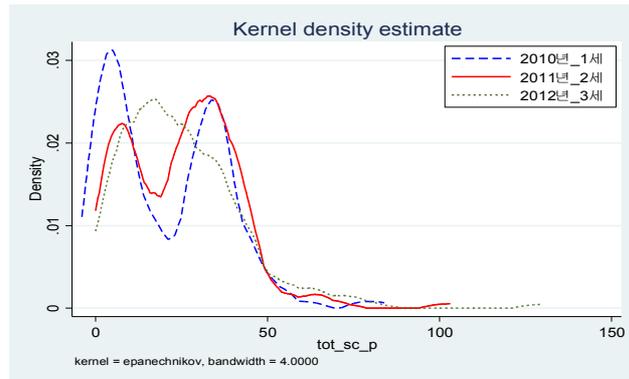
이용비용 분포에서 특히 주목해야하는 시기는 2세로, 이 시기는 2012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생들 전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첫 해였다. 아래의 커널 밀도 그래프를 보면, 2009년생의 2세(2012년) 때 교육·보육 지출 양태가 2008년생과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책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된 첫 해인 2012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보육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생 2세의 지출 분포는 대체로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띠었으며, 30만원 근처에서 밀도가 살짝 상승하는 정도였다. 이는 2008년생의 2세 때 지출 양태와 비교할 때, 교육·보육비 지원의 가계부담 완화 효과가 대부분의 가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10년생의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1세 때 0만원 쪽에 밀집된 형태의 지출 분포를 보였다. 2008년생과 2009년생의 지출 분포에서도 본 바와 같이 통상 1세의 교육·보육비 지출 분포는 쌍봉 형태를 띠는데 반해, 2010년생의 경우에는 왼쪽 봉우리 쪽으로의 쏠림이 확연하게 관찰됐다. 2010년생의 경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세, 3세 때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30~40만원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세 때 지출 비용이 하나의 높은 뿔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 특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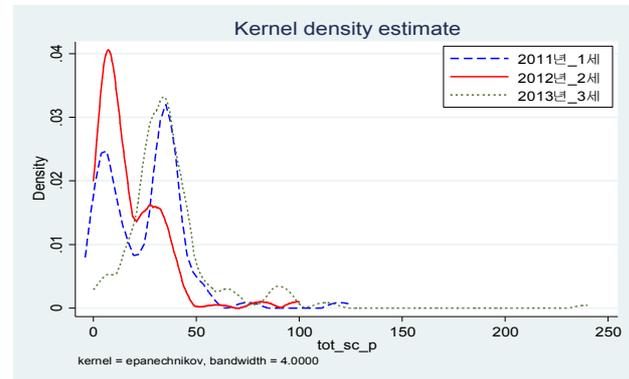
한편, 동일 연령에서의 교육·보육비 지출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효과가 가장 잘 식별되는 2008년생~2010년생의 2세 당시 아동별 지출 분포를 그려보았다. 이에 따르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1년에는 10만원과 30만원 부근에서 밀도가 높아지는 쌍봉 형태를 띠는데 반해, 정책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그래프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지출 비용이 10만원 이하에 크게 쏠려있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 전 계층에게로 정책 확대가 이뤄진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였을 뿐 아니라, 봉우리 자체도 하나인 형태였다.

이상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은 일부 연령(3~4세)이 제외되긴 했으나 시행 첫해였던 2012년도에는 가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로는 영아의 기관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가계 부담을 완화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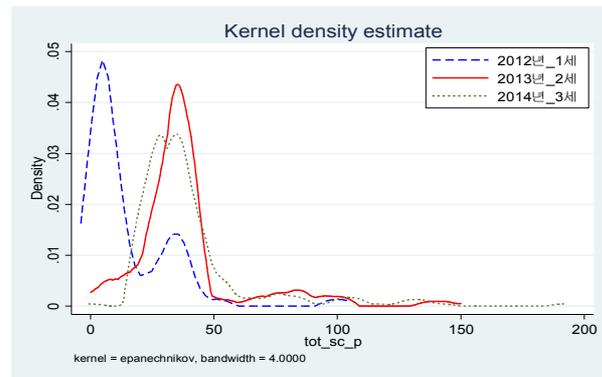
2008년생
(적용대상
아님)



2009년생
(2세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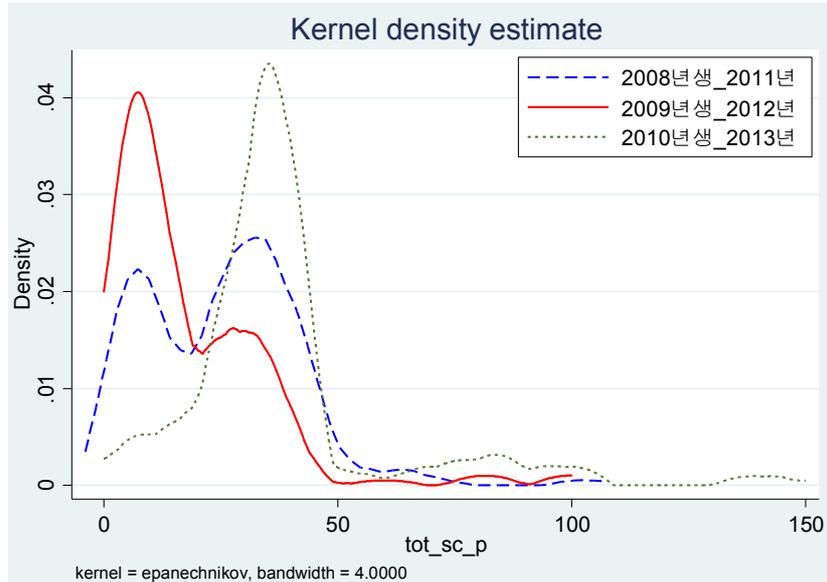


2010년생
(1세에
적용)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3-2]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3-3]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2세)

4.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효과³⁹⁾

이 절에서는 앞서 구축한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변화가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보육비용 지출 수준별로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보육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위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분석방법

분석 자료에 이질적인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자료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종속변수의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즉, 분석 자료가 정규

39) 분위회귀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연구 협력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박사님의 도움이 컸음을 밝힙니다.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의 신뢰성은 약화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 중 하나가 분위회귀분석이다. 물론 이처럼 자료에 이질적인 집단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질적인 집단들을 분할하여 모형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최소자승법을 활용한 추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가 작아져서 분석의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고, 임의로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 심각한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분석 방법으로 분위회귀분석을 생각할 수 있다.

분위회귀분석은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증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소자승법은 설명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조건부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분위회귀분석은 설명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이용우, 2011). 최소자승법은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지만, 만족되어야 할 기본가정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분위회귀분석은 자료들의 이질성이 심한 경우 최소자승법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적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집단 사이에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적정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 더 많이 지출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차이에 따른 가구소득탄력성의 이질성을 추정하기에는 최소자승법보다 분위회귀분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위회귀분석은 Koenker and Bassett(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τ -분위(conditional τ -quantile)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좀 더 일반적이고, 자료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위회귀분석을 위한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 X_i + u_{ri} \quad , \quad Q_\tau(y_i | X_i) = \beta'_\tau X_i \quad (i = 1, 2, \dots, n)$$

여기서 $Q_\tau(y_i | X_i)$ 는 X 가 주어진 상태에서 y 의 τ -(조건부)분위를 의미한다. 이때, 모든 i 에 대해 $Q_\tau(u_{\tau i} | X_i) = 0$ 을 가정한다. 분위회귀계수 β_τ 의 추정치는 주어진 분위수(τ)에 대해 다음에 제시된 최소화 문제의 해로써 구해진다.

$$\text{Min} \frac{1}{n} \left\{ \sum_{y_i \geq \beta' X_i} \tau |y_i - \beta' X_i| + \sum_{y_i < \beta' X_i} (1 - \tau) |y_i - \beta' X_i| \right\}$$

여기서 τ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음의 오차에는 $(1 - \tau)$ 의 가중치를, 양의 오차에는 τ 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0.25(25%분위), 0.5(50%분위), 0.75(75%분위)와 함께 0.1(10%분위) 및 0.9(90%분위)까지 총 5개 분위수(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결과

1) 기본모형

<표 III-4-1>은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실질)이용비용⁴⁰⁾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과 비교를 위해 OLS 추정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위회귀분석에 활용된 전체 관측치는 총 5,594개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여 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동패널 7차~17차년도 자료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여 비용이 없는 경우는 총 3,533명으로 이 중 2,996명이 1세 이하의 영아 자녀였다. 이러한 관측치를 회귀분석에 포함할 경우 특정 연령에 집중된 0값으로 인해 편의가 발생할 뿐 아니라, 40%분위까지 모두 0원을 지출하는 가구로 구성되면서 분위회귀분석의 의미가 희석될 위험이 높았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⁴¹⁾.

40)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4~2014년까지 총 11개 차수의 자료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년도별로 이용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실질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1) 이 외에 모의 학력이나 취업 상태 등 일부 미싱인 자료가 존재하여, 실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5,594명이었다.

〈표 III-4-1〉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보육연령 (기준=0세)	1세	0.170 ***	0.791 ***	0.491 ***	-0.070	-0.143 ***	-0.154 ***
	2세	0.365 ***	1.453 ***	0.931 ***	-0.014	-0.180 ***	-0.164 ***
	3세	0.588 ***	1.950 ***	1.141 ***	0.071	-0.100 **	-0.038
	4세	0.600 ***	1.983 ***	1.115 ***	0.075	-0.068	0.024
	5세	0.383 ***	1.568 ***	0.723 ***	-0.121	-0.154 ***	-0.016
아동 성별	남아	-0.012	0.013	0.025	0.001	0.007	0.011
아동 코호트 (기준=2004-2006년생)	07-08년생	-0.195 ***	-0.310 ***	-0.405 ***	-0.167 ***	-0.072 ***	-0.046
	09-11년생	-0.157 *	-0.039	-0.398 ***	-0.186 ***	-0.087 *	-0.040
	12년생이후	-0.199	-1.126 ***	0.153	-0.101	-0.134 *	0.017
모 연령 (기준=24세이하)	25-29세	0.181	0.073	0.102	0.515 ***	-0.061	-0.102
	30-34세	0.162	0.183	0.089	0.488 ***	-0.054	-0.088
	35-39세	0.131	0.084	-0.022	0.459 ***	-0.058	-0.061
	40세이상	0.066	0.065	-0.012	0.376 ***	-0.080	-0.132
모정활상태 (기준=미취업)	임금	0.064 **	0.023	0.027	0.049 **	0.051 ***	0.138 ***
	비임금	-0.027	-0.041	-0.073	-0.067	-0.027	0.033
	무급가족	-0.163 *	-0.374 **	-0.172	-0.172 **	-0.163 ***	0.222 ***
모교육상태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80 ***	0.092	0.082 **	0.070 ***	0.073 ***	0.076 ***
	대졸이상	-0.001	-0.053	-0.033	0.018	0.060 ***	0.132 ***
가구소득		0.411 ***	0.534 ***	0.444 ***	0.320 ***	0.252 ***	0.267 ***
자녀수		-0.161 ***	-0.229 ***	-0.171 ***	-0.095 ***	-0.107 ***	-0.105 ***
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0.103 ***	-0.081	-0.105 **	-0.099 ***	-0.099 ***	-0.115 ***
	도	-0.108 ***	-0.141 *	-0.106 **	-0.088 ***	-0.099 ***	-0.154 ***
연도 (기준=2004년)	2005년	-0.817	-3.364 ***	-1.156 ***	-0.343	-0.020	0.234
	2006년	-1.034 *	-3.063 ***	-2.444 ***	-0.411	-0.019	0.276
	2007년	-1.131 *	-3.436 ***	-2.101 ***	-0.508	-0.112	0.136
	2008년	-0.936	-3.080 ***	-1.816 ***	-0.368	0.013	0.220
	2009년	-0.929	-3.113 ***	-1.727 ***	-0.349	-0.020	0.214
	2010년	-0.842	-3.067 ***	-1.555 ***	-0.215	0.047	0.210
	2011년	-0.807	-2.990 ***	-1.480 ***	-0.239	0.056	0.227
	2012년	-1.098 *	-3.279 ***	-1.800 ***	-0.462	-0.105	0.107
	2013년	-0.590	-2.614 ***	-1.005 ***	-0.032	0.166	0.304 *
	2014년	-0.513	-2.473 ***	-1.013 **	-0.049	0.137	0.258
상수항		1.403 **	0.843	1.287 ***	1.522 ***	2.555 ***	2.459 ***

* $p < 0.1$, ** $p < .05$, *** $p < .01$
 주: 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수는 1,918명이며, 총 표본은 5,594명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분석 결과, 설명변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분위회귀계수가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보육연령에 대한 계수를 살펴보면, 낮은 분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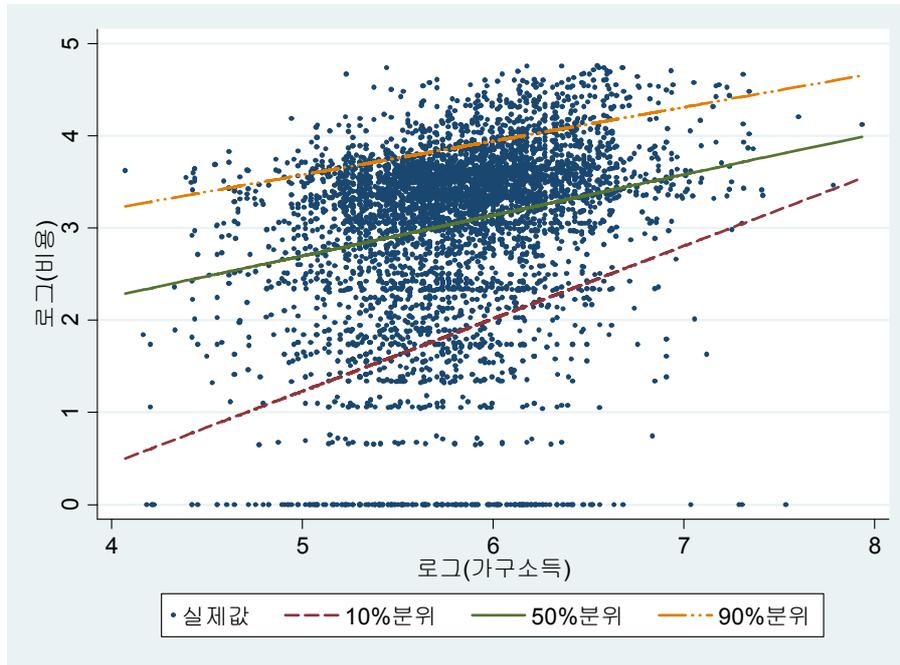
용의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위 이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성별은 어떤 분위에서도 비용 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중위(50%분위) 수준에서만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세이하 그룹에 비해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지출비용이 많았지만, 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다소 지출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분위별로 계수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미취업모에 비해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지출비용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고,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는 지출비용이 오히려 미취업모보다도 적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모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높은 분위, 즉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서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⁴²⁾에 대한 영향은 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졌다. 즉,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그 탄력성의 크기는 높은 분위, 즉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많은 집단일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10%분위 수준에서는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약 0.5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90%분위 수준에서는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약 0.27% 정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두 집단 사이에 약 2배의 탄력성 크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고 소액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 원하는 수준으로 지출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III-4-1]을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나타낸 실제 값 산포도를 살펴보면, 낮은 가구소득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10%분

42) 지출비용과 가구소득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 회귀선의 기울기가 90%분위 회귀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4-1]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2) 확장모형: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효과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2012~2013년을 전후하여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앞선 기본모형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된 이후 해당 아동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지원확대=1)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가구소득탄력성이 지원확대 정책으로 인해 각 분위별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지원확대 변수를 곱한 교호항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표 III-4-2>는 이러한 확장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탄력성은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교육·보육서비

스 이용비용이 많은 집단일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출비용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비용의 증가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분위에서는 오히려 지원확대 이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정책이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가구소득탄력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시점 이후 이용비용 분위별 가구소득탄력성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정책지원 확대 이전에는 25%분위(0.733)와 75%분위(0.315) 사이에 탄력성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정책지원 확대 이후에는 25%분위($0.184=0.733-0.549$)와 75%분위($0.173=0.315-0.142$) 사이의 탄력성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정책은 소득계층별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포의 분산 차이를 줄어든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III-4-2]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확대 이전에는 25%분위 회귀선의 기울기가 75%분위 회귀선의 기울기보다 월등히 큰 반면, 지원 확대 이후에는 두 회귀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비슷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구소득별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산포도 역시 지원확대 이후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위회귀계수의 차이는 각 가구소득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포의 차이로 이해 가능하다. 그런데 확장모형의 분석 결과로부터,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소득계층별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포를 줄이는데, 즉 분산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교육·보육비용 비용 편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 형평성이 제고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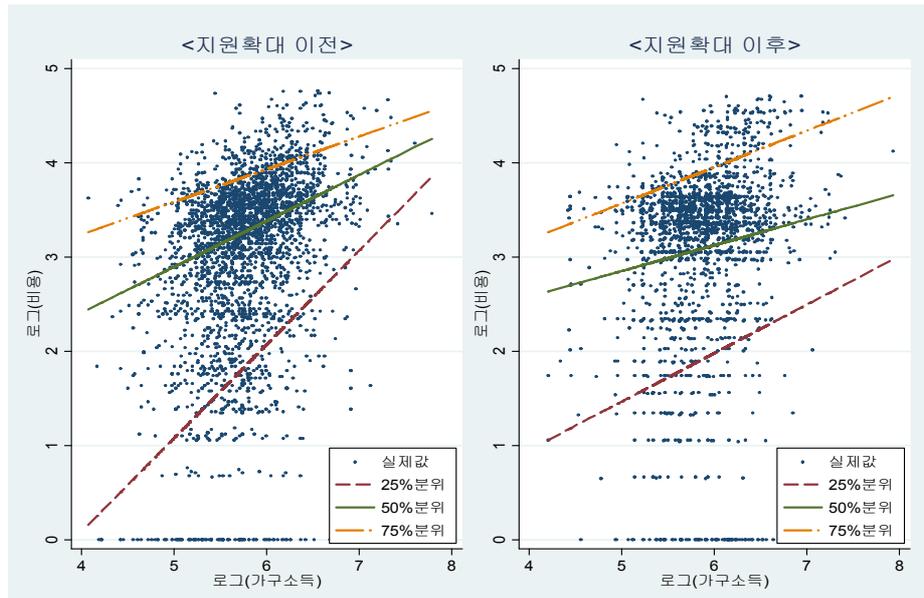
〈표 III-4-2〉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보육지원 확대정책의 효과)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보육연령 (기준=0세)	1세	0.170 ***	0.802 ***	0.412 ***	-0.042	-0.133 ***	-0.154 ***
	2세	0.364 ***	1.472 ***	0.871 ***	0.015	-0.176 ***	-0.174 ***
	3세	0.520 ***	1.755 ***	0.992 ***	0.068	-0.110 **	-0.071
	4세	0.528 ***	1.770 ***	0.995 ***	0.082	-0.069	-0.008
	5세	0.418 ***	1.576 ***	0.737 ***	-0.022	-0.126 **	0.003
아동 성별	남성	-0.011	0.011	0.000	-0.002	0.000	0.013
아동 코호트 (기준=2004 -2006년생)	07-08년생	-0.283 ***	-0.508 ***	-0.435 ***	-0.267 ***	-0.091 ***	-0.077 **
	09-11년생	-0.133	0.090	-0.242 ***	-0.231 ***	-0.084 *	-0.032
	12년생이후	-0.213	-1.183 ***	0.269 **	-0.138	-0.139 *	0.019
엄마 연령 (기준= 24세이하)	25-29세	0.169	-0.025	0.176	0.369 ***	-0.056	-0.076
	30-34세	0.136	0.077	0.160	0.288 **	-0.060	-0.069
	35-39세	0.107	-0.012	0.051	0.277 **	-0.064	-0.031
	40세이상	0.047	0.012	0.048	0.227 *	-0.096	-0.097
모 생활상태 (기준=미취업)	임금	0.062 **	-0.013	0.047 *	0.039 *	0.048 ***	0.130 ***
	비임금	-0.044	-0.054	-0.089 *	-0.077 *	-0.052 *	0.042
	무급가족	-0.142 *	-0.310 *	-0.098	-0.181 ***	-0.166 ***	0.195 ***
모교육상태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81 ***	0.084	0.089 ***	0.076 ***	0.074 ***	0.068 ***
	대졸이상	-0.001	-0.046	-0.025	0.008	0.062 ***	0.129 ***
지원확대		1.360 ***	3.142 ***	2.492 ***	1.638 ***	0.684 ***	-0.459 *
가구소득		0.540 ***	0.854 ***	0.733 ***	0.501 ***	0.315 ***	0.249 ***
가구소득×지원확대		-0.318 ***	-0.702 ***	-0.549 ***	-0.370 ***	-0.142 ***	0.051
자녀수		-0.160 ***	-0.236 ***	-0.167 ***	-0.103 ***	-0.104 ***	-0.109 ***
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0.096 ***	-0.059	-0.091 **	-0.091 ***	-0.084 ***	-0.110 ***
	도	-0.110 ***	-0.127 *	-0.110 ***	-0.085 ***	-0.102 ***	-0.150 ***
연도 (기준=2004년)	2005년	-0.775	-3.009 ***	-1.084 ***	-0.318	0.007	0.232 *
	2006년	-0.960	-2.844 ***	-2.093 ***	-0.364	0.024	0.252 **
	2007년	-1.056 *	-3.207 ***	-1.773 ***	-0.519	-0.062	0.133
	2008년	-0.813	-2.773 ***	-1.424 ***	-0.320	0.073	0.217 *
	2009년	-0.787	-2.829 ***	-1.344 ***	-0.310	0.030	0.215 *
	2010년	-0.709	-2.727 ***	-1.193 ***	-0.201	0.106	0.233 **
	2011년	-0.669	-2.586 ***	-1.168 ***	-0.177	0.121	0.221 *
	2012년	-0.688	-2.531 ***	-1.122 ***	-0.193	0.030	0.203
	2013년	0.022	-1.336 ***	-0.015	0.572	0.349 **	0.471 ***
	2014년	0.082	-1.205 ***	-0.065	0.524	0.314 *	0.416 ***
상수항		0.604	-1.090 *	-0.714 *	0.63	2.132 ***	2.567 ***

* $p < 0.1$, ** $p < .05$, *** $p < .01$

주: 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수는 1,918명이며, 총 표본은 5,594명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III-4-2]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지원확대 전후 비교)

한편,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이후 전반적인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이후 교육·보육비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때, 소득이 낮은 영유아 가구의 지출 증가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이전에는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던 교육·보육서비스를 비용 지원 이후에는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유아학비·보육료에 대한 가계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기관 이용률 자체가 높아져, 그 전에는 교육·보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던 가구에서 소액이라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전후로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 지원 전후의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의 교육·보육비용의 증가는 가계부담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높은 가격 장벽에 막혀 이용이 어렵던 유아교육 혹은 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의 확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강건성 확인

지금까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가구소득탄력성이 분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앞선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에는 자료의 조사시점인 연도가 통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형에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보육연령, 아동의 출생연도에 대한 코호트 변수, 엄마의 연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시점을 의미하는 연도변수와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 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모형에서 제외하여 분위회귀분석을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표 III-4-3>은 연도별 모형에서 제외한 분석결과 중 가구소득탄력성과 관련된 추정계수만을 보여주고 있다.⁴³⁾

<표 III-4-3> 분위회귀분석 결과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기본 모형	가구소득	0.421 ***	0.602 ***	0.523 ***	0.349 ***	0.235 ***	0.261 ***
	지원확대	1.620 ***	2.818 ***	2.635 ***	1.924 ***	0.877 ***	-0.091
확장 모형	가구소득	0.540 ***	0.823 ***	0.730 ***	0.495 ***	0.314 ***	0.258 ***
	가구소득 × 지원확대	-0.293 ***	-0.512 ***	-0.464 ***	-0.329 ***	-0.154 ***	0.017

*** $p < .01$

주: 1) 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수는 1,918명이며, 총 표본은 5,594명임.

2)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2-3>과 <부표 2-4>를 참조.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에서 모두 연도더미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하더라도 앞선 분석결과의 경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본모형에서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분위별 가구소득탄력성이 분위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확장모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이후에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크기는 낮

43) 연도변수를 제외한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2-3>과 <부표 2-4>에 제시하였다.

은 분위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지원 확대에 의한 가구소득탄력성 역시 지원확대 이전에는 10%분위(0.823)와 90%분위(0.258) 사이에 3배 이상의 탄력성 차이가 있었던 반면, 지원확대 이후에는 10%분위($0.311=0.823-0.512$)와 90%분위($0.275=0.258+0.017$) 사이의 탄력성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5. 소결

지금까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변화와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코호트에서 0세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2012년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의 수혜 집단인 2009년생 이후 아이들의 경우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복수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그런데,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조합방식에 있어서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전후하여 독특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기 이전 코호트인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학습지를 조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수혜 집단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이전 코호트에 비해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3세 이상 유아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조합 방식을 살펴보면,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반해, 2009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명목, 지출액이 없는 경우 0으로 처리)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해마다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감안하고서도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동일 연령대 기준 평균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감소 효과는 2012년도에 국한되고,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된 2013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띠었다.

넷째,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실질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가 취업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섯째, 교육·보육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졌다. 이때, 가구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지출 비용이 적은 분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이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 전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분위별 가구소득 탄력성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는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산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로 비용 지원이 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증가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지출 편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했으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원 확대 이후 오히려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1.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IV장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2016년 현재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 및 이용비용, 정부의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와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실태조사 자료는 영유아 가구의 2016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실태를 보여주는 IV장과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된 V장에 주로 활용되었다. 본 실태조사는 2016년 6월 30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완료하였다(승인번호: KICCEIRB-2016-제06호).

가. 표본 설계 및 설문 구성

1)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총 1,312가구(가구 내 영유아 자녀 1,820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은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 표집 블록수를 12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단, 조사 과정에서 지역,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이용 기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 이상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본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전국 영유아 가구에 대한 표본 틀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모 취업률이나 이용기관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접촉이 쉬운 가구를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가구 및 아동 특성을 반영한 비용 지출 자료에 편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표집 시 고려하는 변인을 처음부터 강제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연령이나 미취업모가 지나치게 많이 조사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 가구 수에 폭넓은 범주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년도 조사에 비해 가구표본이 1,300여가구로 줄어들어 따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지나치게 작게 조사될 위험이 높아, 동일한 국가기초구역 안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최소한 100개 이상 조사될 수 있도록 가중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는 반일제 학원 이용자의 관측치가 작아, 이용비용이 소수의 조사 결과에 의해 과소 혹은 과다 산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후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해줌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하에서 실태조사의 결과로 제시된 모든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보다 자세한 표집 방법과 가중치 부여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설문 의 구성

본 조사의 설문은 크게 가구 및 응답자 특성, 아동 단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주요 부분인 아동 단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는 자녀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얼마인지,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유치원 종일제 이용 시 개선점,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개선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최대 지불의사 및 이용시간 조정의사,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비용 지원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이용자 혹은 정책 대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문항이므로 아동 단위로 질문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의견이나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단위로 질문하였다.

<표 IV-1-1>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조사 구분		설문 내용
가구 및 응답자 특성	가구 특성	· 가구원 수, 가구 형태,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 총지출 규모 등
	자녀 특성	· 자녀의 수, 자녀별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
	부모 특성	· 부/모 연령, 학력, 취업 상태 등

(표 IV-1-1 계속)

조사 구분		실문 내용
교육·보육 비용지출 실태 조사 (아동 단위 조사)	기관 이용 비용	· 기관 이용 현황, 이용 시간 및 조정 의사 · 입학 전 사전 비용 조사 등 · 기관 이용자의 보육·교육비 지출 : 보육료, 교육비,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행사비 등 · 선택적 교육비1: 어린이집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유치원 종일제 등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및 만족도, 부담 정도 등 · 선택적 교육비2: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만족도, 부담 정도 등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 입학금, 교육비,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행사비, 추가 보육 서비스이용 비용 등 ·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등
	사교육 비용	· 시간제학원 이용비용: 참여프로그램, 월교육비 등 · 학습지, 개별과외, 교구활동, 인터넷 통신교육 등 이용비용 및 만족도 부담 정도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 개별돌봄서비스 : 개별 보육 이용 형태, 서비스 제공자, 이용시간, 비용 등
	기타 비용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및 비용
정부재정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가구 단위 조사	·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의견 조사 ·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아동 단위 조사	· 유치원 종일제 이용시 개선점 ·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개선점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최대 지불 의사 및 이용 시간 조정 의사 ·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비용 지원 적정성에 대한 의견

나. 응답자 특성

1) 아동 특성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응답 가구의 아동은 남아가 51.6%, 여아가 48.4%로 성비는 비교적 균등하였다. 출생순위에서는 45.6%가 첫째, 43.1%가 둘째로 대부분의 응답 가구 아동이 첫째 또는 둘째였다.

연령은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연령별로 성별과 출생순위의 분포는 유사하였다. 응답자 아동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각 지역 규모에서 성별과 출생 순위의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읍·면지역에서 남아 및 셋째 이상 출생순위의 아동이 다소 많았다.

〈표 IV-1-2〉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전체	51.6	48.4	45.6	43.1	10.0	1.3	100.0(1,820)
아동연령							
0세	50.8	49.2	43.0	44.8	10.2	2.1	100.0(301)
1세	52.2	47.8	42.7	41.2	14.9	1.1	100.0(300)
2세	54.0	46.0	41.7	46.0	11.9	0.4	100.0(300)
3세	56.8	43.2	46.3	42.0	11.0	0.7	100.0(301)
4세	51.5	48.5	50.3	41.8	6.3	1.6	100.0(300)
5세	44.8	55.2	49.4	43.1	5.9	1.6	100.0(318)
지역규모							
대도시	50.9	49.1	47.3	45.7	6.7	0.3	100.0(822)
중소도시	51.0	49.0	41.9	44.1	12.3	1.6	100.0(655)
읍·면지역	54.4	45.6	48.7	35.1	13.3	2.9	100.0(343)

모의 특성에 따라 아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표 IV-1-3 참조), 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성별 분포는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학력별 중 기타에 해당하는 모의 자녀의 경우 여아가 62.2%로 다소 많았다. 모 학력에 따른 출생 순위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학력 수준에서 첫째아와 둘째아가 비교적 유사한 빈도로 보고되었으나, 모 학력이 기타일 경우 첫째아가 76.5%로 다수였다. 모 취업 상태에 따라서도 자녀 성별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나, 육아휴직 및 기타 모의 자녀는 여아가 약 60%로 다소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모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첫째아와 둘째아가 비교적 유사한 빈도로 보고되는 가운데, 모가 기타 취업상태인 경우 첫째아가 76.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V-1-3〉 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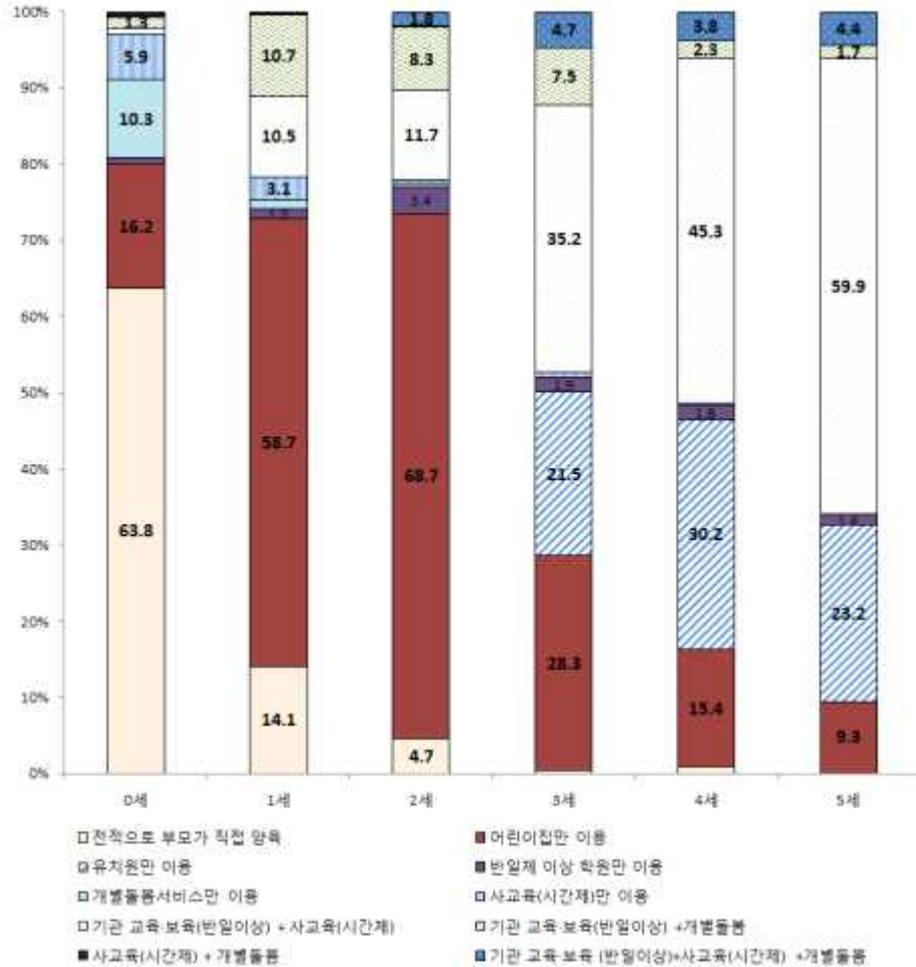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전체	51.6	48.4	45.6	43.1	10.0	1.3	100.0(1,820)

(표 IV-1-3 계속)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전체	51.6	48.4	45.6	43.1	10.0	1.3	100.0(1,820)
학력							
고졸이하	56.2	43.8	41.3	39.8	15.9	3.0	100.0(405)
전문대졸	55.3	44.7	39.7	47.3	12.5	0.5	100.0(355)
4년제대졸	48.1	51.9	49.3	42.6	7.2	0.9	100.0(984)
대학원이상	57.0	43.0	46.9	49.4	3.7	0.0	100.0(72)
기타	37.8	62.2	76.5	23.5	0.0	0.0	100.0(4)
취업상태							
취업	51.8	48.2	46.6	43.4	8.3	1.7	100.0(708)
육아휴직,일시휴직	38.6	61.4	57.7	33.4	8.3	0.6	100.0(106)
학업 및 취업준비	55.8	44.2	57.2	35.2	7.6	0.0	100.0(32)
전업주부(육아및가사)	52.8	47.2	43.1	44.4	11.5	1.0	100.0(971)
기타	37.8	62.2	76.5	23.5	0.0	0.0	100.0(4)

아동 연령에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의 조합 방식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참조). 0세에는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63.8%), 1세 이후로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1세에는 58.7%, 2세에는 68.7%로 보고되었다. 한편 3세 이후로는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 및 기관보육·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3, 4, 5세에는 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21.5%, 30.2%, 23.2%였으며, 기관교육·보육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비율은 각각 35.2%, 45.3%, 59.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3, 4, 5세에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28.3%, 15.4%, 9.3%로 차츰 감소하였다.



주 : 0세는 301명, 1세 300명, 2세 300명, 3세 301명, 4세 300명, 5세 518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그림 IV-1-1] 아동 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

2) 가구 특성

응답 가구의 특성을 가구원, 가구 형태, 지역규모, 가구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가구원 수에서는 4인 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고, 3인 이하의 가구가 31.9%로 뒤를 이었다. 가구 형태에서는 부부+자녀 형태가 92.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조부모+부모+자녀

(5.0%) 및 한 조부모+부모+자녀(1.5%) 등 3세대 가정이 소수 있었다.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 거주 가구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36.4%) 및 읍면지역(18.5%)이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에서는 300~399만원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원이라는 응답이 21.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서는 대다수가 미수급 가구로, 수급 가구는 0.7%였다.

〈표 IV-1-4〉 응답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312)	전체	100.0	(1,312)
가구원 수			지역규모		
3인이하	31.9	(418)	대도시	45.1	(592)
4인	49.4	(648)	중소도시	36.4	(478)
5명	14.5	(190)	읍면지역	18.5	(242)
6명이상	4.3	(57)	가구소득		
가구 형태			199만원이하	1.7	(22)
조부모+부모+자녀	5.0	(66)	200~299만원	14.5	(190)
조부모+한부모+자녀	0.1	(2)	300~399만원	34.9	(458)
한 조부모+부모+자녀	1.5	(20)	400~499만원	21.6	(283)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0.4	(5)	500~599만원	16.0	(210)
부부+자녀	92.0	(1207)	600~699만원	4.7	(62)
한부모+자녀	0.9	(11)	700만원이상	6.6	(87)
(한)조부모+자녀	0.1	(1)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수급 가구	0.7	(9)
			미수급 가구	99.3	(1303)

응답 가구의 자녀수를 지역 규모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전체 가구 중 2자녀 가구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33.5%로 두 번째였다. 전체 평균 자녀수는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평균 자녀수에서 영아 및 유아 자녀는 0.7명, 초등 이상의 자녀는 0.4명으로 영아 및 유아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지역 규모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자녀수가 1명 및 2명인 경우 대도시 거주 가구가 각각 43.5%, 50.5%로 가장 많았으나,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소도시 거주 가구가 42.4%로 다수였다. 연령별 평균 자녀수는 각 지역 규모에서 영유아의 경우 0.6~0.8명, 초등 이상 자녀의 경우 0.4~0.5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른 가구 소득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399만원이

라는 응답이 35% 전후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평균 자녀수는 가구 소득 수준별로 영유아의 경우 0.5~0.8명, 초등 이상 자녀의 경우 0.3~0.5명으로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표 IV-1-5〉 응답 가구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총 자녀수(%)			평균 자녀수(명)				계	(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영아	유아	초등이상		
전체	33.5	51.5	15.0	1.8	0.7	0.7	0.4	100.0	(1,312)
지역규모									
대도시	43.5	50.5	30.4	1.8	0.7	0.7	0.4	45.1	(592)
중소도시	34.2	36.1	42.4	1.9	0.6	0.8	0.5	36.4	(478)
읍·면지역	22.3	13.4	27.2	1.9	0.7	0.7	0.5	18.5	(242)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7	1.7	1.8	1.8	0.7	0.8	0.3	1.7	(22)
200~299만원	16.4	11.2	21.4	1.9	0.8	0.7	0.4	14.5	(190)
300~399만원	37.0	34.0	33.1	1.8	0.7	0.7	0.4	34.9	(458)
400~499만원	16.7	25.7	18.0	1.9	0.7	0.7	0.4	21.6	(283)
500~599만원	15.7	15.7	17.8	1.9	0.6	0.8	0.5	16.0	(210)
600~699만원	5.6	4.4	3.7	1.8	0.5	0.8	0.5	4.7	(62)
700만원이상	6.8	7.3	4.2	1.8	0.5	0.9	0.4	6.6	(87)

3) 부모 특성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은 <표 IV-1-6>과 같다. 부와 모 모두 4년제 대졸이 각각 60.7%, 55.2%로 가장 많았다. 모 취업상태는 전업주부가 51.9%로 가장 많고, 취업이 40.1%로 뒤를 이었다. 부의 경우에는 취업이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V-1-6〉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

단위: %(명)

모 특성	계 (수)	부 특성	계(수)
전체	100.0(1,301)	전체	100.0(1,309)
학력		학력	
고졸이하	21.7(282)	고졸이하	17.3(226)
전문대졸	18.9(245)	전문대졸	13.8(181)
4년제대졸	55.2(719)	4년제대졸	60.7(794)
대학원이상	4.0(52)	대학원이상	7.4(97)
기타	0.2(3)	기타	0.8(11)

(표 IV-1-6 계속)

모 특성	계 (수)	부 특성	계(수)
전체	100.0(1,301)	전체	100.0(1,309)
취업상태		취업상태	
취업	40.1(521)	취업	98.7(1292)
육아휴직,일시휴직	6.1(79)	육아휴직,일시휴직	0.0(0)
학업 및 취업준비	1.7(23)	학업 및 취업준비	0.5(6)
전업주부(육아및가사)	51.9(675)	전업주부(육아및가사)	0.0(0)
기타	0.2(3)	기타	0.8(11)

주: 1) 부/모가 부재인 가구는 제외.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학력에 따른 평균 자녀수는 1.7명~2.0명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수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전업주부일 때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및 일시휴직인 경우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1-7〉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 수

모 특성	단위: %(명)				
	전체	영아	유아	초등이상	계(수)
전체	1.8	0.7	0.7	0.4	100.0(1,309)
학력					
고졸이하	2.0	0.6	0.8	0.6	21.7(284)
전문대졸	1.9	0.7	0.8	0.5	19.3(253)
4년제대졸	1.7	0.7	0.7	0.4	55.0(719)
대학원이상	1.7	0.7	0.7	0.3	4.0(52)
취업상태					
취업	1.8	0.5	0.8	0.5	40.5(530)
육아휴직,일시휴직	1.7	0.9	0.5	0.3	6.1(79)
학업 및 취업준비	1.8	0.6	0.8	0.3	1.7(23)
전업주부(육아및가사)	1.9	0.7	0.7	0.4	51.7(677)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가. 아동당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총 비용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을 알아본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전체 가구의 영유아 1인당 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6만9천원이었으며, 이 중 지출비용이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22만8천원이었다. 아동 연령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인 경우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많았다. 1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7.4%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용이 없다는 응답도 39.3%로 높았다. 2세에서는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으로 20.6%를 차지하였다. 3, 4, 5세에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총 교육·보육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아의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2%로 두 번째였다. 둘째아도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26.4%)이었다.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33.2%로 두 번째였다.

〈표 IV-2-1〉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계(수)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평균비용 (지출 아동)
전체	26.0	30.8	25.6	9.3	8.3	100.0(1,820)	16.9	22.8
아동 연령별								
0세	78.2	11.1	2.0	1.3	7.4	100.0(301)	8.4	38.6
1세	39.3	47.4	10.5	1.8	0.9	100.0(300)	4.5	7.4
2세	18.5	50.5	20.6	5.2	5.2	100.0(300)	11.5	14.1
3세	7.3	26.9	42.6	12.8	10.4	100.0(301)	23.6	25.5
4세	7.6	26.9	35.6	19.4	10.5	100.0(300)	25.4	27.5
5세	6.1	22.5	41.6	14.7	15.2	100.0(318)	27.5	29.2
$\chi^2(df), F$		892.3(20) ^{***}					42.4 ^{***}	23.5 ^{***}
출생순위								
첫째	23.2	29.5	26.2	10.5	10.7	100.0(830)	19.7	25.7
둘째	26.4	31.5	25.9	8.9	7.2	100.0(785)	15.8	21.5
셋째이상	35.9	33.2	22.4	5.6	2.9	100.0(205)	9.6	15.0
$\chi^2(df), F$		31.0(8) ^{***}					12.0 ^{***}	7.9 ^{***}

^{***} $p < .001$

총 교육·보육비용을 가구 특성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모가 휴직 상태 및 미취업 상태인 경우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5.0%, 30.1%로 가장 많았다.

<표 IV-2-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계(수)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평균비용 (지출 아동)
전체	26.0	30.8	25.6	9.3	8.3	100.0(1,820)	16.9	22.8
모의 취업상태								
취업	17.6	32.9	27.7	10.7	11.2	100.0(708)	20.9	25.3
휴직	45.0	29.5	11.4	5.6	8.5	100.0(106)	15.3	27.9
미취업	30.1	29.3	25.7	8.7	6.3	100.0(1003)	14.3	20.5
비해당	0.0	73.8	26.2	0.0	0.0	100.0(4)	6.2	6.2
$\chi^2(df, F)$	72.2(12)***						8.1***	3.9*
가구원수								
3명	35.6	26.3	17.9	8.1	12.1	100.0(431)	18.0	28.0
4명	22.3	32.0	27.4	10.5	7.7	100.0(982)	17.4	22.4
5명이상	24.8	32.5	29.5	7.5	5.7	100.0(407)	14.5	19.3
$\chi^2(df, F)$	52.4(8)***						2.0	6.3**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3.4	72.6	12.5	1.5	0.0	100.0(35)	6.7	7.8
200~299만원	40.2	28.2	24.9	5.7	1.0	100.0(272)	8.4	14.1
300~399만원	29.8	34.2	25.1	7.8	3.1	100.0(632)	11.1	15.8
400~499만원	21.6	32.9	29.7	10.9	4.8	100.0(400)	14.6	18.7
500~599만원	19.5	26.3	27.2	13.3	13.8	100.0(285)	22.1	27.4
600~699만원	16.4	19.7	26.0	8.9	29.0	100.0(80)	35.4	42.3
700만원이상	13.8	17.2	16.5	12.2	40.4	100.0(117)	53.6	62.1
$\chi^2(df, F)$	341.8(24)***						61.3***	51.9***
지역 규모								
대도시	23.9	28.8	26.7	7.8	12.8	100.0(822)	20.8	27.4
중소도시	24.4	31.1	25.7	12.9	5.9	100.0(655)	16.1	21.3
읍면지역	34.0	34.9	22.8	5.9	2.4	100.0(343)	9.0	13.6
$\chi^2(df, F)$	69.9(8)***						22.9***	18.8***

*** $p < .001$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3%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가구원이 4명 혹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32.0%, 32.5%로 가장 많았으며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7.4%, 29.5%로 두 번째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2.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0~299만원인 경우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40.2%로 다수였다. 한편 소득이 300~399만원, 400~499만원인 경우 지출 비용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34.2%, 32.9%로 가장 많았으며,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소득이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 비용이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29.0%, 40.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 규모에서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12.8%로 중소도시(5.9%) 및 읍면지역(2.4%)에 비해 많았다. 한편 중소도시에서 30~5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은 12.9%로 대도시(7.8%) 및 읍면지역(5.9%)에 비해 많았다.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표 IV-2-3>과 같다.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로 지출비용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서비스 이용에서,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출비용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만 이용할 경우에는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7%로 두 번째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10~30만원 미만이 25.8%로 두 번째였다.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역시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30.7%)이었다. 사교육(시간제)만 이용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82.2%로 대다수였다.

복수서비스 이용에서,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과 사교육(시간제)을 병행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과 개별돌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지출비용이 10만원 미만이

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으나,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23.8%)도 상당수 있었다. 사교육(시간제)과 개별돌봄을 병행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73.8%)이 대다수였다.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과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을 병행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50만원 이상(66.6%)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19.1%)이 뒤를 이었다.

〈표 IV-2-3〉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만원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평균비용 (지출아동)	계(수)
전체		26.0	30.8	25.6	9.3	8.3	22.8	100.0(1,820)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100.0	0.0	0.0	0.0	0.0	0.0	100.0(253)
단일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5.9	56.0	17.7	0.4	0.0	6.3	100.0(592)
	유치원만 이용	21.6	27.7	34.9	15.6	0.3	17.5	100.0(229)
복수 서비스 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0.0	14.1	25.8	24.9	35.2	42.2	100.0(32)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30.7	1.2	5.5	15.9	46.6	73.7	100.0(3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0	82.2	17.8	0.0	0.0	6.3	100.0(3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0.0	20.7	46.8	19.3	13.3	28.4	100.0(50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개별돌봄		7.1	28.6	23.4	17.0	23.8	34.1	100.0(9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0.0	26.2	0.0	0.0	73.8	52.9	100.0(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		0.0	6.6	19.1	7.7	66.6	86.2	100.0(47)
$\chi^2(df, F)$		1738.4(36)***					89.3***	

*** $p < .001$

〈표 IV-2-4〉 교육·보육서비스 시간제 사교육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만원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개수	이용 비율	평균비용(지출아동)
전체	100.0(582)	11.9
1개	50.3(293)	6.6
2개	25.1(146)	10.9
3개	13.6(79)	17.3
4개이상	11.0(64)	31.4

주: 사교육 개수는 시간제 학원,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등 세부적인 이용 개수를 모두 더하여 산출함.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58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0%였다.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개수는 1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0.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2개 25.1%, 3개 13.6%, 4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11.0%였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자가 시간제 사교육에 지출하는 월평균비용은 11만 9천원이었으며, 사교육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사교육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으로, 미지출하는 경우에는 결측 처리 하였다. 또한, 이용비용은 조사 과정에서는 년, 반기, 분기, 월 등 납입 주기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이다.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비용

가)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을 나타낸 것은 <표 IV-2-5>와 같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정규 교육·보육비로 차액보육료와 기타비용(현장 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있으며, 선택적 교육비로 특별활동비, 시간 연장형 보육(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주말보육 등) 이용비용이 있다. 각 서비스별로 이용하는 비중과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각기 다르므로, 특별활동과 시간 연장형 보육 등의 서비스 이용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이용비용은 비용을 지출하는 관측치 수와 이들이 지불한 비용 평균을 제시하였다. 모든 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아동의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0세아의 18.4%인 56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세(80.1%)와 2세(88.5%)는 매우 높은 이용 비율을 보였다. 3세 이후로는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치원 이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특별활동 이용자 비율은 49.8%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908명 중 1.6%는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의 월평균 비용은 6만 5천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정규 교육·보육비 중 보육료로 월평균 4만 2천원, 기타 비용으로는 월평균 3만 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특별활동비로 월평균 5만 8천원, 시간연장형 보육비로 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0세 3만5천원, 1세 4만3천원, 2세 5만7천원으로 영아기에 비교적 낮은 비용 수준을 보였으며, 3세 8만4천원, 4세 9만원, 5세는 7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율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어린이집	특별 활동	시간 연장형 보육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시간 연장형 보육	
전체	49.9(908)	49.8	1.6	4.2(88)	3.3(570)	5.8(357)	30.4(6)	6.5(671)
아동 연령별								
0세	18.4(56)	9.5	2.3	-	2.1(18)	7.9(4)	-	3.5(20)
1세	80.1(240)	27.4	1.4	-	3.4(95)	4.0(36)	39.9(2)	4.3(114)
2세	88.5(266)	55.8	1.9	-	2.8(181)	5.6(120)	20.0(2)	5.7(210)
3세	54.4(164)	66.0	0.3	4.4(53)	3.8(128)	6.1(95)	-	8.4(153)
4세	33.9(102)	66.1	3.2	4.5(19)	3.8(79)	7.3(55)	-	9.0(91)
5세	25.5(81)	70.6	1.4	3.2(16)	3.2(69)	5.3(47)	16.4(2)	7.1(83)
F	-	-	-	0.6	2.7*	4.8***	0.2	17.4***

* $p < .05$, *** $p < .001$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 2)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별활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 3)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 4)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미취업 모의 경우가 취업모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 한편, 취업모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이 평균 6만원인데 반해, 미취업모 가구는 평균 7만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6> 모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이용 비율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어린이집	특별 활동	시간 연장형 보육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시간 연장형 보육	
모의 취업상태								
취업	59.9(424)	48.4	2.2	3.8(36)	3.1(242)	5.3(150)	30.4(6)	6.0(293)
휴직	51.2(54)	31.3	4.0	1.9(3)	4.5(31)	6.6(17)	-	7.0(34)
미취업	42.7(428)	53.7	0.6	4.6(49)	3.3(292)	6.1(190)	-	7.0(339)
<i>F</i>	-			2.7	1.7	2.2	-	1.9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각 모 취업상태별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별활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4)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기관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은 <표 IV-2-7>과 같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민간어린이집이 7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이 6만7천원으로 두 번째였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5만3천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저렴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세부 내역별 지출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기관으로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없으나, 기타 비용이 일부 지출되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 4만1천원, 가정어린이집 6만3천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였는데, 차액보육료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 87명으로 대부분이고, 가정어린이집은 1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비용은 직장어린이집에서 다소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활동 비용은 전반적으로 5만원대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6만3천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V-2-7〉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비용

단위: 만원,(명)

설립유형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수)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비	시간 연장형 보육		
국공립	-	2.5(150)	5.4(98)	-	5.3(169)	(259)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	3.8(72)	5.6(50)	20.0(3)	6.5(90)	(77)
민간	4.1(87)	3.6(277)	6.3(163)	15.0(2)	7.4(325)	(404)
가정	6.3(1)	3.6(55)	5.1(38)	-	6.0(70)	(139)
직장·부모협동	-	4.7(16)	4.9(8)	60.0(1)	6.7(17)	(29)
<i>F</i>	0.7	4.3 ^{***}	1.60		5.2 ^{***}	

^{***} $p < .001$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 2)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별활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 3)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 4)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수와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과목 당 월평균 비용은 2만1천원이었으며 총 비용은 월평균 5만8천원이었다. 월평균 총 비용의 최대값은 31만원, 최소값은 5천원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특별활동개수는 3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5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11.6%로 가장 적었다.

〈표 IV-2-8〉 특별활동 개수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수), 만원

	이용 비율(수)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이용비용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452)	2.1	0.5	5.8	31.0
1개	13.4(61)	2.8	0.5	2.8	10.0
2개	24.3(110)	2.5	2.0	5.0	21.5
3개	33.0(149)	2.0	1.5	6.1	30.0
4개	17.6(80)	1.8	2.0	7.0	31.0
5개이상	11.6(52)	1.3	2.4	7.2	14.0
<i>F</i>	-	9.1***	13.4***		

*** $p < .001$

주: 1) 이용 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특별활동개수에 따라 과목 당 평균 비용 및 총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목당 평균 비용은 특별활동개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별활동개수가 1개인 경우 2만 8천원인데 반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만 3천 원이었다. 한편 특별활동 총 비용은 특별활동 개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별활동개수가 1개일 때 2만 8천원, 5개 이상일 때 7만 2천 원이었다.

〈표 IV-2-9〉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평균이용 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2.9	2.1	0.5	5.8	31.0	(452)
아동연령별						
0세	1.7	5.8	3.0	7.9	20.0	(5)
1세	2.0	2.2	1.0	4.0	21.5	(66)
2세	2.9	2.1	0.5	5.6	12.0	(148)
3세	3.4	2.0	0.7	6.1	30.0	(108)
4세	3.2	2.3	2.0	7.3	31.0	(67)
5세	3.3	1.7	1.0	5.3	17.1	(57)
<i>F</i>	10.3***	5.4***	4.8***			

*** $p < .001$

주: 1)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은 〈표 IV-2-9〉와 같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은 평균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었

다. 아동 연령에 따라 특별활동의 평균 이용개수, 과목당 평균 비용, 월평균 총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이용 개수는 0세의 경우 평균 1.7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였으나, 3, 4, 5세가 되면 평균 3.2~3.4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과목당 평균비용은 0세에서 5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1세 이후로 과목당 평균비용은 2만원대로 떨어졌다가 5세경에는 1만 7천원으로 더욱 낮아졌다. 월평균 총 비용은 0세(7만 9천원) 및 4세(7만 3천원)에서 가장 높게 보고되었으며, 1세(4만원)와 5세(5만3천원), 2세(5만 6천원) 순으로 낮았다.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은 <표 IV-2-10>과 같다. 특별활동의 이용 개수는 월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와 200-299만원인 경우 각각 3.5개 및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600~699만원일 때 2.6개로 가장 적었다.

과목당 평균비용 및 총 비용에서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1만 7천원~2만 3천원으로, 소득이 400~499만원일 때 2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총 비용은 4만 7천원~6만 8천원으로, 소득이 200~299만원일 때 6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2-10>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5	1.7	2.0	5.3	30.0	(23)
200~299만원	3.4	2.0	0.7	6.8	31.0	(139)
300~399만원	2.9	2.1	0.7	5.7	18.8	(290)
400~499만원	2.9	2.3	1.0	5.7	21.5	(230)
500~599만원	2.8	2.2	0.5	5.4	20.0	(146)
600~699만원	2.6	1.9	2.0	4.7	13.0	(40)
700만원이상	3.2	1.7	2.5	4.7	9.0	(41)
<i>F</i>	2.5*	0.7		19.2		

* $p < .05$

주: 1)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다)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비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종류별 이용비율 및 비용은 <표 IV-2-11>과 같다.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내외로 매우 소수인데,

서비스 종류 중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이 나타난 것은 야간보육(1.2%)이었다. 한편, 이용비용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주말보육으로 월평균 4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종류별 이용비율 및 비용

단위: %, 만원, (명)

	야간보육		휴일보육		주말보육		24시간보육		(수)
	이용비율	평균비용	이용비율	평균비용	이용비율	평균비용	이용비율	평균비용	
전체	1.2	10.3	0.5	20.0	0.3	40.0	0.1	0.0	(908)

주: 1)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2) 유치원 이용 실태 및 비용

가) 유치원 총 이용비용

아동 특성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을 나타낸 것은 <표 IV-2-12>와 같다. 전체 아동 중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28.2%였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65.2%가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방과후 과정에는 17.3%가 참여하였다.

유치원 이용비용은 항목 면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사하지만, 수업료 상한제가 시행되어 인상률에 제한이 생기긴 했으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납부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자 특징이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 오후 시간동안 방과 후 과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과 별도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전체 유치원 이용자 513명 중에서 50명 있었다. 유치원 이용비용도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월평균을 구했는데, 유치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19만4천원이었다. 세부 지출을 살펴보면, 정규 교육비의 경우 수업료로 월평균 15만7천원, 기타 비용으로 월평균 5만4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택적 교육비의 경우 특성화활동비로 월평균 8만4천원, 방과후 과정으로 6만1천원을 지출하였다. 유치원 이용비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총액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비용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표 IV-2-12〉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율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정규 수업료	교육비 기타 비용	선택적교육비 특성화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	
전체	28.2(513)	65.2	17.3	15.7(218)	5.4(290)	8.4(212)	6.1(50)	19.4(378)
아동 연령별								
3세	39.5(119)	52.2	18.0	16.4(67)	7.3(69)	8.0(48)	5.6(11)	22.3(97)
4세	59.9(180)	66.4	14.3	14.3(78)	4.9(112)	9.7(78)	7.0(15)	19.1(133)
5세	67.3(214)	71.4	19.5	16.5(73)	4.8(109)	7.5(90)	5.9(24)	18.0(148)
F	-	-	-	0.7	1.8***	2.9	0.4	3.1 [†]

* $p < .05$, *** $p < .001$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 3)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어린이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이 많아 질수록 이용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총 이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서 <표 IV-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3, 4, 5세 유아의 이용비용과 비교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평균 이용비용이 1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평균 비용 차이는 3세 13만9천원, 4세 10만1천원, 5세 10만9천원이었으며, 기타비용이나 특성화활동비도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이 약간 높긴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주로 유치원의 수업료 차이에 기인한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 비율이 30.4%로 미취업모(28.1%)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율도 취업모일 때 76.3%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취업모 18만9천원, 미취업모 19만8천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V-2-13〉 모의 취업상태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이용 비율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방과후 과정	정규 교육비		선택적교육비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			
모의 취업상태								
취업	30.4(215)	76.3	26.3	14.9(88)	5.3(120)	8.1(96)	5.7(27)	18.9(162)
휴직	13.8(15)	41.0	2.3	12.4(4)	6.6(5)	15.0(4)	-	21.9(7)
미취업	28.1(282)	58.1	11.4	16.3(126)	5.4(164)	8.4(112)	6.7(23)	19.8(208)
<i>F</i>				1.3	0.2	2.9	0.6	0.5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표 IV-2-14〉 유치원 설립유형별 총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설립유형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수)
	정규 교육비		선택적교육비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과정		
국공립	-	2.4(77)	4.4(47)	3.2(6)	4.8(90)	(192)
사립	15.7(218)	6.5(213)	9.6(165)	6.5(44)	23.7(288)	(320)
<i>t</i>		-10.8***	-8.6	-4.5	-23.2	

*** $p < .001$

-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설립유형에 따른 유치원 월평균 이용비용은 국공립의 경우 4만8천원, 사립의 경우 23만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부 지출별로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비의 이용비용이 월평균 4만4천원으로 가장 높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정규 교육비의 수업료가 월평균 1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과 방과후 과정 이용비용이 국공립 유치원의 2배가량 많았으며, 기타 비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은 3개의 특성화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6.7%로 가장 많았으며, 2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22.1%로 두 번째였다. 특성화활동 개수에 따라 과목당 평균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특성화활동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성화활동을 2개 이용하는 경우 과목당 월평균비용은 6만 9천원이었으며,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 1만 5천원이었다. 한편, 특성화활동을 2개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은 월평균 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개 이용하는 경우 6만 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2-15〉 특성화프로그램 개수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명), 만원

	이용 실태 비율(수)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334)	3.5	0.5	8.4	40.5
1개	12.8(43)	6.9	1.0	6.9	20.0
2개	22.1(74)	5.0	1.2	10.0	25.9
3개	26.7(89)	2.8	1.7	8.3	31.9
4개	18.1(61)	1.8	0.5	7.1	23.5
5개이상	20.2(68)	1.5	2.8	9.2	40.5
<i>F</i>		27.8***		2.1	

*** $p < .001$

아동연령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은 <표 IV-2-16>과 같다. 특성화활동의 평균 이용개수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3.2~3.5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세에서 평균 이용 개수가 3.5개로 가장 많았다. 특성화활동의 월평균 총 비용은 연령에 따라 7만 5

천원~9만 7천원이었으며, 4세에서 9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과목당 평균비용은 연령에 따라 2만 9천원~4만 4천원으로 보고되었는데, 4세에서 4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2-16> 아동연령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3	3.5	0.5	8.4	40.5	(334)
아동연령별						
3세	3.5	3.2	1.0	8.0	30.0	(62)
4세	3.2	4.4	1.0	9.7	40.5	(119)
5세	3.3	2.9	0.5	7.5	31.9	(153)
<i>F</i>	0.7	4.3*		2.9		

* $p < .05$
주: 1)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표 IV-2-17> 가구소득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2	1.9	2.7	5.7	7.5	(6)
200~299만원	3.6	1.9	2.0	6.4	10.0	(36)
300~399만원	3.3	3.7	0.5	8.6	40.5	(119)
400~499만원	3.3	3.8	2.5	9.0	25.9	(78)
500~599만원	2.9	3.9	1.0	8.4	30.0	(62)
600~699만원	2.8	3.6	2.0	8.6	24.0	(17)
700만원이상	4.0	2.6	2.0	8.9	23.5	(17)
<i>F</i>	1.4	1.3	-	0.6	-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을 가구소득별로 나타낸 것은 <표 IV-2-17>과 같다.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에서 특별히 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 가구는 특성화활동을 평균 2.8~4.0개 이용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600~699만원 일 때 2.8개로 가장 적었다.

특별활동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1만 9천원~3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

득이 500~599만원일 때 과목당 평균비용이 3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 혹은 200~299만원으로 낮을 때 1만 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성화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은 5만 7천원~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비용은 가구 소득이 400~499만원일 때 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99만원 이하일 때 5만 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유형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은 <표 IV-2-18>과 같다. 설립 유형에 따라 알아본 결과, 특성화프로그램 평균 이용개수는 국공립의 경우 3.3개, 사립의 경우 3.2개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과목당 월평균비용은 국공립의 경우 1만 4천원, 사립의 경우 4만 1천원이었으며, 월평균 이용비용은 국공립에서 4만 4천원, 사립에서 9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8> 기관 유형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설립유형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국공립	3.3	1.4	1.0	4.4	10.0	(122)
사립	3.2	4.1	0.5	9.6	40.5	(212)
<i>F</i>	0.1	26.1 ^{***}	-	29.6 ^{***}	-	

^{***} $p < .001$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3) 사교육 실태 및 비용

가) 반일제 이상 학원

(1) 반일제 이상 학원 총 이용비용

반일제 이상 학원 총 이용비용은 <표 IV-2-19>와 같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이용비용의 항목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유사하나, 대부분의 경우 비용을 지출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전체 76명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비용 지출 아동의 수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영어학원(45.0%)이었으며, 종교기관(20.4%)과 놀이학원(19.9%)이 뒤를 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이용 비율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0세 혹은 1세인 경우에는 놀이학원의 이용비율이 각각 3.3%, 3.9%로 가장 높았으나, 2세에는 종교기관(10.7%)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4세 및 5세에는 영어학원의 이용비율이 각각 13.3%, 22.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의 경우 그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이러한 비율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표 IV-2-19〉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단위: %(명)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종교기관	기타/ 공공기관	(수)
전체	45.0	4.9	19.9	8.3	20.4	1.6	(76)
아동연령별							
0세	-	-	3.3	-	-	1.2	(3)
1세	-	1.0	3.9	-	-	-	(4)
2세	-	1.4	5.2	4.4	10.7	-	(16)
3세	9.1	0.5	3.4	2.3	4.5	-	(15)
4세	13.3	0.6	2.8	1.3	1.8	-	(15)
5세	22.6	1.4	1.3	0.4	3.4	0.3	(22)
$\chi^2(df)$							71.4(25)**

*** $p < .001$

주: 1) 선교원 등은 종교기관에 속하며, 음악학원은 응답자가 없어서 표에 제시하지 않음.

2) 이용 비율은 전체 이용자 대비 비율로, 모든 연령의 이용 비율을 합산하여 100%임.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38.1%가 특별활동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일반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7%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61만 8천원이었다. 세부 지출에서는 교육비가 월평균 49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별활동비가 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연령에 따라 50만 9천원~7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1세에서 평균 26만 2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4세에서 7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 지출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에서 교육비의 이용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25만 4천원~63만 7천원이었다. 4세일 때 월평균 교육비가 63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 비용은 월평균 5천원~16만 7천원이었으며, 4세일 때 기타 비용 지출이 1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별활동비는 월평균 0~16만 6천원으로, 5세일 때 16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종일반비는 0~2세에서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3~5세에서 월평균 7만원으로 동일하였다.

〈표 IV-2-20〉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비율			이용비용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반일제 이상학원	특별 활동	종일반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전체	4.2(76)	38.1	2.7	49.9	11.8	13.0	7.0	61.8
아동연령별								
0세	1.1(3)	-	-	50.5	0.5	-	-	50.9
1세	1.3(4)	20.9	-	25.4	1.9	2.0	-	26.2
2세	5.5(16)	62.9	-	32.5	9.4	10.8	-	45.0
3세	5.0(15)	36.7	5.3	51.0	12.6	14.2	7.0	64.6
4세	5.0(15)	23.1	5.7	63.7	16.7	10.3	7.0	76.0
5세	7.0(22)	39.6	1.8	56.7	12.5	16.6	7.0	70.6
<i>F</i>	-	-	-	1.9	1.2	0.4	-	2.1

주 :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월평균 이용비용은 기관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영어학원이 월평균 84만 1천원으로 가장 높은 총액 평균을 나타냈으며, 선교원 등 기타기관이 23만 2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영어학원의 이용비용이 비싼 이유는 높은 교육비에 기인한다. 한편, 미술학원은 기타 비용이 17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2-21〉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 비율			이용비용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반일제 이상학원	특별 활동	종일 반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전체	4.2(76)	38.1	2.7	49.9	11.8	13.0	7.0	61.8
기관종류								
영어학원	1.9(34)	19.6	2.4	69.1	16.1	19.9	7.0	84.1
미술학원	0.2(4)	61.4	33.1	39.7	17.3	10.4	7.0	60.9
놀이학원	0.8(15)	47.8	0.0	50.0	12.9	10.3	0.0	61.8
체육학원	0.3(6)	51.2	0.0	31.8	5.5	15.0	0.0	43.6
선교원 등 기타	0.9(17)	57.1	0.0	18.9	4.4	6.7	0.0	23.2
$\chi^2(d.f), F$	-	-	-	9.0 ^{***}	3.7 [*]	0.9	-	11.2 ^{***}

* $p < .05$, *** $p < .001$

주: 1) 선교원 등은 기타기관에 속하며, 음악학원은 응답이 하나도 없어 제외함.

2)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2)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을 살펴보면 <표 IV-2-22>와 같다. 과목당 월평균 이용비용은 월 3만 6천원이었으며, 총 비용은 월평균 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개수는 2개를 이용하는 경우(33.6%)와 4개를 이용하는 경우(26.5%)가 가장 많았다.

<표 IV-2-22> 특별활동 개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수), 만원

	이용 상태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비율(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29)	3.6	2.0	13.0	41.0
이용개수					
1개	14.1(4)	9.9	3.5	10.7	20.0
2개	33.6(10)	4.3	4.0	10.8	17.0
3개	9.9(3)	1.3	2.0	4.5	12.0
4개	26.5(8)	1.1	6.0	15.4	30.0
5개이상	15.8(5)	2.1	8.0	31.5	41.0
<i>F</i>	-	3.7*	-	3.5*	-

* $p < .05$

주: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특별활동을 1개 이용하는 경우 과목당 평균 비용은 월평균 9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4개를 이용하는 경우 1만 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별활동을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총 비용은 31만 5천원에 달했으며, 3개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4만 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은 <표 IV-2-23>과 같다. 특별활동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 3.4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과목당 3만 6천원, 총액 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이용 개수를 학원 종류에 따라 알아본 결과, 영어학원의 평균 이용 개수가 4.9개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학원의 평균 이용 개수가 1.9개로 가장 적었다. 과목당 평균 비용에서 학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육학원이 과목당 월평균 비용이 6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성화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은 영어학원이 19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학원이 15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표 IV-2-23〉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4	3.6	2.0	13.0	41.0	(29)
기관종류별						
영어학원	4.9	4.4	3.5	19.9	41.0	(7)
미술학원	2.2	5.4	2.0	10.4	17.0	(2)
놀이학원	2.6	5.1	2.5	10.3	21.0	(7)
체육학원	1.9	6.1	15.0	15.0	15.0	(3)
선교원 등 기타	3.8	0.5	3.0	6.7	10.0	(10)
<i>F</i>	1.7	1.7		0.9		

주: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나) 시간제 사교육

(1)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시간제 사교육에는 시간제 학원, 가정내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 교육 등이 포함된다.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율 및 총 비용을 나타낸 것은 〈표 IV-2-24〉와 같다. 전체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학습지로 19.3%의 영유아가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시간제 학원은 13.4%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유아들은 평균 2개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사교육비용은 평균 11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형태 중 통신 교육을 제외하고 아동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5세아들의 시간제 학원 이용 비율은 41.9%에 달했으며, 4세(5.2%)와 5세(5.1%)는 개인 및 그룹 지도 비율도 다른 연령에 비해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학습지의 경우에는 3세아부터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교육 이용 개수에서는 0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 때 이용 개수도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1세일 때 사교육 평균 이용 개수가 1.1개로 가장 낮았으며, 5세일 때 평균 이용 개수가 2.4개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 이용비용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5세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평균 15만 8천원이었다.

〈표 IV-2-24〉 아동 연령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단위: %(명)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전체	13.4	2.6	19.3	3.0	1.2	2.0	11.8	(1,820)
아동연령별								
0세	4.6	1.1	0.8	1.2	0.0	1.3	6.2	(301)
1세	2.2	1.2	7.4	2.3	1.0	1.1	5.2	(300)
2세	1.7	1.3	8.6	2.0	1.3	1.5	8.8	(300)
3세	7.4	1.6	28.2	6.8	1.6	1.5	7.9	(301)
4세	21.1	5.2	33.4	2.8	1.7	2.2	13.2	(300)
5세	41.9	5.1	36.2	2.9	1.5	2.4	15.8	(318)
$\chi^2(d.f), F$	335.4(5)***	23.8(5)**	228.5(5)**	18.6(5)**	5.2(5)	16.1***	14.2***	

** $p < .01$, *** $p < .001$

주: 1) 비율은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 이용 개수는 숫자를 합산해서 평균함. 예를 들어, 시간제 학원 2개와 학습지 2개를 이용하는 경우 4개임.

2)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구 소득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학원은 소득이 600~699만원일 때 이용 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고, 199만원 이하일 때 1.4%로 매우 낮았다. 개인 및 그룹지도도 소득이 600~699만원일 때 9.9%로 가장 높았으며, 199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자가 없었다. 학습지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3.7%가 이용하여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7%에 그쳤다.

사교육 평균 이용 개수는 가구소득이 600~699만원일 때 2.5개로 가장 높았으며 700만원 이상일 경우가 평균 2.4개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의 월평균 이용비용도 높았는데,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때 18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99만원 이하일 때 6만 4천원에 그쳤다.

〈표 IV-2-25〉 가구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만원(명)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가구소득별								
199만원이하	1.4	0.0	7.7	3.4	5.9	1.7	6.4	(35)
200~299만원	7.5	1.4	15.3	1.4	2.6	1.8	9.7	(272)
300~399만원	10.6	1.6	18.0	2.2	1.0	1.8	10.0	(632)
400~499만원	12.1	3.0	21.7	4.0	0.6	2.0	11.5	(400)
500~599만원	18.3	0.9	20.7	1.1	0.4	1.8	11.1	(285)
600~699만원	29.0	9.9	23.4	10.1	1.4	2.5	17.5	(80)
700만원이상	28.3	9.0	23.7	7.3	1.3	2.4	18.7	(117)
$\chi^2(df, F)$	62.9(6)***	42.0(6)***	10.4(6)	30.7(6)***	13.7(6)*	3.0**	7.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이용비율은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 이용 개수는 숫자를 합산해서 평균함. 예를 들어, 시간제 학원 2개와 학습지 2개를 이용하는 경우 4개임.

2)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이용 서비스 종류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비용은 <표 IV-2-26>과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응답자 중 50.3%가 1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개(25.1%) 또는 3개(24.6%)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종류별로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구활동이나 통신교육의 경우에는 1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과목당 평균 이용비용은 시간제 학원이 9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가 3만 9천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에서 영유아 1인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평균 11만 8천원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이 13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목당 이용비용이 가장 저렴한 학습지는 상대적으로 2개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평균 6만8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2-26〉 이용 서비스 종류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비용

단위: %, 만원,(명)

	이용 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수)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전체	50.3	25.1	24.6	2.0	6.2	11.8	(582)
서비스 종류별							
시간제 학원	67.4	20.2	12.4	1.5	9.1	13.3	(244)
개인 및 그룹지도	70.2	13.7	16.1	1.5	8.9	13.0	(47)
학습지	43.7	39.1	17.2	1.8	3.9	6.8	(350)
교구활동	89.5	9.5	1.0	1.1	9.7	10.2	(54)
통신교육	100.0	0.0	0.0	1.0	4.5	4.5	(22)

주: 이용개수는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2)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시간제 학원의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을 항목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IV-2-27>과 같다.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2.7%가 체육 관련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37.0%가 미술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각 항목에서 이용하는 평균 과목 수는 대부분 1.0개였고, 한글의 경우 1.2개로 다소 많았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체육이 3.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악이 3.2회로 많았다. 평균 주당 이용 시간에서도 체육이 평균 2.1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이 1.9시간으로 두 번째였다.

시간제 학원의 과목에 따라 교육기관 유형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모든 항목에 사설 학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한글 91.6%, 미술 89.1% 등). 단, 기타에서는 사설문화센터의 비율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영어의 경우 사회복지기관(14.7%), 교구 활동의 경우 사설문화센터(37.8%)의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시간제 학원의 비용 지불 여부에 대해서 대다수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비용은 과학이 10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어(10만 1천원) 및 체육(1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재료비의 월평균 비용은 기타에서 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이 2천원으로 두 번째였다.

〈표 IV-2-27〉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 개, 회, 시간, %, 만원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 활동	과학	수학	기타
이용 비율	8.1	9.2	37.0	52.7	16.5	3.4	0.6	8.1	8.4
평균 과목 수	1.2	1.0	1.0	1.0	1.0	1.0	1.0	1.0	1.1
평균 주당 이용 횟수	2.6	2.8	2.1	3.7	3.2	1.1	2.3	2.1	1.1
평균 주당 이용 시간	1.2	1.8	1.4	2.1	1.9	1.0	0.9	1.2	0.9
사설학원	91.6	67.9	89.1	80.8	79.6	62.2	100.0	95.6	20.9
교육 공공기관	0.0	6.1	5.1	3.4	6.3	0.0	0.0	4.4	11.5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0.0	14.7	1.8	6.0	4.0	0.0	0.0	0.0	8.1
유형 사설문화센터	8.4	2.0	3.7	9.8	10.1	37.8	0.0	0.0	59.4
기타	0.0	9.3	0.4	0.0	0.0	0.0	0.0	0.0	0.0
비용 지불안함	1.1	1.2	5.0	7.1	2.2	0.5	0.1	1.1	1.1
지불함	98.9	98.8	95.0	92.9	97.8	99.5	99.9	98.9	98.9
월평균 비용	7.2	10.1	8.7	10.0	9.4	8.2	10.6	9.9	4.4
재료비 월평균 비용	0.0	0.1	0.2	0.1	0.1	0.0	1.1	0.0	0.8

주: 전체 시간제 학원 이용자 24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3)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1.9%가 한글 지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술 지도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0.1%로 두 번째였다. 과목별 평균 과목수는 1.0~1.5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이 평균 1.5개로 가장 많았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모든 과목에서 1.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이용 시간은 과목에 따라 0.8~1.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 및 수학이 1.2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비용은 음악이 19만 5천원으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미술(9만 9천원), 과학(8만 9천원)이 뒤를 이었다. 재료비 월평균 비용은 수학이 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8천원)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표 IV-2-2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개, 회, 시간, 만원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기타
이용비율	31.9	26.4	30.1	6.2	11.5	3.2	24.8	15.4
평균 과목 수	1.2	1.1	1.3	1.0	1.5	1.0	1.3	1.0
평균 주당 이용 횟수	1.0	1.0	1.0	1.0	1.0	1.0	1.0	1.0
평균 주당 이용 시간	0.9	1.0	1.1	0.7	1.2	0.8	1.2	0.8
월평균 비용	5.1	8.1	9.9	3.3	19.5	8.9	7.3	7.0

(표 IV-2-28 계속)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기타
재료비 월평균 비용	0.4	0.0	0.8	0.0	0.0	0.0	1.0	0.0

주: 전체 가정내 개인 및 그룹지도 서비스 이용자 47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4) 가정 내 학습지 이용비용

가정 내 학습지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86.7%가 한글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학이 53.2%로 뒤를 이어, 학습지의 경우 주로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지 방문교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과목에서 86.3~100.0%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가 방문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영어가 1.6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이 1.2회, 그 외 과목의 경우 1.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이용 시간은 과목별로 20분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영어가 5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한글로 3만 9천원, 수학 3만8천원이었다.

〈표 IV-2-2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 회, 시간, 개, 만원

	한글	영어	수학	한자	기타	
이용 비율	86.7	10.5	53.2	5.2	14.8	
방문교사 여부	있음	93.6	86.5	93.3	100.0	86.3
	없음	6.4	13.5	6.7	0.0	13.7
평균 주당 이용 횟수	1.1	1.6	1.2	1.1	1.1	
평균 주당 이용 시간	0.3	0.4	0.3	0.3	0.4	
평균 이용 개수	1.0	1.0	1.0	1.1	1.1	
월평균 비용	3.9	5.4	3.8	3.0	4.1	

주: 전체 학습지 이용자 350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5) 교구활동 이용비용

교구활동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54명으로 관측치가 작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교구활동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평균 1.1개의 교구활동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방문할 경우 주당 교사 방문 횟수는 1.0~1.5회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당 교육시간은 30~40분이었다. 월평균 비용의 경우 교구활동1은 5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나 교구활동2와 교구활동3은 이보다 적어 각각 2만 6천원과 1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교구 구입 비용은 교구활동1은 평균 4만 4천원이었으며, 교구활동2는 평균 2만 5천원이었다.

〈표 IV-2-30〉 교구활동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 회, 시간, 만원

	교구활동1	교구활동2	교구활동3
방문교사 여부 있음	53.7	18.4	100.0
방문교사 여부 없음	46.3	81.6	0.0
주당 교사 방문 횟수	1.1	1.5	1.0
평균 주당 교육 시간	0.7	0.5	0.5
월평균 비용	5.3	2.6	1.0
교구구입 비용(월평균)	4.4	2.5	0.0

주: 전체 교구활동 서비스 이용자 5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6) 통신교육 이용비용

통신교육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22명에 불과하여 많지 않았으며, 이들 중 90.8%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전화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2%였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 평균 주당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에서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전화교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인터넷의 경우 4.0회, 전화교육의 경우 2.3회였으며, 평균 주당 이용 시간은 인터넷의 경우 4.4시간, 전화교육의 경우 2.5시간으로 학습지 등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서 이용 빈도는 낮지만, 일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당 이용 횟수와 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인터넷 통신교육은 4만 9천원, 전화교육은 8천원이었다.

〈표 IV-2-31〉 통신교육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 회, 시간, 만원

	인터넷	전화교육
전체	90.8	9.2
평균 주당 이용 횟수	4.0	2.3
평균 주당 이용 시간	4.4	2.5
월평균 비용	4.9	0.8

주: 전체 통신교육 서비스 이용자 22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4) 개별 돌봄 서비스

여기서부터는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당시 개별 돌봄 서비스는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조사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개별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이용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을 감안하여, 혈연도우미와 비혈연 도우미로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혈연도우미를 2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나 혈연 도우미와 비혈연 도우미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등 2개 이상의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혈연-비혈연 여부에 따라서는 각각 해당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혈연 도우미(혹은 비혈연 도우미)를 2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즉,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는 혈연도우미 비용에 두 분 모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는 친정어머니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혈연도우미 이용비용에, 아이돌보미 이용비용은 비혈연 도우미 이용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182명으로, 이 중 92.3%가 혈연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7%가 비혈연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혈연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주당 이용 일수는 4.9일로 비혈연 도우미(2.5일)에 비해 높았으나,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혈연 도우미가 5.1시간으로 비혈연 도우미(6.8시간)에 비해 낮았다. 월평균 비용은 혈연 도우미의 경우 56만 3천원, 비혈연 도우미의 경우 55만 7천원으로 유사한 가운데 혈연 도우미의 비용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돌봄 서비스 평균 주당 이용 일수가 혈연 도우미가 4.9일, 비혈연 도우미가 2.5일로 평균 주 이용 횟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혈연 도우미와 비혈연 도우미를 통틀어 월평균 지출 총액 평균은 56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로 도우미 이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혈연 도우미의 경우 아동이 3세일 때 이용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0세(11.2%) 및 1세(11.1%)일 경우가 뒤를 이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의 월평균 총액은 아동이 0세인 경우 82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세(67만 5천원), 4세(57만 8천원) 순이었다.

〈표 IV-2-32〉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단위: %(명)

	혈연 도우미				비혈연 도우미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이용 비율(수)	평균 주당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이용 비율(수)	평균 주당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9.3(168)	4.9	5.1	56.3	0.7(14)	2.5	6.8	55.7	56.3
아동연령별									
0세	11.2(34)	4.8	8.0	75.8	1.1(3)	4.4	8.1	126.9	82.4
1세	11.1(33)	4.2	4.1	29.7	1.2(4)	1.0	2.7	4.4	24.0
2세	9.8(29)	4.7	4.0	41.6	1.2(4)	1.5	10.7	40.0	41.5
3세	11.8(35)	5.5	4.6	69.0	0.3(1)	3.5	5.8	35.2	67.5
4세	6.0(18)	5.3	4.4	59.3	0.2(1)	5.0	1.2	18.0	57.8
5세	6.0(19)	5.2	4.6	46.7	0.1(1)	5.0	6.0	120.0	49.0
F	-	3.9*	6.4***	3.8**	-	3.6	3.0	1.6	5.7**

** $p < .01$, *** $p < .001$

주: 혈연 도우미를 중복 사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함

한편, 혈연 도우미의 평균 주당 이용 일수는 3세일 때 5.5일로 가장 높았으며, 4세(5.3일), 5세(5.2일) 순이었다. 반면,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아동이 0세일 때 8.0시간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른 연령에서는 4.0~4.6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월평균 비용 역시 이용시간이 긴만큼 0세아가 75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세인 경우가 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혈연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0세아가 주당 이용일수와 이용시간이 단연 길었으며, 월평균 비용도 126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혈연 도우미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동연령별로 1일 이용시간과 월평균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큰데, 이는 응답자 수가 작은 것이 기인한 한계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생략코자 한다. 다만, 아동 연령에 따라 0세아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혈연 도우미의 1일 평균 이용 시간이 긴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1세아 이상에서는 기관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커지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지금까지 영유아 1인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아동별 조사 설문과 가구별 조사 설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동별 조사 설문을 영유아 자녀의 수만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몇몇 가구들의 경우에는 한 명의 자녀와 가구별 조사 설문에만 응답하고, 다른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가구별 교육·보육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이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별 교육·보육비용을 산출할 때는 이러한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즉, 이 절은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각각의 아동별 조사 설문을 완료한 1,253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가. 가구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총 교육·보육비용은 0~10만원 미만인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9.2%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23만 4천원이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총 자녀수가 2명 및 3명 이상인 경우 총 교육·보육비용이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 역시 총 자녀수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2명일 때 월평균 비용이 27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영유아 자녀수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보고되었다. 각 영유아 자녀수에서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순위로 많은 응답은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달랐다. 영유아 자녀수가 1명일 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없음(24.9%)이었으나, 2명일 때엔 10~20만원 미만(21.7%), 3명 이상일 경우 30~4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에서도 영유아 자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는데, 영유아 자녀수가 2명일 때 월평균 비용이 29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3-1〉 자녀수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없음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평균	(수)
전체	18.4	26.1	19.2	10.8	8.0	4.3	13.3	23.4	(1,253)
총 자녀수									
1명	34.7	25.6	13.0	5.8	6.4	1.7	12.8	18.9	(439)
2명	9.4	25.2	22.0	14.6	7.7	6.5	14.6	27.3	(630)
3명이상	10.6	30.2	24.7	9.5	12.4	2.7	9.9	20.9	(184)
$\chi^2(\text{df}), F$				153.4(12) ^{***}				8.0 ^{***}	
영유아 자녀수									
1명	24.9	25.6	18.3	9.0	7.3	3.8	11.0	20.1	(815)
2명	6.5	26.9	21.7	14.1	8.0	5.2	17.6	29.7	(417)
3명이상	6.0	30.3	7.1	11.4	29.6	2.3	13.3	27.2	(22)
$\chi^2(\text{df}), F$				84(12) ^{***}				10.3 ^{***}	

^{***} $p < .001$

모 취업상태에 따라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의 분포 및 월평균 비용은 모 취업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취업상태인 경우 총 교육·보육비용은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많았으나, 휴직일 경우에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비용은 모가 취업상태일 때 27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휴직자인 경우 21만2천원, 미취업모 20만8천원 순이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가구원수가 3명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5.5%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0원초과~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0%였다. 반면, 가구원수가 4명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10%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3명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서 영아자녀가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IV-3-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없음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평균	(수)
전체	18.4	26.1	19.2	10.8	8.0	4.3	13.3	23.4	(1,253)

(표 IV-3-2 계속)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수)	
모의 취업상태										
취업	13.4	26.4	18.9	12.0	8.9	5.2	15.3	27.3	(508)	
휴직	35.2	31.7	10.6	5.1	6.2	0.7	10.4	21.2	(77)	
미취업	20.4	25.0	20.6	10.4	7.5	4.0	12.1	20.8	(665)	
비해당	0.0	83.0	0.0	17.0	0.0	0.0	0.0	8.1	(3)	
$\chi^2(df, F)$								39.9(18)**	9.3**	
가구원수										
3명이하	35.5	26.0	12.1	5.3	6.5	2.2	12.5	18.3	(418)	
4명	9.7	25.9	22.9	13.9	6.7	6.4	14.4	26.4	(610)	
5명이상	10.4	26.7	22.4	12.3	14.2	2.5	11.5	25.0	(226)	
$\chi^2(df, F)$								160.8(12)**	6.9**	

** $p < .01$, *** $p < .001$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으나, 소득이 200~299만원일 경우에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300~399만원 및 400~499만원일 경우에는 0~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30.0%, 26.1%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500~599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구의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때 월 70만 3천원에 달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19.8%로 가장 많았으나,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는 0~10만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5.0%, 32.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대도시에서 29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중소도시(22만 1천원), 읍·면지역(12만 7천원)이었다.

〈표 IV-3-3〉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수)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9.3	55.3	22.3	0.0	10.8	2.3	0.0	10.6	(22)
200~299만원	33.7	28.8	16.3	8.4	5.4	3.3	4.2	11.8	(182)
300~399만원	21.7	30.0	21.4	9.9	7.0	4.7	5.3	15.4	(442)

(표 IV-3-3 계속)

	없음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평균	(수)
400~499만원	13.8	26.1	22.0	14.6	8.8	3.1	11.6	21.0	(266)
500~599만원	11.6	20.6	16.9	13.0	8.7	7.7	21.5	31.0	(202)
600~699만원	8.6	18.1	17.7	9.9	7.4	1.4	36.9	45.8	(61)
700만원이상	8.3	10.0	11.0	6.2	13.9	2.0	48.5	70.3	(80)
$\chi^2(df, F)$				239.9(36)***				44.6**	
지역 규모									
대도시	15.2	24.0	19.5	11.7	6.2	3.6	19.8	29.1	(564)
중소도시	18.0	25.0	18.6	11.3	10.7	6.4	10.0	22.1	(450)
읍면지역	27.0	32.9	19.7	7.5	7.1	1.7	4.0	12.7	(240)
$\chi^2(df, F)$				73.6(12)***				19.2**	

*** $p < .001$

취업모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구특성을 교차하여 살펴보았다. 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 대한 총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소득 구간에서의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을 비교해보면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가구소득이 399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에는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평균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이 많은 반면,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미취업모 가구가 취업모 가구에 비해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의 증가는 모의 취업 여부보다는 가구소득에 보다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 내 총 자녀수(초등이상 자녀 포함)에 따라서는 같은 소득 구간 내에서도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에 총 교육·보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 내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199만이하와 700만원이상인 소득구간에서만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이 2명인 가구에 비해 높을 뿐, 200만원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총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비해 평균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 교육·보육비의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읍면지역에 사는

영유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많았으며, 지역규모가 같은 경우에는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용이 지출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일 때 가장 많고, 3명 > 1명 순이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비용 지출이 가장 많았고, 1명 > 3명의 순이었다.

〈표 IV-3-4〉 가구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모의 취업상태			총 자녀수		
	취업	휴직	미취업	1명	2명	3명이상
전체	27.3	21.2	20.8	18.9	27.3	20.9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0.7	43.2	9.2	6.7	11.5	16.1
200~299만원	14.3	4.0	11.4	6.7	15.7	14.1
300~399만원	15.3	20.7	14.9	11.1	19.4	12.6
400~499만원	19.7	12.0	23.9	15.6	23.4	21.4
500~599만원	31.8	19.0	32.2	27.5	33.9	29.3
600~699만원	47.5	1.2	47.5	29.1	59.3	49.8
700만원이상	69.6	75.2	70.2	74.5	67.6	68.8
지역 규모						
대도시	32.2	42.1	25.4	23.0	31.9	33.7
중소도시	27.0	9.9	20.7	21.0	24.7	16.3
읍면지역	17.2	2.4	9.5	7.5	17.5	14.0

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은 〈표 IV-3-5〉와 같다. 지출이 없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가운데 18.4%였으며, 지출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평균 5.4%, 가구지출 대비 평균 7.6%를 교육·보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상태일 때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반면, 취업모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13.4%로 가장 낮았다. 한편, 영유아 자녀수는 많아질수록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3-5〉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비용)
단위: %(명)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	지출이 있는 가구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가구지출 대비비율(평균)	
전체	18.4	5.4	7.6	(1,253)
모의 취업상태				
취업	13.4	5.8	8.1	(508)
휴직	35.2	4.9	7.1	(77)
미취업	20.4	5.3	7.2	(665)
비해당	0.0	3.0	4.0	(3)
$\chi^2(df, F)$	25.9(9)**	0.7	0.7	
영유아 자녀수				
1명	24.9	4.5	6.2	(815)
2명	6.5	7.1	10.1	(417)
3명이상	6.0	7.9	10.2	(22)
$\chi^2(df, F)$	42.7(6)***	17.4***	16.3***	

** $p < .01$, *** $p < .001$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은 소득이 200~299만원 일 때 3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8.3%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에서도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이거나 700만원이상일 때 가구소득 대비 교육·보육비용 지출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증가는 가구소득에 연동되어 그 절대액 뿐 아니라 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가구소득이 적은 집단의 경우에는 현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희망하는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구지출 대비 비율은 700만원이상일 때와 600~699만원일 때 각각 13.3%, 1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우선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서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중소도시(18.0%), 대도시(15.2%) 순이었다. 지출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교육·보육비용 지출비율 역시 지역 규모에 따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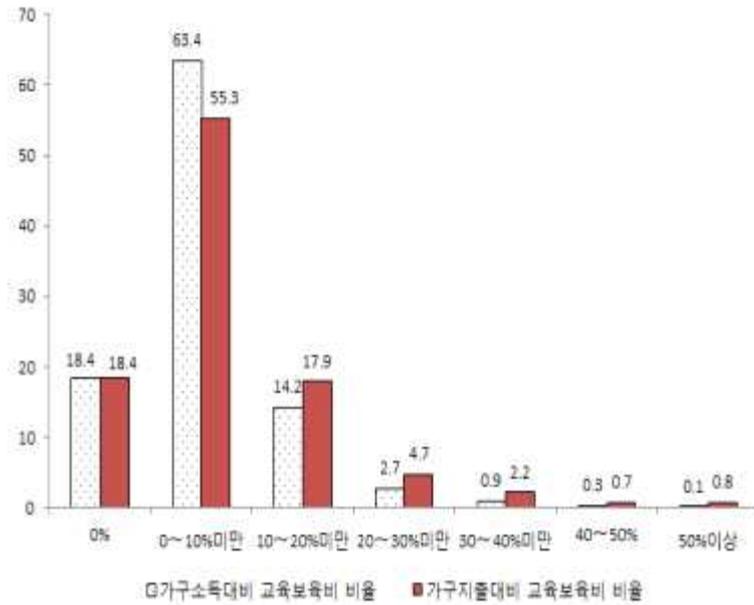
의하게 달랐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모두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6.5%, 5.1%, 3.4% 였으며, 가구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8.7%, 7.7%, 4.7%였다.

〈표 IV-3-6〉 가구 소득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가구당 비용)
단위: %(명)

	지출이 없는 가구 비율	지출이 있는 가구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가구지출 대비비율(평균)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9.3	7.8	8.6	(22)
200~299만원	33.7	4.9	5.9	(182)
300~399만원	21.7	4.8	6.3	(442)
400~499만원	13.8	5.1	7.6	(266)
500~599만원	11.6	6.0	8.4	(202)
600~699만원	8.6	7.4	11.0	(61)
700만원이상	8.3	7.8	13.3	(80)
$\chi^2(df, F)$	206.8(18)**	3.5**	5.8**	
지역 규모				
대도시	15.2	6.5	8.7	(564)
중소도시	18.0	5.1	7.7	(450)
읍면지역	27.0	3.4	4.7	(240)
$\chi^2(df, F)$	67.9(6)**	15.3**	9.8**	

** $p < .01$, *** $p < .00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IV-3-1]과 같다.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교육·보육비용은 0~10%미만 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지출 대비 비율이 10% 이상 범위에 더 많이 분포하는 반면 10% 미만 범위에서는 소득 대비 비율이 더 많이 분포하는 등, 지출 대비 비율이 소득 대비 비율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IV-3-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비용)

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이 절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6년도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 월평균 비용을 활용하여, 연평균 값을 도출하고 영유아 수를 곱하여 연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년도 연구인 3차년도에는 실태조사 당시 당해연도 5월을 기준으로 한 지출 비용을 조사함에 따라, 사교육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연간화 계수를 활용하여 연평균 비용을 보정한 후, 이 값에 영유아 수를 곱하여 연간 총 교육·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당시 비용을 모든 항목에 대해 납입주기와 납입 총액을 각각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였으므로 별도의 연간화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4차년도 연구에서는 예산상 이유로 실태조사 표본이 1,312가구(영유아 기준 1,820명)로 축소됨에 따라, 특정

서비스 이용비용의 경우에는 관측치가 매우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의 관측치에 근거한 비용 추정으로 인한 과소 혹은 과다 추정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양육비 추정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추정방법을 응용하여, 이상치로 인한 비용 과소 혹은 과다 산정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과정에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추정 방법

1)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추정 방법은 미국 농무성(USDA)의 양육비 추정 방법 중 교육·보육비용의 추정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단, 미국 농무성의 추정 방법은 가구 단위의 전체 양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비용에 초점이 맞춰진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미 농무성의 추정방식을 참고하되, 이를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활용하였다.

미 농무성의 양육비 추정방식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 농무성의 양육비 추정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회귀모형을 추정 한 후,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추계액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Lino(2014)의 추정방법은 국내의 양육비 추정연구인 신윤정·김지현(2010)과 서문희 외(2010) 등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이때, 종속변수인 지출 항목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부가서비스비 등이며, 추정에 활용된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는 가구소득, 자녀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지역 등이다(Lino, 2014 : 2~5). Lino(2014)는 식료품비, 교통비, 교육·보육비, 기타 부가서비스 등의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OLS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의료비와 피복비의 경우에는 토빗(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보육비 추정 모형으로 토빗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성별과 모의 취업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와 Lino(2014)의 교육·보육비 추정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Lino(2014)는 18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전체 양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이때 교육·보육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고 OLS 추정을 한 후,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다시 0값을 채워주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교육·보육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즉, 비용 지출이 0인 가구는 Lino

(2014) 연구에서의 피복비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OLS가 아닌 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은 특히 1세 이하의 영아기에 비용 지출이 0에 쏠린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비용 추정에 활용되는 영아기 자녀의 관측치가 지나치게 작아져 잘 수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수의 유아와 비용 지출이 있는 소수의 영아로 구성된 표본으로 인한 추정치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기 전에, 추정에 활용된 토빗 모형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거주지역과 가구소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려는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2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자면,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계수 값이 점차 커져,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영유아 교육·보육비용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일수록(더 어린 자녀일수록) 교육·보육비용은 작았다. 가구소득은 199만원 미만으로 가장 적은 집단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았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많았다.

〈표 IV-4-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모형1	모형2
아동 성별 (기준=남아)		-0.116	0.019
아동 연령 (기준=0세)	1세	10.287***	12.893***
	2세	23.118***	25.563***
	3세	36.762***	37.853***
	4세	38.720***	40.567***
	5세	41.106***	40.918***
아동 출생순위	연속변수	-4.918***	-3.216**
모 연령		4.466**	2.529
모 연령의 제곱		-0.054**	-0.033
모취업상태 (기준=미취업)	취업	7.515***	1.224
	휴직	3.290	0.691

(표 IV-41 계속)

		모형1	모형2
모학력	전문대졸	5.312**	2.982
(기준=고졸이하)	대졸이상	10.492***	3.173
가구원 수			-1.937
	200~299만원		-2.249
가구소득	300~399만원		-0.777
(기준= 199만원	400~499만원		4.319
이하)	500~599만원		10.316***
	600만원 이상		36.296***
지역규모	대도시		10.646***
(기준=읍/면)	중소도시		6.706***
	상수	-107.888***	-67.409**
	sigma	31.302***	28.772***
	N	1,812	1,812

** $p < .01$, *** $p < .001$

한편,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시간제 사교육비와 총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간제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 영유아 사교육비도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에서와는 달리 출생순위는 사교육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영유아의 사교육비는 모가 미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취업자일 때 5% 유의수준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모가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적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소득은 199만원 미만으로 가장 적은 집단에 비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는데, 대도시 거주자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출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제 사교육비에 더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포함하는 총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체로 시간제 사교육비에서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모의 학력이 총 사교육비 지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구소득의 효과도 시간제 사교육에 비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소득 구간이 있었다.

〈표 IV-4-2〉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아동당 비용 : tobit)

		시간제 사교육비	총 사교육비
아동 성별 (기준=남아)		0.016	-0.238
아동 연령 (기준=0세)	1세	6.407***	6.757**
	2세	7.737***	9.245***
	3세	18.384***	19.060***
	4세	24.436***	25.010***
	5세	30.675***	31.760***
아동 출생순위		-1.622	-1.493
모 연령		3.541**	3.634*
모 연령의 제곱		-0.048**	-0.049*
모취업상태 (기준=미취업)	취업	-2.246*	-2.333+
	휴직	0.515	0.885
모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201	-0.228
	대졸이상	-2.379*	-2.087
가구원 수		-3.278***	-3.726**
가구소득 (기준=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8.145*	8.412+
	300~399만원	7.205*	7.563+
	400~499만원	11.404**	11.676
	500~599만원	10.415**	10.692
	600만원 이상	19.636***	20.966***
지역규모 (기준=읍/면)	대도시	4.092***	4.260**
	중소도시	4.879***	5.235**
상수		-85.146***	-86.266**
sigma		15.481 ***	15.629
N		1,812	1,81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나.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치

이 항에서는 앞서 소개한 방식으로 추정된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과 총 사교육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 추정치를 활용하여 연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산출해본다.

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치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은 19만5천원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조사값인 16만9천원에 비해 평균 2만 6천원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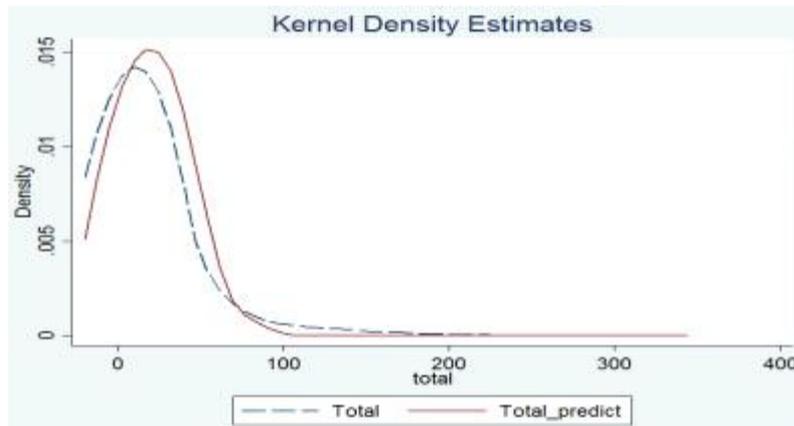
0세아의 경우 월평균 5만8천원, 1세아 9만6천원, 2세아 15만9천원, 3세아 26만2천원, 4세아 27만8천원, 5세아 29만9천원의 교육·보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4-3〉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조사값		추정비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전체	17.5	16.9	19.5
아동연령			
0세	8.1	8.4	5.8
1세	5.8	4.5	9.6
2세	10.8	11.5	15.9
3세	23.9	23.6	26.2
4세	24.6	25.4	27.8
5세	28.2	27.5	29.9

주 :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는 0원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비용임.



주 : 점선이 조사값 분포, 실선이 추정비용의 분포를 나타냄.

[그림 IV-4-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추정비용과 조사 값(가중치 적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추정비용이 조사값에 비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IV-4-1] 참조). 비용이 적은 구간에서는 조사값이 좀 더 밀집되어 있고, 실선과 점선이 교차하는 사이에 긴 비용 구간에서는 추정비용이 좀 더 밀집된 반면, 비용이 아주 높은 구간에서

도 조사값의 밀도가 높다. 즉, 추정비용이 조사값에 비해서는 분포가 중간값에 더 밀집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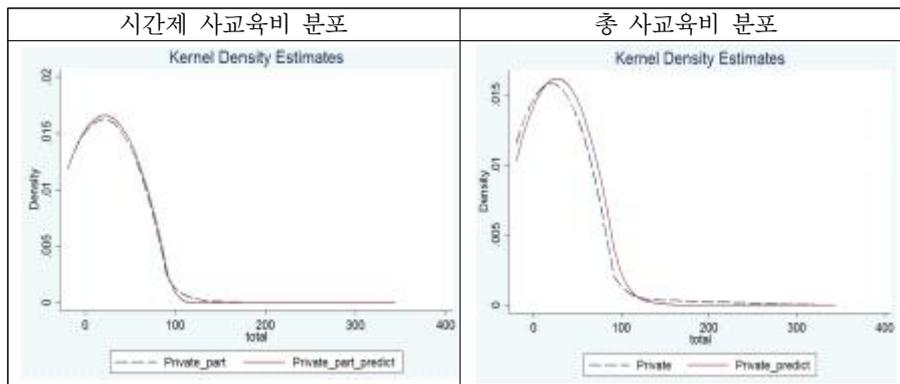
한편,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는 4만2천원이었으며, 총 시간제 사교육비는 4만원 가량이었다. 사교육비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세의 경우 4세에 비해 큰 폭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제외한 총 시간제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0세 평균 5천원에 불과했으나, 5세에는 평균 1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포함하면, 5세의 경우 평균 10만4천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 IV-4-4〉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시간제 사교육비			총 사교육 비용		
	조사값		추정비용	조사값		추정비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전체	4.0	8.5	4.0	4.2	3.9	4.2
아동연령						
0세	0.5	0.5	0.5	0.5	0.5	0.5
1세	0.9	0.7	1.0	0.9	0.7	1.1
2세	1.4	1.3	1.1	1.6	1.5	1.3
3세	3.2	3.2	3.9	3.5	3.3	4.0
4세	6.1	6.5	6.4	6.2	6.6	6.5
5세	10.4	10.2	10.0	10.9	10.5	10.4

주 : 사교육 미이용자의 비용은 0원으로 처리하고 추정한 비용임.



주 : 점선이 조사값 분포, 실선이 추정비용의 분포를 나타냄.

[그림 IV-4-2] 영유아 1인당 사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시간제 사교육비와 총 사교육비의 추정비용과 조사값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시간제 사교육비는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고, 총 사교육비도 약간 우측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였다(그림 IV-14-2 참조).

2)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규모 추정치

연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은 각 연령별 월평균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의 평균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연평균 평균값을 산출하고, 여기에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의 영유아 수를 곱하여 추산한 값이다. 이때 영유아의 수는 2016년도에 보육연령으로 0~5세가 되는 영유아의 수이어야 하므로, 2015년 12월 기준 만 나이 0~5세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연말이 되어야만 정확한 출생아 수를 알 수 있는 2016년 출생아는 영유아 수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출생아는 출생당해에는 부모가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보육연령 0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4-5〉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전체	19.5	234.0	2,739,951	641,148,534
아동연령				
0세	5.8	69.6	424,563	29,549,585
1세	9.6	115.2	437,994	50,456,909
2세	15.9	190.8	439,989	83,949,901
3세	26.2	314.4	488,766	153,668,030
4세	27.8	333.6	475,519	158,633,138
5세	29.9	358.8	473,120	169,755,456

주: 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V-4-3>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 *12개월로 산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5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6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5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6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2016.10.29. 인출\)](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2016.10.29. 인출))

영유아 1인당 연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34만원 가량이었으며, 영유아 수는 273만9,951명으로,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은 6조 4,114억 8,53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각 연령별로는 0세 2,954억 9,585만원, 1세 5,045억 6,909만원, 2세 8,349억 9,901만원, 3세 1조 5,366억 8,030만원, 4세 1조 5,863억 3,138억, 5세 1조 6,975억 5,456만원이었다. 이 비용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을 빼고 추산된 금액이므로,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유아 1인당 사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연평균 총 사교육비용은 1조3,809억 3,530만원으로, 각 연령별로는 0세 254억 7,378만원, 1세 578억 1,521만원, 2세 686억 3,828만원, 3세 2,346억 768만원, 4세 3,709억 482만원, 5세 5,904억 5,376만원이었다.

〈표 IV-4-6〉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총비용 대비 총사교육비 비율
전체	4.2	50.4	2,739,951	138,093,530	21.5
아동연령					
0세	0.5	6.0	424,563	2,547,378	8.6
1세	1.1	13.2	437,994	5,781,521	11.5
2세	1.3	15.6	439,989	6,863,828	8.2
3세	4.0	48.0	488,766	23,460,768	15.3
4세	6.5	78.0	475,519	37,090,482	23.4
5세	10.4	124.8	473,120	59,045,376	34.8

주: 1)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V-4-4>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 *12개월로 산출함.

2)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5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6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5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6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3)총 비용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연간총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ITITLE&parmTabId=M_01_01#SubCont\(2016.10.29. 인출\)](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ITITLE&parmTabId=M_01_01#SubCont(2016.10.29. 인출))

총 사교육비용이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5%였으며, 비율은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0세와 2세의 경우에는 사교육비용이

교육·보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대로 비교적 낮은 반면, 1세 11.5%로 약간 높았다. 3세에는 이 비율이 15.3%로 증가하고, 4세에는 23.4%, 5세에는 34.8%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교육비용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할 뿐 아니라, 총 교육·보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자녀의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0세와 1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빈도가 적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화센터 등의 저렴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0세에 비해 1세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의 이용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3세 이상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이때부터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이용 뿐 아니라 사교육의 이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사교육비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7〉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총비용 대비 총 시간제 사교육비 비율
전체	4.0	48.0	2,739,951	131,517,648	20.5
아동연령					
0세	0.5	6.0	424,563	2,547,378	8.6
1세	1.0	12.0	437,994	5,255,928	10.4
2세	1.1	13.2	439,989	5,807,855	6.9
3세	3.9	46.8	488,766	22,874,249	14.9
4세	6.4	76.8	475,519	36,519,859	23.0
5세	10.0	120.0	473,120	56,774,400	33.4

주: 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V-4-4>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 *12개월로 산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5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6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5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6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2016.10.29. 인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영유아 1인당 시간제 사교육비용을 살펴보면, 연평균 총 시간제 사교육비용은 1조 3,151억 7,648만원으로, 총 사교육비용보다 약간 적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연령별로는 0세 254억 7,378만원, 1세 525억 5,928만원, 2세 580억 7,855만원, 3세 2,287억 4,249만원, 4세 3,651억 9,859만원, 5세 5,677억 4,400만원이었다. 시간제 사교육비가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시간제 사교육비의 비율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5. 소결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가구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6만 9천원이었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더 나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월평균 비용이 높았다.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모가 취업상태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월평균 교육·보육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6만 5천원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높아졌다. 월평균 지출 총액 역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5세경 소폭 감소하였다.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모가 미취업일 때보다는 취업모일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이 높았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은 과목당 평균 2만1천원, 월평균 5만8천원이었다.

셋째,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19만 4천원이었으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연령이 3세에서 5세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유치원 이용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이용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용은 평균 23만6천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용 4만8천원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과목당 평균 3만5천원, 월평균 8만4천원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비용에 비해 약간 높았다.

넷째,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비용은 61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84만 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은 과목당 평균 3만6천원으로 유치원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특별활동 총 이용비용은 13만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비해 높았다.

다섯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의 총액 평균은 11만 8천원이었으며, 아동 연령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 및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세에는 학습지 이용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4세 이후로는 시간제 학원의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5세에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41.9%에 달했다.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52.7%로 가장 많았고, 미술관련 학원이 37.0%로 이용비율이 높았다.

여섯째,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다수가 혈연 도우미를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비용은 56만 3천원이었다. 아동 연령이 0세일 때 이용비용이 가장 높았다.

일곱째,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3만 4천원이었으며, 총 자녀수 및 영유아 자녀수가 2명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모가 취업자일 때,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때, 대도시 거주 가구일 때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이 높게 보고되었다.

여덟째,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은 소득 대비 평균 5.4%, 지출 대비 평균 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이 없다는 응답도 18.4%였다. 전반적으로 소득 및 지출대비 교육·보육비 비율이 0~10%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득 대비 비율보다 지출 대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어린 자녀일수록, 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교육·보육비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 사교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은 월평균 19만5천원이었으며,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4만2천원, 시간제 사교육비는 4만원으로 추정되

었다. 이를 이용하여, 연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규모를 추산해보면, 6조 4,114억, 8,534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총 사교육비용은 1조 3,809억 3,530만원으로 총 비용 대비 21.5%였다. 연간 총 시간제 사교육비는 1조 3,151억 7,648만원으로 총 비용의 20.5%였다. 전반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사교육비의 절대액이 커질 뿐 아니라 이용 빈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총 교육·보육비용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V.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이 장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정책 시행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에 관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현행 영유아 가구를 위한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표 V-1-1>과 같다. 먼저, 정책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가구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원 범위와 관련한 쟁점은 지원 비용의 포괄 범위와 관련한 문제와 주어진 비용 제약 하에서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이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기관 이용 시간의 단축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이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적은 가정 내 양육수당의 지원 수준이 적당한지, 유아교육·보육이 보편적 복지가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지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같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교육·보육서비스의 제공 사이에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관련한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논란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실제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 정도, 만족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 영유아 가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영유아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표 V-1-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쟁점 분야	주요 쟁점
정책 대상	영유아 가구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가?
지원 범위	표준보육과정 혹은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지원이 필요한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지원 수준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적절한 수준인가? 가정 내 양육 수당의 지원 수준은 적당한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가?
지원 방식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적합하나? (서비스 제공 vs 현금지원 등)
정책 성과	현행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이 가계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영유아 가구들은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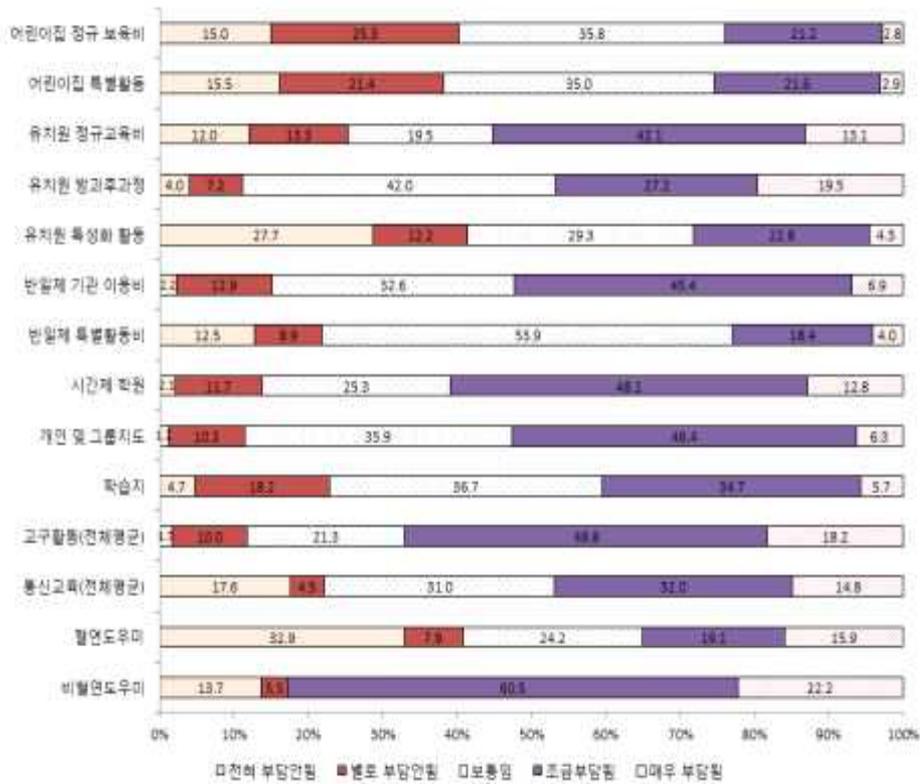
먼저, 현재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대해 영유아 가구들이 느끼는 부담 및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담정도 및 만족도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영유아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부담된다고 응답할 수도 있고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 정도가 실제 비용 지출 수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체감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보편적 지원이 실시된 이후 어떠한 집단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압박을 더 느끼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응답 결과이다. 조사 결과, 유치원 특성화활동에 대한 부담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까지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 특성화활동 등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개별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0.5%로 매우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 지도 등의 시간제 사교육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전혀 부담안됨 + 별로 부담안됨)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단위: %



주: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 626명, 시간연장형보육 4명, 특별활동 452명, 유치원 정규교육비 383명, 방과후과정 52명, 특성화 프로그램 334명,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76명, 특별활동 29명, 시간제 학원 244명, 개인 및 그룹지도 47명, 학습지 350명, 교구활동 54명, 통신교육 22명, 혈연도우미 169명, 비혈연도우미 13명의 응답 결과임.

[그림 V-1-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아동별 조사)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점수가 높았으며, 반일 이상 이용 기관 중에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 >

유치원 > 어린이집 순으로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간제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2세 이하의 영아기보다 3세와 4세 때 약간 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정도는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므로, 영아기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지출되더라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반면, 유아기에는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와의 서비스 비용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다소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V-1-2〉 아동 연령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단위: 점(명)

	반일이상 이용 기관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개인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전체	2.7	2.9	3.3	3.6	3.5	3.2	3.7	3.6	2.8
0세	2.5	-	2.5	2.8	3.6	2.6	3.9	-	2.9
1세	2.4	-	2.6	2.9	2.2	2.4	3.1	3.0	2.3
2세	2.7	-	3.3	3.1	3.2	3.0	3.7	4.0	2.9
3세	2.9	3.3	3.4	3.3	3.5	3.3	3.8	3.0	3.2
4세	2.7	3.0	3.5	3.7	3.4	3.1	4.3	4.2	3.0
5세	2.9	2.7	3.5	3.7	3.8	3.4	3.4	3.4	2.8
F	3.5**	8.2***	1.5	4.2**	3.0*	4.5**	1.5	1.0	1.6

* $p < .05$, ** $p < .01$, *** $p < .001$

주: 이용자 중 비용 지불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된 여러 항목의 값을 합산한 후 평균한 것임.

가구특성별로는 취업모의 경우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등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취업모일수록 시간제 학원이용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도가 높아진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가구 특성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단위: 점(명)

	반일이상 이용 기관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2.7	2.9	3.3	3.6	3.5	3.2	3.7	3.6	2.8
모의 취업상태									
취업	2.6	2.9	3.4	3.8	3.6	3.3	3.9	3.7	3.0
휴직	2.6	3.7	2.8	2.3	4.3	2.8	3.7	-	3.2
미취업	2.8	3.0	3.3	3.5	3.1	3.2	3.6	3.5	2.1
비해당	3.0	1.0	-	4.0	-	2.9	-	-	1.0
<i>F</i>	2.0	2.2	0.7	7.2***	4.3*	1.2	0.3	0.1	4.3**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2	2.3	-	4.0	-	4.4	4.0	5.0	1.5
200~299만원	2.8	2.8	2.7	3.8	3.6	3.5	3.5	3.3	2.2
300~399만원	2.7	2.9	3.0	3.6	3.6	3.1	3.7	3.6	2.1
400~499만원	2.7	3.0	3.6	3.6	3.0	3.2	4.3	3.3	2.4
500~599만원	2.4	3.2	3.6	3.4	4.0	3.1	3.2	3.7	3.5
600~699만원	2.5	3.0	3.6	3.8	3.6	3.2	3.7	3.5	3.4
700만원이상	2.6	2.7	3.3	3.4	3.6	3.3	2.9	3.0	3.3
<i>F</i>	2.6	1.4	1.5	1.1	1.4	1.9	2.2	0.7	5.5***

* $p < .05$, ** $p < .01$, *** $p < .001$

주: 이용자 중 비용 지불자를 대상으로 하고, 평균은 항목의 합산을 평균한 것임.

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으며,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가 3.7점으로 낮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4.0점,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3.9점, 교구활동과 통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이었다. 앞서 개별 돌봄 서비스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족도도 개별 돌봄 서비스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학습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지만, 만족도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많다고 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점



- 주: 1) 문항별 응답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452명,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334명, 반일제 학원 특별활동 29명, 시간제 학원 244명, 개인 및 그룹지도 47명, 학습지 350명, 교구활동 54명, 통신교육 22명, 개별돌봄서비스 181명에 대한 응답값임.
 2) 시간제 학원 등은 과목별로 만족도를 응답하여, 과목별 만족도를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한 값임.

[그림 V-1-2]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종류별 만족도-평균(아동별 조사)

<표 V-1-4> 아동 연령별 비용 만족도(아동별 조사)

단위: 점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3.9	3.9	4.0	3.9	3.9	3.7	3.8	3.8	4.5
0세	3.6	-	-	4.1	4.1	3.4	3.8	3.8	4.3
1세	3.9	-	4.0	3.0	3.0	4.2	3.8	3.8	4.4
2세	3.9	-	4.2	4.2	4.2	3.7	3.8	3.8	4.7
3세	3.8	3.7	4.1	3.9	3.9	3.7	3.9	3.9	4.4
4세	3.8	3.9	4.0	3.7	3.7	3.7	3.7	3.7	4.5
5세	4.0	3.9	3.8	4.0	4.0	3.8	3.8	3.8	4.5
F	1.0	2.6	1.1	3.8**	3.5*	2.3*	0.1	0.9	2.0

* $p < .05$, ** $p < .01$

주: 5점 평균 점수이며, 기관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전체 혹은 이용 과목별 만족도를 합산하여 평균함.

아동 연령별로 서비스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아동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발견된 반면,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5세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추가 이용 의사 및 유보가격

이 절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향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추가 이용 의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인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유보가격과 기관 이용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지, 유보가격을 초과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들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에 대한 잠재적 지출 의사와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서비스의 필요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

먼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7.4시간으로 0세아의 경우 기관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1세아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어린이집					유치원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1	66.0	32.9	7.4	1000(908)	3.1	58.6	38.3	7.2	1000(513)
0세	5.7	52.7	41.6	7.8	1000(56)	-	-	-	-	-
1세	2.1	68.4	29.5	7.2	1000(240)	-	-	-	-	-
2세	0.7	71.5	27.8	7.2	1000(266)	-	-	-	-	-
3세	0.0	63.5	36.5	7.4	1000(164)	6.6	57.5	35.9	7.0	1000(119)
4세	0.0	61.7	38.3	7.5	1000(102)	0.6	62.3	37.1	7.3	1000(180)
5세	0.0	60.7	39.3	7.6	1000(81)	3.2	56.1	40.7	7.2	1000(214)
$\chi^2(c\bar{h}), F$	26.2(10)**		3.5**			10.0(4)*		1.3		

* $p < .05$, ** $p < .01$

한편,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7.2시간으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66.0%와 유치원 이용아의 58.6%가 5시간이상 8시간미만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 참조).

〈표 V-2-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어린이집					유치원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1	66.0	32.9	7.4	1000(908)	3.1	58.6	38.3	7.2	1000(513)
모의 취업상태										
취업	0.1	50.4	49.4	7.9	1000(424)	0.7	40.7	58.5	7.8	1000(215)
휴직	4.9	76.7	18.3	6.9	1000(54)	16.6	67.9	15.5	6.0	1000(15)
미취업	1.6	80.1	18.3	6.9	1000(42)	4.2	71.9	23.9	6.8	1000(282)
비해당	0.0	67.8	32.2	8.1	1000(2)	0.0	30.8	69.2	7.9	1000(2)
$\chi^2(df, F)$	108.9(6)***				37.5***	72.9(6)***				25.6***
총 자녀수										
1명	0.9	67.4	31.7	7.3	1000(209)	2.2	56.5	41.3	7.1	1000(89)
2명	0.8	69.7	29.5	7.3	1000(533)	3.8	61.7	34.4	7.1	1000(306)
3명이상	2.2	52.6	45.2	7.8	1000(166)	1.8	52.1	46.2	7.5	1000(117)
$\chi^2(df, F)$	18.6(4)***				8.6***	6.2(4)				2.4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0	42.3	57.7	8.0	1000(23)	0.0	27.0	73.0	8.3	1000(10)
200~299만원	2.6	72.1	25.2	7.0	1000(139)	1.0	47.1	51.9	7.5	1000(57)
300~399만원	1.6	73.7	24.7	7.2	1000(290)	3.5	63.5	33.0	7.1	1000(196)
400~499만원	0.5	67.7	31.8	7.4	1000(230)	2.9	66.0	31.2	7.2	1000(105)
500~599만원	0.3	50.5	49.2	7.7	1000(146)	5.7	49.8	44.5	7.2	1000(96)
600~699만원	0.0	72.2	27.8	7.1	1000(40)	0.0	66.8	33.2	7.2	1000(23)
700만원이상	0.0	45.1	54.9	8.1	1000(41)	0.0	54.0	46.0	7.2	1000(26)
$\chi^2(df, F)$	50.2(12)***				7.4**	19.6(12)				1.4
지역 규모										
대도시	0.9	72.7	26.4	7.1	1000(408)	3.3	60.3	36.4	7.1	1000(219)
중소도시	1.7	64.4	33.9	7.5	1000(322)	3.7	60.7	35.6	7.2	1000(208)
읍면지역	0.4	53.7	45.9	7.7	1000(178)	1.1	49.9	49.0	7.6	1000(91)
$\chi^2(df, F)$	23.1(4)***				12.9***	5.9(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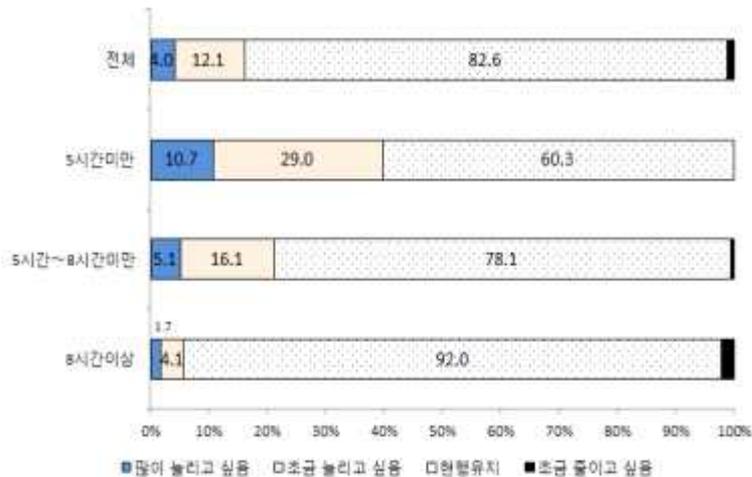
** $p < .01$, *** $p < .001$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에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어린이집과 유

치원 모두 이용 시간이 평균 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하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9시간, 유치원은 7.8시간가량인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각각 6.9시간과 6.8시간에 그쳤다. 한편, 가구 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이 길었으며, 읍면지역 거주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199만원 이하)과 가장 높은 집단(700만원 이상)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이용 시간은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만 이용시간이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V-2-2 참조).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기관을 현재보다 더 긴 시간동안 이용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 이용시간만큼만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82.6%가 현재 이용시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12.1%는 조금 늘리고 싶음, 4.0%가 많이 늘리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으며, 많이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단위: %



- 주: 1) '많이 줄이고 싶음'은 응답자가 전혀 없어 제시하지 않음.
- 2) 전체 응답자 수는 1,421명, 5시간미만 26명, 5-8시간 900명, 8시간이상 495명임.

[그림 V-2-1] 이용시간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이 5시간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5.8%로 8시간미만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는 추가 이용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와 미취업모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가구 내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현행 유지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V-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긴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즉,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현재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이렇듯 긴 현재 이용 시간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V-2-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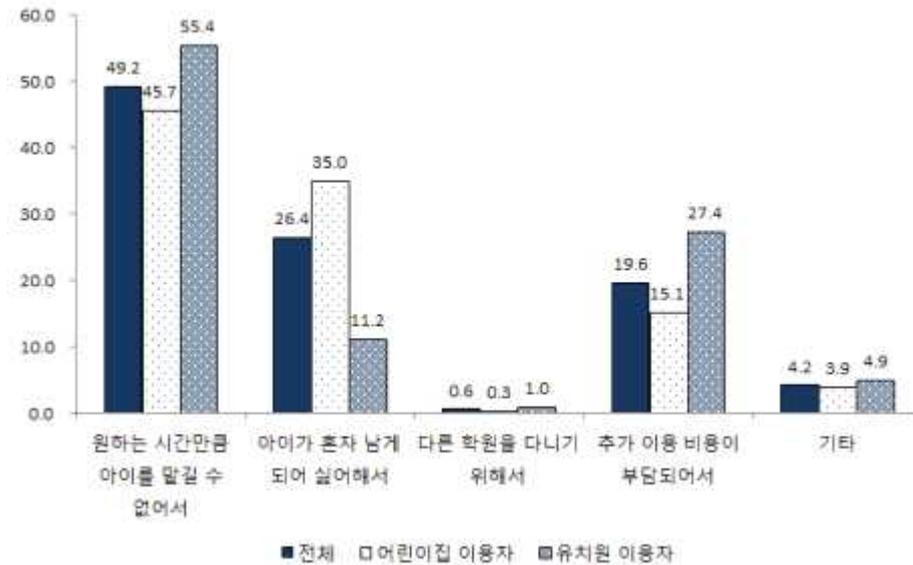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현행 유지	조금 줄이고 싶음	$\chi^2(df)$	계(수)
전체	4.0	12.1	82.6	1.2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7	11.8	84.2	1.3	36.7(9)***	100.0(639)
휴직	15.7	13.4	70.9	0.0		100.0(69)
미취업	3.9	12.4	82.4	1.2		100.0(710)
비해당	39.2	0.0	60.8	0.0		100.0(4)
총 자녀수						
1명	6.5	10.8	81.8	0.9	26.4(6)***	100.0(299)
2명	3.4	15.0	80.3	1.2		100.0(839)
3명이상	3.1	5.0	90.5	1.4		100.0(283)

*** $p < .001$

한편, 지금보다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26.4%)', '추가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19.6%)' 순이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55.4%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4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비용

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27.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라는 응답이 35.0%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11.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위: %



주: 전체 230명, 어린이집 146명, 유치원 8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그림 V-2-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반대로, 지금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가구는 매우 적으므로, 과도한 해석은 피해야한다. 다만, 그 경향성을 살펴보자면, 지금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줄이지 못하는 이유로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24.3%)',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19.1%)'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가 59.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26.6%)'가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22.5%)',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19.4%)' 순이었다.

단위: %



주 : 전체 17명, 어린이집 8명, 유치원 10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그림 V-2-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나. 비용 상승에 대한 지불 의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응답 아동 1,421명을 기준으로,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가구는 전체 52.4%로, 5~10미만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9%, 5만원 미만이 18.6%, 10~15만원미만이 10.2% 순이었다(그림 V-2-4 참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보가격은 평균 5만7천원이었다. 이때,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47.6%나 되므로, 상당수 영유아 가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 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표 V-2-4 참조).

단위: %



주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 1,421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그림 V-2-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추가 지출 의사 : 전체(아동별 조사)

<표 V-2-4> 기관특성 및 이용비용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명)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47.6	18.6	20.9	10.2	1.5	1.2	5.7	1000(1421)
이용 기관								
어린이집	45.6	19.7	21.2	10.7	1.6	1.2	5.7	1000(908)
유치원	51.3	16.8	20.4	9.2	1.2	1.1	5.7	1000(513)
$\chi^2(df, t)$		5.1(5)						0.1
이용 비용								
10만원미만	47.5	19.2	22.7	8.5	1.5	0.6	5.4	1000(737)
10~30만원 미만	47.0	16.9	19.4	13.4	1.3	2.0	6.1	1000(448)
30~50만원 미만	48.6	21.1	16.0	10.5	2.1	1.7	6.0	1000(151)
50만원이상	50.3	18.5	21.9	6.8	1.8	0.7	5.6	1000(85)
$\chi^2(df, F)$		17.3(15)						1.7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현재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 재원아가 어린이집 재원아에 비해 지불의사가 다소 높았다. 평균 유보가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5만7천원이었으나,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유치원 51.3%, 어린이집 45.6%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5만원미만(19.7%), 5~10만원미만(21.2%)의 비율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기관 이용비용에 따라서 유보가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 이용비용이 많을수록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구체적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 이용비용에 따라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표 V-2-4 참조).

아동의 연령별로는 5세아의 경우에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4.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1세 부모의 49.6%가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지불 의향 비용을 응답한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0세와 1세의 경우에는 5~10만원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2%와 22.6%로 가장 높은 반면, 2세아와 3세아는 5만원 미만이 20.1%와 24.2%로 가장 높았다. 각 연령별 금액을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평균 유보가격을 살펴보면, 0세 5만7천원, 1세 5만4천원, 2세 5만8천원, 3세 5만6천원, 4세 6만원, 5세 5만7천원으로, 전반적으로 5~6만원 정도 수준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2-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 (명)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0세	42.7	16.3	26.2	13.2	0.0	1.6	5.7	100.0(56)
1세	49.6	19.0	22.6	6.0	2.4	0.5	5.4	100.0(240)
2세	45.8	20.1	17.7	14.6	1.0	0.7	5.8	100.0(266)
3세	43.1	24.2	20.4	7.7	2.7	1.9	5.6	100.0(282)
4세	45.9	15.9	25.5	9.2	1.4	2.1	6.0	100.0(281)
5세	54.6	14.8	17.6	12.3	0.4	0.4	5.7	100.0(295)
$\chi^2(df, F)$		48.5(25)**					0.4	

** $p < .01$

주 :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절반을 상회한 반면, 미취업모는 44.1%, 휴직자는 33.9%만이 여기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모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5~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만원미만이 많았다. 다만,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는 10~15만원이 17.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V-2-6〉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47.6	18.6	20.9	10.2	1.5	1.2	5.7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52.8	16.6	20.3	7.8	1.8	0.6	5.7	1000(639)
휴직	33.9	13.1	21.9	17.6	10.3	3.2	8.0	1000(69)
미취업	44.1	21.0	21.4	11.6	0.3	1.5	5.5	1000(710)
비해당	81.4	18.6	0.0	0.0	0.0	0.0	1.0	1000(4)
$\chi^2(df, F)$		71.3(15)***					5.9***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51.6	17.8	25.0	5.7	0.0	0.0	4.4	1000(33)
200~299만원	39.6	28.7	23.8	5.3	1.1	1.4	4.6	1000(196)
300~399만원	47.4	18.6	22.0	11.0	0.5	0.5	5.5	1000(486)
400~499만원	47.6	13.8	21.5	12.3	2.1	2.7	6.7	1000(335)
500~599만원	49.3	19.2	15.9	12.2	2.5	0.9	6.1	1000(243)
600~699만원	55.5	17.6	19.4	1.9	4.6	0.9	5.9	1000(63)
700만원이상	56.8	12.7	19.3	10.3	0.9	0.0	5.7	1000(67)
$\chi^2(df, F)$		60.5(30)***					3.8***	
지역 규모								
대도시	48.7	16.0	21.0	11.9	0.6	1.9	6.1	1000(627)
중소도시	44.3	23.3	20.1	8.3	3.1	0.9	5.4	1000(525)
읍면지역	51.7	15.6	22.4	9.8	0.4	0.2	5.4	1000(268)
$\chi^2(df, F)$		35.0(10)**					3.0*	

* $p < .05$, ** $p < .01$, *** $p < .001$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지출 의사가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로 매우 적은 집단과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 그 비율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유보가격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경우에 6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지불 의사 가격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48.7%), 중소도시(44.3%) 순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불 의사 가격을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보가격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6만1천원으로 중소도시(5만4천원)나 읍면지역(5만4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조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이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교육·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추가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영유아 부모들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수업료가 다소 높더라도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습 위주의 교육과 전인 교육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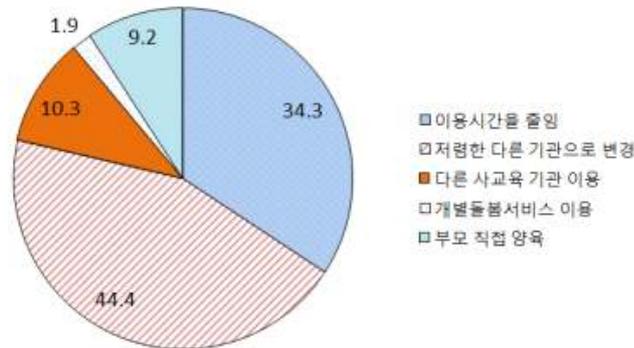
저는 6, 7세는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는 대신에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 7세 전담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솔직히 사교육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유치원을 안보내도 우리 애가 그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다면 선생님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 7세는 보육보다는 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서.(맞벌이가구 면담, 석○○).

약간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보니까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이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도 크지 않을까...(중략)...비용을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는 유치원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비용을 더 들일 바에는 유치원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요...(중략)...(구체적인 지불 의사 가격을 묻자) 밖에 학원 다니는만큼. 외부학원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별 의사가 있죠(맞벌이가구 면담, 김○○).

한편,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을 질문하자, ‘좀 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34.3%로 다음을 이었다. '다른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0.3%,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단위: %



주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 중 유보가격을 응답한 7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함.

[그림 V-2-5]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표 V-2-7> 이용기관 및 유보가격수준별 유보가격 초과 시 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단위: %, (명)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chi^2(df)$	계(수)
어린이집	34.8	42.9	8.4	2.7	11.2	16.4(4)**	100.0(494)
유치원	33.2	47.3	14.0	0.2	5.4		100.0(250)
유보가격						67.8(16)***	
5만원미만	36.0	53.1	7.4	1.5	2.0		100.0(265)
5~10만원	31.6	42.0	12.4	3.2	10.8		100.0(297)
10~15만원	36.9	35.2	9.8	0.4	17.7		100.0(145)
15~20만원	53.0	34.2	12.8	0.0	0.0		100.0(21)
20만원이상	8.4	38.5	18.6	0.0	34.6	100.0(17)	

** $p < .01$ *** $p < .001$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낮은 반면,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11.2%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

해 높았다. 이는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아들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보가격의 구간별로는 유보가격이 낮은 집단에서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보가격이 15~20만원으로 지금보다 상당한 정도의 추가 지불의사를 가진 집단의 경우에는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단, 유보가격이 15~20만원에 속한 응답자 수가 적으므로 주의를 요한다(표 V-2-7 참조).

〈표 V-2-8〉 아동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chi^2(df)$	계(수)
전체	34.3	44.4	10.3	1.9	9.2		100.0(744)
0세	25.0	41.5	3.9	10.2	19.4		100.0(32)
1세	35.7	40.7	6.9	5.2	11.6		100.0(121)
2세	34.4	43.4	8.2	0.0	14.0	43.3(20)**	100.0(144)
3세	34.2	49.1	9.3	1.0	6.3		100.0(161)
4세	35.4	45.3	13.3	1.5	4.5		100.0(152)
5세	33.7	42.7	14.8	0.4	8.5		100.0(134)

** $p < .01$

아동의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유보가격을 초과하면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3세의 경우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0세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19.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비율은 1세 11.6%, 2세 14.0%로 비교적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는 유보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다른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 가격이 유보가격을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모든 연령에서 우선적으로 좀 더 저렴한 기관을 찾거나 이용시간을 줄이려는 경향이 높지만,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의사가 높은 반면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사교육 기관으로의 대체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V-2-8 참조).

가구 특성별로는 모가 취업자인 경우에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5.6%로, 휴직자나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42.3%)이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13.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9〉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chi^2(df)$	계(수)
전체	32.4	46.0	11.7	1.6	8.2		100.0(69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3.8	55.6	8.1	3.0	9.5		100.0(277)
휴직	35.4	31.9	18.5	5.8	8.5	56.1(12)***	100.0(40)
미취업	42.1	37.3	10.9	0.6	9.1		100.0(372)
비해당	0.0	0.0	100.0	0.0	0.0		100.0(2)
지역 규모							
대도시	30.9	43.0	10.3	2.4	13.3		100.0(276)
중소도시	42.3	41.1	10.6	1.2	4.8	28.7(8)***	100.0(257)
읍면지역	24.3	55.0	9.7	2.0	9.1		100.0(158)

*** $p < .001$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인다고 응답한 경우에 줄어든 기관 이용시간 만큼은 어떠한 형태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의 서비스 이용'이 22.0%,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7.4%였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가격에 따라서는 유보가격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80.9%로 높은 반면, 유보가격이 5~10만원인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 등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6.5%로 높았고, 유보가격이 10~15만원인 경우에는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10〉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아동별 조사)
단위: %(명)

	부모가 직접 양육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제 학원, 문화 센터등	$\chi^2(df)$	계(수)
전체	70.6	7.4	22.0		100.0(255)
이용 기관					
어린이집	74.1	6.0	19.9	3.3(2)	100.0(172)
유치원	63.3	10.2	26.5		100.0(83)
유보가격					
5만원미만	80.9	2.8	16.3	25.9(8)**	100.0(95)
5~10만원	66.2	7.2	26.5		100.0(94)
10~15만원	66.1	14.6	19.3		100.0(53)
15~20만원	46.2	4.6	49.2		100.0(11)
20만원이상	23.8	76.2	0.0		100.0(1)

** $p < .01$

아동의 연령별로는 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줄어든 이용시간만큼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3세 이상의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 등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높아져 영유아 부모들이 기관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확률이 높지만,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으로 이러한 수요가 분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표 V-2-11 참조).

모의 취업상태에서 따라서는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81.4%로, 취업모 49.0%에 비해 32.4%p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1.6%,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9.4%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취업모는 639명인데, 이 중 5.5%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유보가격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증가하면 기관 이용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표 V-2-12 참조).

〈표 V-2-11〉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단위: %, 시간(명)

	부모가 직접 양육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제 학원, 문화 센터 등	$\chi^2(df, F)$	계(수)
전체	70.6	7.4	22.0	18.6(10)*	100.0(255)
0세	91.6	8.4	0.0		100.0(8)
1세	81.6	5.0	13.4		100.0(43)
2세	79.6	8.3	12.1		100.0(50)
3세	62.6	8.2	29.2		100.0(55)
4세	69.9	10.4	19.7		100.0(54)
5세	56.9	3.9	39.3		100.0(45)

* $p < .05$

〈표 V-2-12〉 모 취업상태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단위: %, 시간(명)

	부모가 직접 양육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제 학원, 문화 센터 등	$\chi^2(df)$	계(수)
전체	70.6	7.4	22.0	36.8(4)***	100.0(255)
모의 취업상태					
취업	49.0	19.4	31.6		100.0(72)
휴직	54.9	3.4	41.6		100.0(16)
미취업	81.4	2.6	16.1	100.0(167)	

*** $p < .001$

한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아 가운데 지불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용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 이유를 질문하자,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교육·보육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4.0%,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응답이 21.9% 순이었다. 다음으로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4.5%였으며,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4.2%, '내 편의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서' 3.0% 등이었다.

가구 특성별로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보육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는 '다른 기관 혹은 서비

스에 비해 교육·보육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읍면 지역에 사는 영유아 가구들은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읍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선택에 있어 제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2-13〉 가구 특성별 지불 금액 증가에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i^2(df)$	계(수)
전체	32.2	21.9	24.0	14.5	4.2	3.0	0.3		100.0(668)
모의 취업상태									
취업	29.0	22.8	28.1	13.3	5.6	1.2	0.0		100.0(338)
휴직	38.1	23.8	14.3	19.0	0.0	4.8	0.0	45.3(18)***	100.0(21)
미취업	36.0	20.8	19.5	15.2	3.0	5.0	0.7		100.0(303)
비해당	0.0	16.7	50.0	33.3	0.0	0.0	0.0		100.0(6)
총 자녀수									
1명	26.2	27.0	28.6	13.5	0.0	4.0	0.8		100.0(126)
2명	33.1	20.3	24.5	13.7	5.4	2.9	0.0	32.6(12)**	100.0(408)
3명이상	35.1	21.6	17.9	17.9	4.5	2.2	0.7		100.0(134)
지역 규모									
대도시	38.4	20.3	20.7	11.8	4.2	4.6	0.0		100.0(237)
중소도시	33.5	25.1	19.8	13.2	4.4	3.1	0.9	39.4(12)***	100.0(227)
읍면지역	23.5	20.1	32.4	19.1	3.9	1.0	0.0		100.0(204)

** $p < .01$, *** $p < .001$

주: ①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교육·보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② 금액이 증가해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③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④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 ⑤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⑥내 편의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서, ⑦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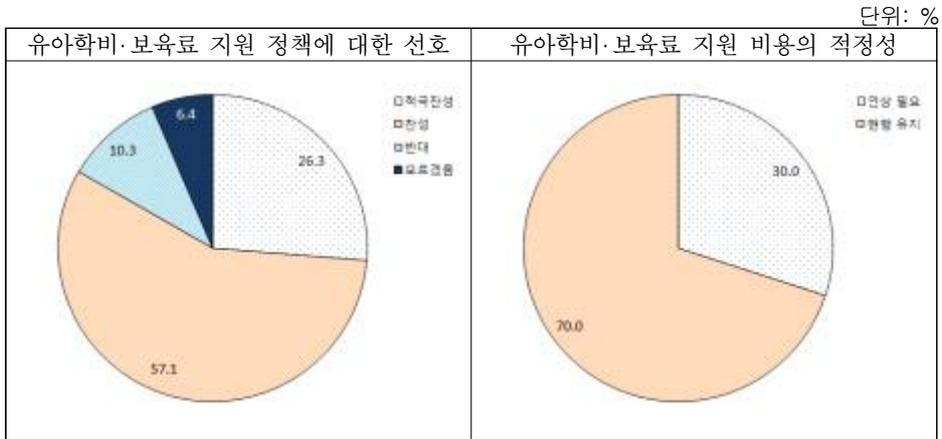
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은 크게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영유아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의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는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후자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선택과 관련한 부모들의 생각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찬반은 아동별 조사 설문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7.1%, 적극 찬성 26.3%로 전체 응답자의 83.4%가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10.3%만이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절대 반대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주 : 1)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이나, 절대 반대 응답이 한명도 없어 도표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비용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한명도 없어 도표에서 제외함.
 2) 전체 응답자 수는 1,820명임.

[그림 V-3-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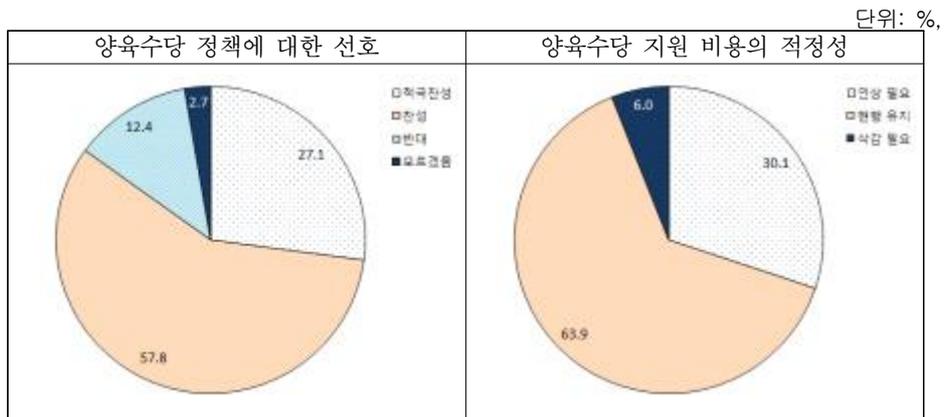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0%,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였으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긴 하나,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상당히 높은 호응도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인상액은 평균 12만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호응도는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면담에 참여한 모든 영유아 부모들이 정부의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상교육 제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중략)... 정말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구나, 말만 노력한다고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저한테도 생기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저소득층 면담, 기○○)

2)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57.8%, 적극 찬성이 27.1%로 84.9%가 찬성 쪽의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2.4%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주: 1)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이나, 절대 반대 응답이 한명도 없어 도표에서 제외함.
 2) 전체 응답자 수는 1,820명임.

[그림 V-3-2]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현행 양육수당의 지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1%로 유아학비·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였으나, 양육수당 지원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3.9%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현재보다

삭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차이를 보였다. 양육수당 인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인상액은 평균 12만3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육수당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삭감액은 평균 8만2천원이었다.

한편, 심층 면담 과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보다는 작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보육료 수준까지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실태조사는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도 동일한 질문한 방식인데 반해, 심층면담 대상자의 경우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이 주로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우에도 영아 자녀에 한해서 양육수당의 인상이 가정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3세 이상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양육수당이) 좀 작아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격 대비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거예요. (양육수당은) 10만원인가 받을걸요... (중략)...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면, 만나이 4세-보육연령 3세에도 가정 양육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원가를 보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소득층 면담, 박○○)

또한,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인상을 희망하는 이유가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양육수당의 인상이 사교육 비용의 증가를 유인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엄마들은 단시간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을 가정 양육과 구분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저는 그걸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 (중략)... 그러니까 유치원을 보내고 싶으면 유치원을 보내고 대신에 수당을 조금 높여주셔서 아니면 바우처를 발행해서 학원을 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5세(생활연령을 의미함)부터는. ... (중략)... 그런데 5세부터는 원가를 하기는 하는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주는 10만원으로는 두 과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되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엄마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가정양육 수당을 하는데 대신에 내가 바우처를 갖고 학원을 간다거나 다른 아이가 특기적성수업을 한다거나. 반드시 유치원을 가야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중략)... (사회자가 정부 지원금이 사교육에 쓰이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묻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가라고 그걸 하면서 정작 엄마가 원하는 교육을 하는건 반대라고 하는건. 어린이집, 유치원 가도 사교육은 다 하잖아요. (중산층, 이○○).

3)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은 가구단위로 질문하였다. 먼저, 현재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1.6%로 가장 많았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24.7%, 특정 연령만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13.7%에 달했다. 전 계층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만약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행과 같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응답이 68.8%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16.6%,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7.7%,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6.9% 순이었다.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6.2시간이라고 응답되었다.

〈표 V-3-1〉 가구 소득별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가구별 조사)
단위: %, 시간(명)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조정 방식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 시 비용 지원 시간	계(수)
	전계층	특정 연령만	취약 계층만	현행 유지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취약 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전체	61.6	13.7	24.7	68.8	16.6	7.7	6.9	6.2	100.0(1,312)
199만원이하	53.4	3.0	43.6	74.3	13.3	12.4	0.0	0.0	100.0(22)
200~299만원	62.2	13.0	24.8	63.5	29.4	3.2	3.9	6.7	100.0(190)
300~399만원	63.9	14.0	22.1	71.0	14.0	8.0	6.9	6.4	100.0(458)
400~499만원	65.1	12.5	22.4	69.8	15.0	7.8	7.4	6.1	100.0(283)
500~599만원	60.4	16.2	23.4	63.6	17.6	10.2	8.5	6.1	100.0(210)
600~699만원	54.0	13.3	32.7	68.9	4.7	7.2	19.2	5.8	100.0(62)
700만원이상	46.8	14.8	38.4	72.2	14.0	10.4	3.5	5.0	100.0(87)
$\chi^2(df, F)$	19.8(12)			33.2(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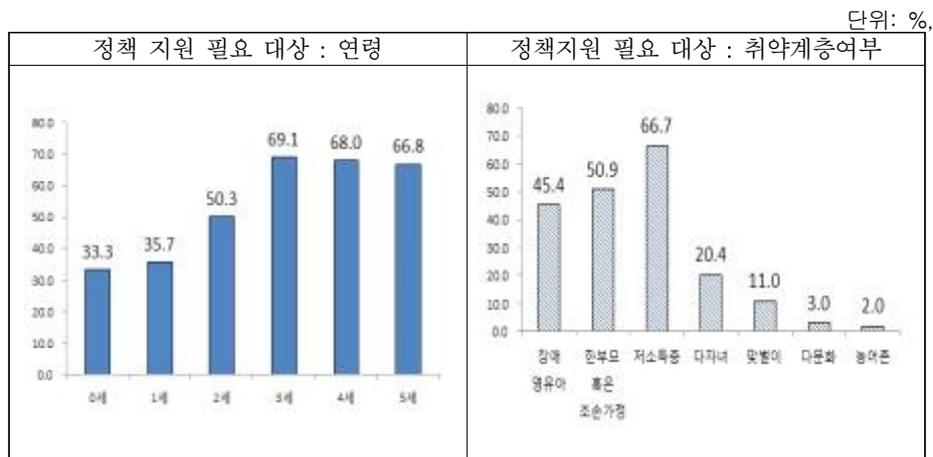
* $p < .05$

주: 1) 지원 금액 조정 방식은 '전 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지원 시간은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서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199만원 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43.6%로 높았는데, 특이한 점은 취약 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은 가구소득이 600만원~699만원인 가구의

32.7%, 700만원이상인 가구의 38.4%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계층에 지원해야한다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가라는 질문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199만원 이하)과 가장 높은 집단(700만원 이상)에서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200~299만원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한다는 응답이 29.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은 다른 소득 구간에 속한 가구에 비해 비용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해서 이뤄지거나 혹은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 주: 1) 연령에 응답한 사람은 180명이며, 각각의 연령별로 필요 여부를 응답함.
- 2) 취약 계층은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비율을 합산하였으며, 응답자수는 386명으로 전체 200%인 비율임.

[그림 V-3-3] 정책 지원 필요 대상(가구별 조사)

한편, 특정 연령의 자녀만 지원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한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모든 연령에 대해 중복 응답)하느냐고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이 필요한 연령으로 3세 이상의 유아기 자녀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유사한 형태로 취약 계층에만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누구인지(2순위까지 응답)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이 66.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이 50.9%로 다음이었다. 이 외에 장애 영유아 45.4%, 다자녀 20.4% 순이었다.

심층면담에서도 이같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반감이 적은 편이었다.

소득이라든가. 예전에 저희 큰애때는 그랬었거든요. 부부소득으로 해서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도 못받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받잖아요. 학교도 다 무상급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부족하다면 조금 차등을 뒤서 상위 몇프로까지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고. 물론 그럼 또 문제가 있겠지만. 불만도 있고. 그런 것도 관찰을 것 같고. 제일 우선인건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혜택을 많이.(중산층 면담, 김○○).

한편,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여전히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8.9%로 대부분이었으며, '부모가 직접 양육 하겠다'는 응답이 12.9%,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5.6%,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이 2.6%였다. 즉, 양육수당의 인상은 가정 내 양육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V-3-2〉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단위: %, 만원(명)

	부모직접 양육	개별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계속 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chi^2(df)$	계(수)
전체	12.9	2.6	78.9	5.6		100.0(1,421)
이용 기관						
어린이집	14.8	2.6	78.5	4.2	15.0(3)**	100.0(908)
유치원	9.7	2.5	79.7	8.0		100.0(513)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17.1	2.4	75.9	4.6	30.1(9)***	100.0(737)
10~30만원 미만	8.9	2.2	81.8	7.1		100.0(448)
30~50만원 미만	8.4	3.0	83.4	5.1		100.0(151)
50만원이상	5.9	5.6	82.5	6.0		100.0(8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인상시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고,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지금 이용 기관을 지속적

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78.5%, 79.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육수당 인상 시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할 때 교육·보육서비스의 변경 이용 의사를 살펴보면,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양육수당이 인상되더라도 현재 이용 기관을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표 V-3-3〉 가구 특성별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단위: %, 시간(명)

	부모 직접양육	개별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계속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chi^2(df)$	계(수)
전체	12.9	2.6	78.9	5.6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5.8	2.8	86.2	5.2	97.6(9)***	100.0(639)
휴직	23.1	12.3	51.7	12.9		100.0(69)
미취업	18.4	1.5	75.0	5.1		100.0(710)
비해당	0.0	0.0	81.4	18.6		100.0(4)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7.6	1.6	76.0	4.8	46.4(18)***	100.0(33)
200~299만원	21.8	0.5	74.7	3.0		100.0(196)
300~399만원	14.8	3.1	77.1	5.1		100.0(486)
400~499만원	9.8	2.5	78.8	8.8		100.0(335)
500~599만원	7.3	1.7	85.3	5.7		100.0(243)
600~699만원	11.3	6.7	80.0	1.9		100.0(63)
700만원이상	8.7	4.9	82.8	3.7		100.0(67)

*** $p < .001$

반면, 모가 휴직자이거나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양육수당의 현금 지원 수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대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양육수당 인상에도 부모가 직접 양육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또래 경험 발달'을 위해서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부모가 일을 해야해서' 25.0%, '기관보육의 질이 좋아서' 19.4%,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4.6% 순이었다. 특히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일을

해야해서'라는 응답이 45.1%로 높은 반면, 모가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또래 경험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다.

〈표 V-3-4〉 모 취업상태별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또래 경험 발달	기관 보육의 질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부모가 일을 해야해서	$\chi^2(df)$	계(수)
전체	50.0	19.4	4.6	1.0	25.0		100.0(1,237)
모의 취업상태							
취업	39.0	12.0	3.5	0.3	45.1	299.3(12)**	100.0(602)
휴직	42.1	17.9	2.6	0.9	36.5		100.0(53)
미취업	62.3	27.0	5.8	1.8	3.0		100.0(579)
비해당	13.0	54.1	18.6	0.0	14.3		100.0(4)

** $p < .001$

나. 영유아를 위한 적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

지금부터는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간, 이용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일반적인 영유아를 가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들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가 5세인 경우에도 아이가 0세일 때는 어떤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영유아 부모들은 1세 이전에는 개별 돌봄 서비스가 아이를 위해 가장 적당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세 이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가정 내 양육은 1세 정도까지가 적합하며, 이후에는 기관 보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5〉 아동연령별 적당한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가구별 조사)
단위: %(명)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				계(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	기타	
0세	19.2	76.1	4.7	0.0	100.0(1,312)

(표 V-3-5 계속)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				계(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	기타	
1세	31.6	63.3	4.8	0.2	100.0(1,312)
2세	67.4	28.0	3.7	0.9	100.0(1,312)
3세	92.5	4.1	2.4	1.0	100.0(1,312)
4세	97.3	0.5	0.6	1.7	100.0(1,312)
5세	96.2	0.1	0.3	3.4	100.0(1,312)

아동의 연령별 및 교육서비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0세는 평균 5.8시간, 1세~3세는 6~7시간 사이, 4세이상은 7시간 내외 정도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5~6시간 정도를 적당한 시간으로 생각했으며,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세 이전에는 평균 4시간미만, 4세 평균 4.6시간, 5세 5.3시간가량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표 V-3-6〉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 시간(가구별 조사)
단위: 시간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교육·보육 서비스	기타
0세	5.8	5.3	3.6	-
1세	6.3	5.4	3.6	5.0
2세	6.6	5.8	3.6	4.5
3세	6.8	6.0	3.8	5.9
4세	7.0	6.2	4.6	5.7
5세	7.1	5.3	5.3	5.0

평균 적정 이용비용은 개별 돌봄 서비스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 순이었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20만원 내외로 응답되었으며,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적정 비용은 대체로 20만원 이하로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개별 돌봄 서비스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비용도 높게 나타났는데, 3세 이전에는 대체로 30만원대의 비용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4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개별 돌봄 서비스가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가구가 10개미만으로 이 비용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때,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의 적정 이용비용은 현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이용비용과 비교하여⁴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비용(가구별 조사)

단위: 만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교육·보육서비스	기타	평균
0세	17.3	30.0	14.7	-	26.9
1세	18.4	30.4	14.3	20.0	25.8
2세	18.9	33.6	16.6	17.7	22.9
3세	19.8	35.7	19.4	30.1	20.5
4세	20.6	64.5	15.1	40.1	21.1
5세	21.1	45.4	20.9	28.6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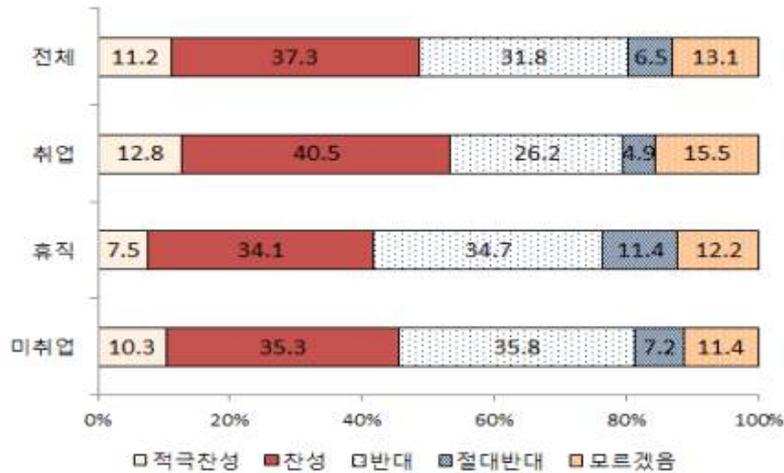
한편, 2016년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맞춤형 보육 정책은 2016년에 있었던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의 중요한 정책 변화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은 영아들의 기관 이용 시간에 부모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적정 서비스 및 이용비용에 대한 설문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자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닌 영유아 부모 전체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도출된 것이다. 즉, 맞춤형 정책의 수혜 집단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은 반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 응답자의 48.5%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찬성(적극찬성+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3%는 반대(반대+절대반대)한다고 응답하여, 반대보다는 찬성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3.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영유아

44) 현재 어린이집 이용비용 총액 평균은 6만5천원이었으며(<표 IV-2-5> 참조), 유치원은 19만4천원(<표 IV-2-12> 참조),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11만8천원(<표 IV-2-24> 참조), 개별돌봄서비스 56만3천원(<표 IV-2-32> 참조)였다.

가구도 상당수입을 엿볼 수 있었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들이 미취업모에 비해서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좀 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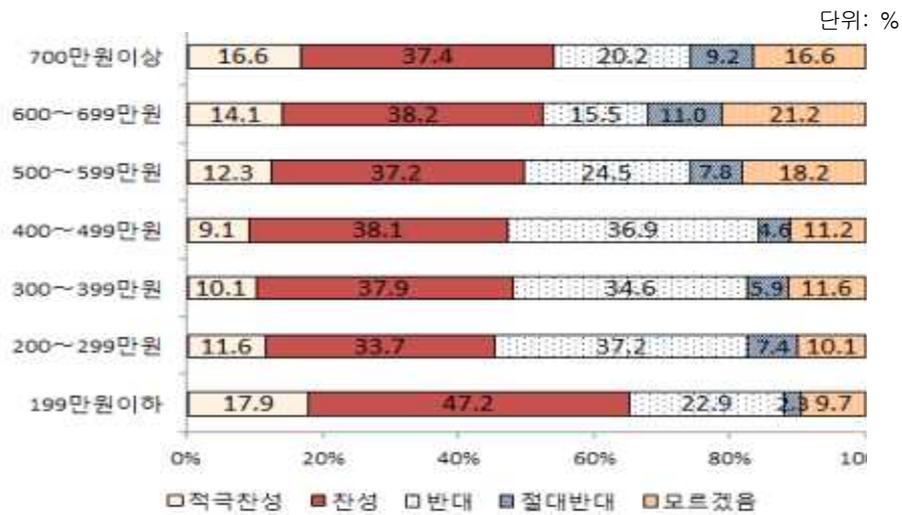
주: 영유아 가구 1,312명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4점 척도로 조사됨.

[그림 V-3-4]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65.1%)이 가장 높았으며, 20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종일반을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장시간 기관 이용이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아서(19.3%)', '현재 이용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18.4%)',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11.3%)', '보육의 질 향상을 기대(4.3%)' 순이었다. 반대로,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조차 이용이 어려워짐(25.1%)', '맞춤반 이용후 추가 이용 필요함(17.6%)', '정부가 무상 보육

을 약속했으므로(13.3%), '보육의 질 하락 우려(8.6%)', '종일반 이용시 자격 증명 등의 불편함(8.4%)' 순이었다. 즉,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 절차적인 어려움이나 보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 등 보다는 지원의 형평성 정부의 약속 등의 정서적 이유와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따르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5] 가구소득 수준별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다.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각 항목별로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이 6.1점,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가 5.9점, 육아정보상담제공이 5.8점 순이었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와 기관 미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은 5.7점에 그쳤으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은 5.5점으로, 설문에 포함된 8가지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7점 척도이므로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영유아가

구들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으나, 그 중에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과 양육수당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현재 상태에서 현금성 지원의 확대를 크게 희망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들은 현행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어, 보편적 지원을 유지하되 지원금의 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점



주 : 1) 총 1,312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함.

[그림 V-3-6]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가구별 조사)

이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먼저, 필요성 평균 점수가 높았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은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이 200~299만원인 경우(6.2점)와 700만원 이상인 경우(6.3점)에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은 소득이 가장 낮은 199만원 이하에서만 5.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6.3점에서 6.5점 사이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사는 영유아 가구가 읍면지역에 사는 영유아 가구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확충의 필요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우선 설치가 이뤄지는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표 V-3-8〉 가구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가구별 조사)
단위: 점(명)

	국공립 어린이 집 혹은 유치원 확충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기관 미이용 자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교육·보 육기관 서비스 질향상	다양한 보육유 형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정 보상담 제공	계(수)
전체	6.4	5.5	5.7	6.4	5.9	5.7	6.1	5.8	1000(1,312)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6.5	5.3	5.8	5.9	5.2	5.6	6.0	5.4	1000(22)
200~299만원	6.2	5.4	5.8	6.3	5.6	5.5	5.9	5.6	1000(19)
300~399만원	6.5	5.5	5.8	6.4	5.9	5.8	6.0	5.8	1000(43)
400~499만원	6.5	5.6	5.7	6.4	6.0	5.8	6.2	5.8	1000(23)
500~599만원	6.5	5.6	5.7	6.5	5.9	5.8	6.2	5.9	1000(21)
600~699만원	6.6	5.5	5.5	6.5	6.0	5.6	5.9	5.8	1000(62)
700만원이상	6.3	5.4	5.2	6.4	5.8	5.5	6.2	5.7	1000(87)
<i>F</i>	3.8**	0.5	2.4*	2.2*	3.8**	1.8	2.9*	2.2*	
지역 규모									
대도시	6.5	5.6	5.7	6.4	5.9	5.7	6.0	5.7	1000(32)
중소도시	6.5	5.5	5.8	6.4	6.0	5.8	6.2	5.9	1000(47)
읍면지역	6.1	5.3	5.5	6.3	5.7	5.7	6.0	5.7	1000(24)
<i>F</i>	18.5**	2.2	2.7	1.0	3.9*	0.6	7.7**	5.6**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총 1,312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함.

한편, 필요성과 별개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다른 항목에 비해 확연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4.3%였으며, 일가정 양립지원 10.0% 순으로, 앞서 필요성이 높게 응답된 항목에서 우선순위도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가정에서는 기관의 수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의 필요성 점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8.5%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이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특정 집단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는 요구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그림 V-3-7]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하는 정책(가구별 조사)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영유아 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비용이 제일 큰 것 같고. 저 친한 언니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아무래도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많이 다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선호하더라고요. 제일 큰건 비용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 면담, 송○○)

그런데 국공립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이번에 안보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해서라도 어렸을 때 보내게 된거고. 아무래도 저는 교육 방식이라든가 금액같은 면도 되게 컸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이외에 돈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활비라든가 심지어 물티슈를 갖고 와라, 휴지를 갖고 와라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중산층 면담, 한○○)

4. 소결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시간제 학원 등 시간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만족도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때, 서비스 종류별로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족도 또한 개별 돌봄 서비스가 높은 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학습지가 가장 적었지만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많다고 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4시간이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의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2시간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장시간 이용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자, 현재 이용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의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시간을 늘리지 못한 이유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라는 응답이 26.4%로 다음을 차지했다.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셋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증가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 증가를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 가격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5만7천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유보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은 '좀 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34.3%였다. 이 외에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이 10.3%, '부모 직접 양육'은 9.2%였다. 이때,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부모 직접 양육'보다는 '다른 사교육 기관으로의 변경'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취업모의 경우에는 미취업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유보가격 자체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다 유보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좀 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섯째, 유보가격을 초과할 경우 이용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줄여든 시간만큼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의 서비스 이용'이 22.0%로 다음을 차지했다. 아동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긴 했으나, 3세 이상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적극찬성 + 찬성)는 의견은 83.4%였으며, 현재 지원 비용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0%, 현행 지원 수준보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였다.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적극찬성 + 찬성)는 의견은 84.9%였으며, 현재 지원 비용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3.9%, 현행 지원 수준보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1%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양태를 보였다.

일곱째,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으로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1.1%로 가장 많았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24.7%, 특정 연령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13.7% 있었다. 전 계층에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 금액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높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16.6%,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7.7%,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6.9%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6.2시간이 비용 지원이 필요한 적당한 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약 계층만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 66.7%,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50.9%, 장애 영유아 45.4%, 다자녀 20.4% 순이었다.

여덟째,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8.9%로 대부분이었으며, '부모 직접 양육' 12.9%,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5.6%,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2.6% 순이었다. 양육수당이 인상되어도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자녀의 '또래 경험 발달'(50.0%)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양육

수당 인상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직접적으로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영유아 부모들은 1세 이하 영아를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보육서비스로 개별 돌봄 서비스를, 2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꼽았다. 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0세는 하루 평균 5.8시간, 1세~3세는 6~7시간, 4세 이상은 7시간 내외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이용비용과 비교하여, 교육·보육서비스의 적정 이용비용으로 현재 지출 비용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응답하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위해 약간의 추가 지출 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열번째,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은 반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8.5%가 찬성(적극찬성+찬성)인 반면, 38.3%는 반대(반대+절대반대)하였다. 맞춤형 보육에 찬성하는 경우 '종일반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0%)'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조차 이용이 어려워진다(25.1%)'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열한번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별 필요성(7점척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은 5.5점으로, 8개 항목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필요성과 별개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41.8%로, 다른 항목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VI. 정책 제언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영유아 가구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안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와 지출 실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와 의견 등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과 일반적인 국민 인식 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 기본 방향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출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도 이후에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가구 소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편차가 줄어들어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는 일부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및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사교육 기관 순으로 비용 지출이 많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연간 추산액은 6조 4,114억 8,534만원, 사교육비용 연간 추산액은 1조 3,151억 7,648만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보육을 위해 추가 지출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학

비·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지원 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을 유지하되, 유보 통합과 영유아의 발달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시간을 설정하여 지원한다. 둘째, 비용 지원금 수준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수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육·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강화한다. 셋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때,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고 비용에 대해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비용 지원보다는 부모들의 이러한 요구를 흡수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 정책 방안

가. 적정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시간 설정 및 지원 방안

1) 적정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시간 설정

유치원의 하루 운영시간은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3~5시간의 교육과정과 그 이후 시간인 방과후 과정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서울특별시 교육청, 2015: 5) 반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7:30부터 19:30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보건복지부, 2016a: 67)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⁴⁵⁾ 및 영유아보육법⁴⁶⁾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 유아교육·보육은 표준보육과정 및 현행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45) 유아교육법 제 13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9:00~14:00)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5 : 5).

46) 영유아보육법 제 34조(무상보육)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따르면, 만 3세이상인 영유아에서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 받는 경우와 3세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법 제29조(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영유아 가구들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일한 지원금으로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어린이집의 고충이 커졌으며,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보육 시간(국가지원기본시간)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4시간이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7.2시간이었다. 또, 대부분의 경우(82.6%)가 현행 이용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현행 하루 12시간의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를 위해 적당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은 0세 5.8시간, 1세~3세 6~7시간, 4세 이상은 7시간 내외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OECD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기본 시간은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스페인/스웨덴 주당 33시간, 노르웨이 주당 35시간, 영국 주당 30시간 미만이었으며, 뉴질랜드 3~4세 주당 20~30시간, 핀란드 하루 4시간 등이었다(최윤경 외, 2015: 41).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요구와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지원기본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추가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한편, 무상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지원기본시간이 확정되면, 국가지원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국가지원기본시간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가지원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여부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교육·보육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추가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다.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추가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얼마가 증가하든 현재 이용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6%에 달했으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 가격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5만7천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유보가격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가격보다는 서비스의 질 혹은 이용 시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즉, 적정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는 오히려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익자 부담 이용 시간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등을 합쳐서, 영유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제처 홈페이지⁴⁷⁾).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교육·보육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 공제액을 증액해 줌으로써, 추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사교육으로의 이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유보통합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요컨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에 크게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은 8시간 내외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8시간의 국가지원시간

47)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6&ccfNo=3&cciNo=4&cnpClsNo=1>, (2016. 11. 4 인출)

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종일반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가계 부담은 세제혜택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영유아 부모들에게도 장시간 기관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를 유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에서는 영아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 정책이 이러한 취지와 맞닿아 있는 정책(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맞춤형 보육⁴⁸⁾)이긴 하나,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종일반과 맞춤형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점, 불가피하게 장시간 기관 돌봄을 필요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유아보다 영아에 대한 장시간 보육을 더 희망한다는 점, 특히 영아가 많이 다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의 국가지원시간 설정과 관련한 문제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현재와 같이 유치원과 이원화된 운영시간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다면 기관의 특성을 살려 무상보육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종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누리과정에 국한할 것인지, 현행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는 누리과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부과되는 유치원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조정해갈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숙제로 남겨져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욕구와 비용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원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를 제안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안은 유보통합 등을 포함한 보육정책 중장기 방안 등의 후속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나. 교육·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내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시범사업 실시

영유아의 시간제 학원, 학습지, 개별 및 그룹지도 등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추정비용은 월평균 4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 비용(월평균

48)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안내,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7&topTitle=%B8%C2%C3%E3%C7%FC%20%BA%B8%C0%B0 (2016 .12 .15일 인출).

19만5천원)의 20.5%가량이었다.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3세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의 경우에는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도 시간제 학원 이용 비율이 41.9%에 달하며, 전반적인 사교육 이용비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영유아의 경우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체육, 미술과 같은 예체능 과목을, 가정내 개인 및 그룹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글, 미술, 영어 과목을,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글, 수학, 영어 등의 학습 과목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영유아 부모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만족도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사교육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1세부터 사교육 이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용하는 경우 주로 학습지와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3세 이전의 영유아 부모들은 주로 이런 서비스를 자녀의 소질개발과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응답하였다. 3세 이전의 사교육 서비스가 주로 놀이 위주의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정 내 양육 지원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영유아 자녀에 대한 놀이와 학습이 가정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지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는 한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가정 내 양육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아닌, 부모 혹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교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 보육·교육과 가정 내 양육이 병행하여 균형 있게 이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지원 방안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나 쉼터 등에서 기관 이용 후 오후 시간에 엄마와 함께 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역 사회 내 지도가 가능한 엄마가 있다면 이러한 재능 기부 활동을 영유아 가구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모 교육에서 아이와 함께 책읽기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현재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육아서비스나 육아품앗이 등이 이와 유사한 예이다. 하지만, 현재 공동육아서비스 및 육아품앗이 등의 지원은 그 절대적인 양 뿐 아니라, 이용 편의가 떨어지는 등 영유아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형태의 공동육아 및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을 차츰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영유아 가구의 생활 공간과 밀착되고 소규모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영유아 아이들에게 부모 혹은 친구와 함께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봄 직하다. 이때, 뉴질랜드의 Play Centre나 호주의 Play Group 등이 참고할만한 좋은 해외사례라 사료된다. 뉴질랜드의 플레이센터⁴⁹⁾는 아이들의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영유아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다른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육아 및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⁵⁰⁾. 호주의 플레이 그룹⁵¹⁾은 놀이 뿐 아니라, 육아정보 및 아이디어 등을 나누는 지역 육아공동체의 개념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활동을 하며, 놀이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육아지원 서비스는 그 효과가 간접적이고,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실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이후 사교육 뿐 아니라 기관 이용의 필요가 높지 않았던 영아 자녀들까지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측면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가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과도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축소하고 가정내 양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다. 어린이집·유치원 특별 활동 서비스 질 관리 및 내실화

영유아 자녀들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49) 뉴질랜드 Playcentre 홈페이지, <http://www.playcentre.org.nz/>, 2016. 11. 18일 인출

50)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서 455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http://www.playcentre.org.nz/>, 2016. 11. 18일 인출).

51) 호주 Play Group 홈페이지, <http://playgroupaustralia.org.au/about-playgroup/what-is-playgroup/> (2016.11. 18일 인출)

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44.6%)'이었으며, 두번째로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20.1%)'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교육 서비스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치될 것 같아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1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무료한 오후 돌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사교육 이용을 대체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과정상의 문제로는 보육료 상한제로 인한 운영비 부족을 특별활동비로 전가하는 현상(최성은, 2016 : 29)이나 이로 인한 학부모의 보육비용 경감 효과 축소(서수경, 2012 : 4)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 라인⁵²⁾'이나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⁵³⁾ 등을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횟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기준이 보육·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를 특별활동 실시 이전에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별활동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3.9%(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3.3%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별활동 참여는 희망하는 아동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교육비의 인하(16.1%)' 보다는 '강사의 질 향상(58.9%)', '프로그램 다양화(57.2%)' 등의 문제를 보다 우선적인 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어린이집

52)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2014c).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기 바란다.

53) 구체적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16. 2).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도·감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83.4%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양육수당에는 84.9%가 찬성하였다. 현행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 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0~70%,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체계를 지금과 같이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하되,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지원금의 규모는 크게 인상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행 전 계층 지원 기초를 유지하되, 이러한 지원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에 따르면, 유아학비·보육료 재정 지출 전망치는 현행 지원단가가 향후 10년간 유지될 경우 2015년 8조 9,997억원에서 2024년 9조 189억으로 매년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나, 큰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박진아·박창현·엄지원, 2015 : 96). 또, 지원단가가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와 매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경우에는 2024년에 각각 10조 726억원, 11조 7,333억원으로, 현행 지원 단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약 1조원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박진아·박창현·엄지원, 2015 : 96). 즉, 현재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유지하면서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9조원 내외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⁴⁾. 유아학비·보육료

54) 이에 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교사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보육을 위해서는 연간 16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진아·박창현·엄지원, 2015 : 97).

지원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나, 지원 단가를 크게 증액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재원이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원 마련 및 분배 방식 등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를 요하는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담기는 어렵다. 다만, 유아학비·보육료(혹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였고 현행 법령55)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앙정부56)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57)로 편성해야” 한다는 시·도교육청58)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장시간 지속되는 상황은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따라서, 매년 초 영유아의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며,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5)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1항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등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가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9조(의무지출의 범위) 4항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4조 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2015년 10월 6일 개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간주하고 있다.

56) 연합뉴스(2016.1.5.일자), <전문> 최경환 부총리 발표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5/0200000000AKR20160105148000002.HTML?input=1195m> (2016.11.4 인출)

57)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임.

5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2015. 10. 5)”,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블로그 <http://joenedu.kr/220500211259> (2016.11.4. 인출)

마.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와 중재 프로그램 실시

현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에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경우는 장애 영유아와 농어촌 양육수당(보건복지부, 2016a : 288~300) 등이 있다. 하지만,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에서의 차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 조사 결과,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으로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긴 했지만, 취약계층에만 차등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24.7%에 달했다. 한편,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이 6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해도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며,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을 전후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분위별 가구소득 탄력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부의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서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형평성이 제고된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정책 시행 이후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수익자 부담금 형태로 부과되는 특별활동 등 선택적 교육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의 확대는 해당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오히려 사교육 이용을 부추켜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지원 효과를 상쇄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예로는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취학 1년 전(5세아)에 한해 초등 입학 이후 학업 지체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는 아이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고려해 봄직 하다. 현재 초등

이상 학령기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⁵⁹⁾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교구활동이나 예체능, 체험 활동 등⁶⁰⁾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이용 시 비용을 면제해주거나, 현재 저소득층 6세~19세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직 하다.

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 유도

1)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확충’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7점 만점에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응답자의 41.8%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은 월평균 5만3천원, 공립 유치원 4만8천원으로 민간어린이집 7만4천원, 가정 어린이집 6만, 사립유치원 23만6천원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공립 기관이 저렴할 뿐 아니라, 교사의 질 관리 등에서 보육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 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큰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보육비용의 실질적인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보건복지부, 2016a : 4)하도록 하고 있다. 반

59) 물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은 비용 경감보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심리를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 (2016. 11.18일 인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60) 이러한 활동은 문화 활동이면서 동시에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면, 시군구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률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공급률은 10% 미만이었다(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39).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영유아가 많은 지역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미 도시의 형성이 완료된 대도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의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부모 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강화

4세 이상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예체능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놀이보다는 학습으로서의 목적이 점차 커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상당수의 유아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후 한글 학습지 혹은 예체능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4세 이상 유아의 경우 소질 개발이나 또래경험이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긴 했지만, 초등학교 선행학습이나 또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문제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이 7시간 내외로, 기관 이용 후 별도의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이 자녀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유아기 사교육 이용은 초등이후 학교 적응 및 학습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과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교육에서는 별도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안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직장을 통한 부모교육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맞벌이 가구를 위한 종일반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모를 위한 지원은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 우선순위 부여와 아이돌보미 지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꼭 맞벌이 가구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⁶¹⁾ 등이 맞벌이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9시간으로 미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이용시간 6.9시간에 비해서는 약 1시간가량 길긴 하나, 대체로 9시간 이내였다. 한편, 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보가격이 높고,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오후 시간에 아이가 교사의 교육·보육으로부터 방치되는 것이 두려워, 시간제 학원 및 개별 돌봄 서비스 등으로 이러한 필요를 대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가 우선함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오후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구분하여, 오후 시간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거나 오후 시간동안 담임교사의 잔업을 도와줄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종일반에 참여하는 영유아들이 오후 시간에도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별도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을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유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61) 평일 19:30~24:00와 토요일 15:30~24:00에 제공되는 시간연장 보육, 19:30~익일 7:30에 운영되는 야간 보육, 7:30~19:30에 제공되는 24시간 보육,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6a : 297~299).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2014).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2016). 유아학비 지원계획.
- 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 집단의 선호 분석 :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205~235.
- 김수정 (2015).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경제와 사회*, 105, 64~93.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나정 (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분석 :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학논집*, 18(1), 49~71.
- 민연경·장한나 (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2), 97~138.
- 박미경·조민호 (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 박진아·박창현·엄지원 (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반정호 (2010). 한국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수준의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7).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0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0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1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1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2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3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3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3c).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14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4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4c).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2015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5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6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6b). 보육사업안내 부록.
- 백선희 (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24, 50~56.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 (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구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 (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및 대응방안 연
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
아정책연구소.
- 서수경 (2012).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필요경비 가이드라인 구축. 서울시여성가
족재단.

-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01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 신윤정·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하영 (2013).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149~185.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 (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윤희숙 (2014).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1.
- 이용우 (2011). 기업의 특성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 대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금융경제이슈분석, 111~129.
- 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 (2014).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I.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황성운·김미나 (2012). 2013-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 장지연·이혜정 (2008).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유형-사건계열분석기법을 이용한 취업력 분석. 노동리뷰, 42, 76~86.
- 전윤정 (2014).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 '무상보육' 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2), 113~151.
- 조경엽·유진성 (2013).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효과. KERI Insight 12-09, 1~19.
- 조하나·박은혜 (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예산 변화. 육아지원연구, 4(2), 29~50.
- 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성은·우석진 (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 (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 규제. 재정포럼, 235, 현안 분석2, 23~35.
- 최윤경·이진화·박진아·조형숙·권혜진·조혜주 (2015).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연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Koenker, R. and G. Bassett (1978).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46(1), 33~50.
- Lino, M (2014).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USDA.
- Macindoe, H., & Abbott, A.(2004).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Technique for Social Science Data. *Handbook of Data Analysis*. Sage Publication.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2조
- 유아교육법 제 4조 1항
- 유아교육법 제 13조
- 유아교육법 제 2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9조 4항

[통계 원자료]

- 노동패널조사 2004년(7차)~2014년(17차) 원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0)/2014년추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parentId=A#SubCont, 2016년 6월 30일 인출.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parentTabId=M_01_01#SubCont, 2016년 10월 29일 인출.

[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교육부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oeblog/220603412041>, 2016년 3월 15일 인출.

뉴질랜드 Playcentre 홈페이지, <http://www.playcentre.org.nz/>, 2016년 11월 18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6&ccfNo=3&ccciNo=4&cnpClsNo=1>, 2016년 11월 4일 인출.

보건복지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 2016년 11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육료 안내,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6. 12.30 인출.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안내,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7&topTitle=%B8%C2%C3%E3%C7%FC%20%BA%B8%C0%B0, 2016. 12. 15일 인출.

연합뉴스(2015.11.10.일자), 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 혼란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9/0200000000AKR20151109126200054.HTML>, 2016년 3월 15일 인출.

연합뉴스(2016.1.5.일자), <전문> 최경환 부총리 발표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5/0200000000AKR20160105148000002.HTML?input=1195m>, 2016년 11월 4일 인출.

조선일보 (2016.1.1.일자), '누리예산' 편성 놓고 몸싸움, 난장판 된 경기도 의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1/2016010101664.html?anyNewPop, 2016년 3월 15일 인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블로그 <http://joeunedu.kr/22050021125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2015. 10. 5)”, 2016년 11월 4일 인출.

호주 Play Group 홈페이지, <http://playgroupaustralia.org.au/about-playgroup/what-is-playgroup/>, 2016년 11년 18일 인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 2016. 12.31 인출.

SBS뉴스(2016.1.17.일자), [취재파일] 누리과정에서 시작한 ‘보육대란’ 정말 오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501, 2016년 3월 15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 5a). Child benefit.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leaflets/2011/10/20/q-a-child-benefit-information-for-parents>, 2016. 5. 18.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 5b). Child budget. <https://www.government.nl/topics/child-benefit-schemes/contents/child-budget>, 2016. 5. 18.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Netherlands(2016. 5b). Childcare benefit. <https://www.government.nl/topics/child-benefit-schemes/contents/childcare-benefit>, 2016. 5. 18. 인출.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PERFAR (2016. 5). Family policies: Netherlands(2014). <http://www.perfar.eu/policy/family-children/netherlands>, 2016. 5. 18. 인출.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a). Child allowance.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ut/p/a1/hY5NDoIwEIXPwgFkiqBhWyFi6kINC3A2BpKhkkCpWk9vuBefbuXfO8HEGpA1bheNrbXqhkWj9tbcsizqMjYMS3iDeOXcxQnp7UQJZuB6wywL-LsX74C_CA_GgSgHHQ7v6l2gM_yVeV82eWqjVMJaKgJQya868lC7b0PpXZk1EjKhhNBSQoeY81WuHeSB8EbAh9Pfg!/?1dmy&urile=wcm%3apath%3a%2Fcontentse_responsive%2Fprivatpers%2Fforalder%2Fnar_barnet_ar_fott%2Fbarnbidrag에서

2016. 5. 19. 인출.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b). 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ut/p/a1/hY5NDolwEIXPwgFkiqBhWyFi6kINC3A2BpKhkkCrpWk9vuBefbuXfO8HEGpA1bheNrbXqhkWj9tbcsizeMjYMS3iDeOXcxQnp7UQJZuB6wywL-LsX74C_CA_GgSgHHQ7v6l2gM_yVeV82eWqjVMJaKgiQya868lC7b0PpXZk1EjKhhNBSQoeY81WuHeSB8EbAh9Pfg!/?1dmy&urile=wcm%3apath%3a%2Fcontentse_responsive%2Fprivatpers%2Fforalder%2Fbostadsbidrag, 2016. 5. 19. 인출.

Social Insurance agency, Sweden (2016c). Pregnancy benefit.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vantar_barn/graviditetspennning/!ut/p/a1/vZJfT4MwFMU_yx54JL3Q8mePMBW3KWq2xcELKaPD6ihdqUT36S3PZs5lXpu-3DT5nZ7Tg3K0RrmgPa-p5q2gu2HP_YLcXk2cZALzh-tjDJGPp0933o1zjwl6RjnKN0JL_YKyTSs0G06hWCdb0fGeWSAV76mWTHUWbFtFdxVTFvRUaKqKkiphQa2MaMU1051kQnBRW6DeS8Xfiu9Xg6Lc8AplEIAfEsexGRCwCbhbe0zY2PYwENcvA48ybCxkxgIcmQh-5fBnQmYkgqOMGaDFmW8-AfT_GBi7FwNTQiBaxcl8ATFepuRyYgKidYJoFeKpu3g8P8PZqY81xeCv-30emQIPxf3QaP1PDZZNE-JPWxyW26Yp0tSmZQjY29XRaPQFzLBhIA!/dl5/d5/L0lDUmlTUSEhL3dHa0FKRnNBLzRKVXBDQSEhL2Vu/?keepNavState=true에서 2016. 5. 19. 인출.

The official site of Sweden (2016. 1. 4.). 10 things that make Sweden family-friendly.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에서 2016. 5. 19. 인출.

Abstract

Infants Education and Child-care Cost Estimate Research(IV)

Hyomi Choi, Gilsook Kim, Dongha Lee, Junbum Lim

This study represents the fourth-year installment in a 5-year research project, "Infants Education and Child-care Cost Estimate Research", with the objective of exploring policy alternativ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sts spent by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infants and toddlers) on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government-provided subsidie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utilizing the KLIPS data regarding the efficacy of support polici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for early children are as follows. First, in all cohorts, direct care by the parents was the most prevalent mode of childcare for early children who had not yet reached their first year, regardless of the year of birth. The age at which children were first sent to childcare centers tended to be progressively earlier in the more recent cohorts. In particular,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by children aged 1 or above grew dramatically since 2012 - the year when full cost support was extended to households of all incomes. Second, in 2012, a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as observed in the average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n of the same age. However, this cost decrease took place only in 2012, with the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childcare among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rising again in 2013 - the year when full cost support in addition to childcare allowance payments were extended to infants of all ages from households of all incomes. Third,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ccount for the possibly disparate distributions across groups defined by the level of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Results of the quantile regression indicate positive (+) household income elasticities in all

quantiles, with larger elasticities observed among quantiles with lower expenditure.

Meanwhile, in 2016,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s among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was 169,000 KRW, with elder children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expenditure. In terms of the type of service used, the monthly average expenditure amo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was 65,000 KRW while the average expenditure among children enrolled in kindergarten was 194,000 KRW. The average total cost of time-based private education services was 118,000 KRW, with higher expenditure and a wider variety of services used among children of higher age and in higher-income households. The majority of children under individual childcare services were cared for by relatives, with the babysitter being paid an average monthly fee of 563,000 KRW. Among these cases, the highest expenditure was associated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 The average estimated monthly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childcare per child was 195,000 KRW. The cost estimates for private education and time-based private education were 43,000 KRW and 40,000 KRW, respectively. Scaling this to annual figures for the country as a whole, the total estimated cost stood at 6,411,485.34 million KRW.

Next, the views expressed by the interviewed parents of early children about their future plans regarding education and childcare and the relevant government polici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asked about the degree of their willingness to bear additional costs in the event of cost increases in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47.6% of the parents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tinue using the current facility regardless of the cost increase'. Those who gave a reservation price - indicating the maximum level of additional fees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57,000 KRW on average. Second, 83.4% of parents expressed approval (strongly agree + agree) for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70% responded that the support payments

should be kept at current levels, while 30% responded that an increase beyond current levels was needed. Third, 84.9% of parents expressed approval (strongly agree + agree) for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for childcare allowance. 63.9% responded that the current level of allowance payments was adequate, while 30.1% expressed the need for larger allowance payments. Fourth, the majority of parents (78.9%)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tinue sending their child to the current childcare center or kindergarten' even if childcare allowances were to be increased to match the level of the subsidi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The chief reason for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the use of facilities was so that the child could 'develop peer experiences (50.0%)' .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several improvements in the support policies for the education and care of early children.

보론

보론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표본설계

보론 2.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이유 및 개선점

[보론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표본설계

1. 모집단 정의

가. 목표모집단 정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목표모집단은 “설문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현 시점에서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5세”를 모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미취학자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 대상자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 조사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0~5세 자녀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로, 부모가 원칙이며 조손가정과 같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주양육자(예: 조부모)를 최종 대상으로 보았다.

나. 조사모집단의 정의

조사 모집단은 실제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이다. 따라서, 조사 모집단은 2016년 4월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20,844,009세대 중 0~5세 아동이 있는 세대로 정의하였으며, 조사 모집단 표집틀은 2016년 행정자치부 행정동 수 및 세대수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평균 60가구)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정보로서 통계청의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를 활용하였다.

다. 모집단 분포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세종시 포함)로 1차 층화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모집단은 대도시, 중소도시(동부), 농어촌(읍면부)으로

2차 층화하였고,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구'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표본추출대상은 가구단위로 본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내에 0~5세 영유아가 있으면 해당 자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추정시 보정을 위해 통계청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0~5세 영유아 추계인구를 2,713,410명,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총 세대수는 20,844,009세대이다. 0-5세의 각 세별 16개 지역별 분포는 <보표 1-1>~<보표 1-3>과 같다.

<보표 1-1> 0-5세의 16개 지역별 분포

행정구역별	2016 추계인구 (명)						
	0-5세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486,452	91,817	87,187	77,563	76,202	74,514	79,169
부산광역시	154,165	23,901	23,798	26,451	26,204	26,043	27,768
대구광역시	120,860	18,894	19,145	20,248	20,435	20,548	21,590
인천광역시	165,867	27,170	27,373	27,582	27,530	27,504	28,708
광주광역시	87,136	14,617	14,930	13,801	14,171	14,306	15,311
대전광역시	88,643	14,676	14,717	14,613	14,522	14,652	15,463
울산광역시	69,337	10,759	10,830	12,173	11,777	11,513	12,285
세종특별자치시	16,988	2,477	2,361	2,893	3,025	3,057	3,175
경기도	757,279	126,190	127,673	122,121	124,548	124,107	132,640
강원도	70,230	10,979	11,047	11,578	11,816	11,926	12,884
충청북도	84,572	13,587	13,501	14,120	13,966	14,516	14,882
충청남도	119,077	19,674	19,595	19,584	19,531	20,236	20,457
전라북도	91,119	13,720	13,864	15,212	15,609	15,704	17,010
전라남도	86,557	12,518	12,397	15,251	15,207	15,053	16,131
경상북도	131,021	20,373	20,272	22,735	22,260	22,056	23,325
경상남도	184,107	27,657	28,050	31,738	31,394	31,683	33,585

자료: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보표 1-2>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남) 분포

행정구역별	2016 추계인구(남) (명)						
	0-5세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250,919	47,279	45,022	40,012	39,353	38,370	40,883
부산광역시	79,512	12,293	12,277	13,732	13,538	13,428	14,244
대구광역시	62,280	9,689	9,869	10,372	10,607	10,556	11,187
인천광역시	85,547	13,952	14,102	14,255	14,183	14,222	14,833
광주광역시	45,203	7,554	7,754	7,079	7,461	7,409	7,946
대전광역시	45,766	7,550	7,604	7,535	7,415	7,679	7,983

(보표 1-2 계속)

행정구역별	2016 추계인구(남) (명)						
	0-5세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울산광역시	35,736	5,523	5,584	6,249	5,998	6,021	6,361
세종특별자치시	8,665	1,265	1,219	1,450	1,551	1,565	1,615
경기도	390,497	64,989	66,017	62,694	64,472	63,950	68,375
강원도	36,323	5,661	5,714	6,003	6,131	6,216	6,598
충청북도	43,425	6,962	6,947	7,188	7,213	7,454	7,661
충청남도	61,605	10,129	10,129	10,251	10,019	10,455	10,622
전라북도	47,115	7,104	7,198	7,841	8,102	8,121	8,749
전라남도	44,307	6,399	6,366	7,808	7,770	7,631	8,333
경상북도	68,074	10,560	10,538	11,791	11,579	11,431	12,175
경상남도	95,496	14,307	14,568	16,384	16,350	16,354	17,533

자료: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보표 1-3〉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여) 분포

행정구역별	2016 추계인구(여) (명)						
	0-5세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235,533	44,538	42,165	37,551	36,849	36,144	38,286
부산광역시	74,653	11,608	11,521	12,719	12,666	12,615	13,524
대구광역시	58,580	9,205	9,276	9,876	9,828	9,992	10,403
인천광역시	80,320	13,218	13,271	13,327	13,347	13,282	13,875
광주광역시	41,933	7,063	7,176	6,722	6,710	6,897	7,365
대전광역시	42,877	7,126	7,113	7,078	7,107	6,973	7,480
울산광역시	33,601	5,236	5,246	5,924	5,779	5,492	5,924
세종특별자치시	8,323	1,212	1,142	1,443	1,474	1,492	1,560
경기도	366,782	61,201	61,656	59,427	60,076	60,157	64,265
강원도	33,907	5,318	5,333	5,575	5,685	5,710	6,286
충청북도	41,147	6,625	6,554	6,932	6,753	7,062	7,221
충청남도	57,472	9,545	9,466	9,333	9,512	9,781	9,835
전라북도	44,004	6,616	6,666	7,371	7,507	7,583	8,261
전라남도	42,250	6,119	6,031	7,443	7,437	7,422	7,798
경상북도	62,947	9,813	9,734	10,944	10,681	10,625	11,150
경상남도	88,611	13,350	13,482	15,354	15,044	15,329	16,052

자료: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2. 표본 규모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의 목표 표본규모는 1,300가구이다. 무작위추출을 가정했을 때, 95% 신뢰수준에서 1,300 표본의 최대허용표집오차는 2.71%p내외

이다. 최종적으로 1,312가구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해당 영유아 수는 1,823명이다. 조사 모집단 표집틀인 2016년 4월 기준의 행정자치부 읍면동별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보표 1-4〉 행정자치부 읍면동별 세대수

지역	합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20,844,009	16,647,712	2,316,022	1,880,275
서울특별시	4,193,887	4,193,887	-	-
부산광역시	1,443,215	1,382,312	8,005	52,898
대구광역시	985,801	908,303	27,434	50,064
인천광역시	1,159,109	1,117,080	32,290	9,739
광주광역시	582,731	582,731	-	-
대전광역시	600,185	600,185	-	-
울산광역시	453,256	366,545	31,544	55,167
세종특별자치시	87,157	44,264	24,060	18,833
경기도	4,918,017	4,026,376	377,584	514,057
강원도	687,027	391,701	168,877	126,449
충청북도	673,166	382,158	157,957	133,051
충청남도	890,469	374,471	309,225	206,773
전라북도	785,172	515,034	200,587	69,551
전라남도	836,425	322,290	317,618	196,517
경상북도	1,173,932	583,285	331,367	259,280
경상남도	1,374,460	857,090	329,474	187,896

자료: 행정자치부 읍면동별 세대수(2016년 4월 기준).

3. 표본설계 방법

가. 층화

표본 추출기준 응답자는 미취학자녀이나, 조사적격 대상자는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국가기초구역으로 지역을 추출하고 지역 내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국가기초구역은 PPS 통반리 조사 지점 추출방식이 지닌 조사지점 구획의 불명확성, 현 주소체계(도로명 주소체계)와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표본 오차 발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도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중소도시, 농어촌은 9개 지역에서 동부, 읍·면부별 층화하였다. 조사의 편의상 대도시에서는 '군' 지

역을 제외하였으며, 중소도시, 농어촌에서는 '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국가기초구역을 추출하였다.

〈보표 1-5〉 국가기초구역 표본수

	합계	동부	읍·면부	제외지역
서울특별시	476,068	476,068	0	
부산광역시	148,649	148,649		기장군
대구광역시	110,155	110,155		달성군
인천광역시	160,050	160,050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83,740	83,740	0	
대전광역시	86,732	86,732	0	
울산광역시	57,338	57,338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14,835	14,835		
경기도	738,027	728,831.5	9,196	
강원도	71,840.5	54,534.5	17,306	
충청북도	84,993	67,220.5	17,773	
충청남도	117,492	100,763.5	16,729	
전라북도	93,741	78,566.5	15,175	
전라남도	89,363	58,074.5	31,288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134,892	113,144	21,748	울릉군
경상남도	189,864	171,532	18,332	

자료: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2016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나. 동·읍·면 및 세대의 추출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 세대수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하여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소 표집되지 않도록 층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국가기초구역의 표본수는 120개로 추출된 각 동·읍·면에서 약 11세대(가구)를 조사하며, 추출된 동·읍·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보표 1-6〉 120개 표본 국가기초구역 분포

권역	동부	읍/면부	합계
대도시	48	-	48
중소도시	54	18	72
합계	102	18	120

4. 가중치 조정 및 추정

가중표본 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는데,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별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청 2016 장래추계인구(2016.9월 기준)로 사후 조정하였다.

가중치 부여는 읍면동(국가기초구역) 추출이 1단계, 추출된 국가기초구역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이다. 각 국가기초구역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 전체 평균 산출

$$\hat{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w_{hij}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응답결과

L : 층의 수

n_h : 층 h 에서의 표본 국가기초구역(지역)의 수

m_{hi} : 층 h 내 i 번째 표본 국가기초구역(지역)의 응답자 수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 추정량의 분산

$$\text{var}(\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L : 층의 수

n_h : 층 h 에서의 국가기초구역(지역)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국가기초 구역(지역)의 응답자 수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보론 2]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이유 및 개선점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이유와 개선점은 가독성 제고를 위해, 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의 내용은 교육·보육서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의 실태조사의 아동별 조사 결과에 기반한 내용이다.

1.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유치원 종일제를 이용하거나 에듀케어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가 절반 이상(57.7%)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라는 응답도 30.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성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4세 자녀를 가진 부모의 응답에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방과후 과정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22.9%가 응답하였다.

〈보표 2-1〉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과정 참여이유 및 개선점(아동별 조사)

	단위: %, (명)				$\chi^2(df)$
	전체	3세	4세	5세	
계(수)	100.0(85)	100.0(20)	100.0(23)	100.0(41)	
참여 이유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해서	57.7	77.3	45.3	55.1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	30.5	18.0	24.5	40.1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방과후 과정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9.1	4.7	22.9	3.4	14.7(8)
유치원에서 권해서	1.4	0.0	2.5	1.4	
기타	1.3	0.0	4.8	0.0	
개선점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35.6	51.6	41.3	24.4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 비용(가격규제 등) 산출	12.4	10.3	7.3	16.3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24.5	21.6	18.8	29.2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확대	9.9	11.6	11.2	8.3	10.4(12)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12.3	2.5	13.1	16.7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폐지	3.7	2.5	2.3	5.1	
방과후 과정 신청 자격 제한	1.6	0.0	5.9	0.0	

유치원 종일제와 에듀케어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에 응답이 35.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이 24.5%,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 비용(가격규제 등) 산출'이 12.4%,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이 12.3% 순으로 나타났다. 3세와 4세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5세에서는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2.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참여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응답이 20.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는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세, 2세, 3세 연령에서는 특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치될 것 같다'는 응답 또한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표 2-2〉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786)	100.0 (5)	100.0 (66)	100.0 (148)	100.0 (170)	100.0 (187)	100.0 (210)	$\chi^2(df)$
참여 이유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10.1	0.0	15.6	9.3	8.0	11.6	9.5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20.1	36.5	14.2	17.8	19.3	21.1	22.9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44.6	30.3	42.9	41.6	42.9	44.9	48.7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질 것 같아서	5.4	23.8	2.1	5.4	7.2	2.8	6.7	552(30)*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치될 것 같아서	15.8	9.4	25.1	23.6	19.4	12.1	7.8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3.2	0.0	0.0	1.4	2.6	4.8	4.4	
기타	0.9	0.0	0.0	0.8	0.8	2.6	0.0	

* $p < .05$

한편,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 작성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83.9%가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1세에서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7%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표 2-3〉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작성(아동별 조사)
단위: %, 점(명)

	받은적 없음	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음	참여동의서 작성함	기억안남	$\chi^2(df)$	계(수)
전체	3.3	0.6	83.9	12.1	100.0	(786)
자녀 연령						
0세	0.0	0.0	100.0	0.0	100.0	(5)
1세	8.7	0.0	81.6	9.6	100.0	(66)
2세	2.2	1.1	88.5	8.1	185(15)	100.0 (148)
3세	2.5	1.4	83.4	12.8	100.0	(170)
4세	2.5	0.5	81.1	15.9	100.0	(187)
5세	4.0	0.0	84.0	12.1	100.0	(210)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특기교육 기회제공과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에 대하여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특기교육 기회제공 측면과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측면 둘 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도움이 안됨'이 1점, '매우 도움이 됨'이 5점으로 환산한 5점 척도 결과, 평균 3.6~3.7점을 나타냈다.

〈보표 2-4〉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도움정도(아동별 조사)
단위: %, 점(명)

	전혀도움 안됨	별로도움 안됨	보통임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평균 (수)
특기교육 기회제공						
전체	0.7	4.0	32.4	52.2	10.8	3.7 (786)
영아(0-2세)	0.6	3.1	35.8	51.8	8.7	3.6 (219)
3세	0.9	4.5	31.3	55.3	8.0	3.6 (170)
4세	0.5	5.9	28.9	54.0	10.7	3.7 (187)
5세	0.7	2.9	32.7	48.4	15.4	3.7 (210)
$\chi^2(df), F$			12.1(12)			0.8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전체	2.4	4.4	36.2	47.8	9.2	3.7 (786)
영아(0-2세)	0.6	1.3	42.0	49.0	7.1	3.6 (219)
3세	3.8	4.5	32.7	51.3	7.7	3.6 (170)
4세	2.6	6.3	36.8	46.0	8.4	3.7 (187)
5세	2.9	5.7	32.5	45.5	13.4	3.7 (210)
$\chi^2(df), F$			21.3(12)*			0.6

* $p < .05$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강사 질의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위의 두 가지 개선 사항이 주요한 것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표 2-5〉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개선사항(1+2순위)(아동별 조사)
단위: %, (명)

	강사의 질 향상	교육비 인하	프로 그램 다양화	교육 내용 공개	강사 관련 정보 제공	예결산 내용 공개	투명한 프로그램 제공업체 선정	운영 시간 축소	아동 평가 자료 제공	기타	(수)
전체	58.9	16.1	57.2	20.3	11.1	6.2	11.8	.8	11.8	3.4	(786)
자녀연령											
0세	81.2	8.4	91.6	0.0	9.4	0.0	9.4	0.0	0.0	0.0	(5)
1세	65.1	4.3	50.5	27.3	20.7	8.6	10.5	0.0	9.7	2.1	(66)
2세	58.2	17.0	58.4	18.8	7.8	9.6	10.6	2.2	10.8	4.5	(148)
3세	51.3	19.0	58.6	18.8	11.3	4.8	15.3	1.2	11.5	4.0	(170)
4세	57.1	22.1	50.7	21.9	10.4	6.3	11.7	0.3	13.8	4.1	(187)
5세	64.7	11.6	62.3	19.6	10.8	4.4	10.4	0.4	12.0	2.1	(210)

주 :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함.

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와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0세와 1세의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은 반면, 2세부터 5세까지는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보표 2-6〉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계(수)	보육 연령							$\chi^2(df)$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6)	(3)	(4)	(16)	(15)	(15)	(22)	
자녀가 원해서	3.3	0.0	0.0	0.0	7.6	9.2	0.0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34.5	63.4	58.8	17.6	40.4	34.5	34.6	
초등학교 준비로 더 적합할 것 같아서	6.6	0.0	0.0	0.0	2.1	11.2	13.7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34.5	0.0	0.0	45.5	32.6	32.7	40.0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어서	5.2	36.6	20.9	0.0	3.5	3.5	3.9	41.4(45)
어린이집/유치원 이전에 다녔기 때문에	8.2	0.0	0.0	26.5	5.1	3.8	2.4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다 차서	1.3	0.0	0.0	6.2	0.0	0.0	0.0	
어린이집/유치원을 추후에 다닐 계획이므로	2.5	0.0	20.3	4.2	2.8	0.0	0.0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2.3	0.0	0.0	0.0	2.7	2.9	4.0	
기타	1.5	0.0	0.0	0.0	3.3	2.2	1.4	

4.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가 3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와 근소한 차이로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32.7%로 그 뒤를 이었다. 0세의 경우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1세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세의 경우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세 이전은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보표 2-7〉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계(수)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chi^2(df)$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4)	(14)	(6)	(5)	(22)	(63)	(133)	
자녀가 원해서	32.7	0.0	0.0	11.9	29.6	43.1	34.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33.4	39.3	12.3	13.0	23.8	41.0	32.5	97.9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6.0	0.0	0.0	0.0	9.1	5.1	7.1	(40) ^{***}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8.0	9.9	11.0	63.7	7.1	5.1	7.1	

(보표 2-7 계속)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chi^2(df)$
계(수)	100.0 (244)	100.0 (14)	100.0 (6)	100.0 (5)	100.0 (22)	100.0 (63)	100.0 (133)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8.2	15.7	34.3	11.4	7.1	0.9	9.7	97.9 (40) ^{***}
주변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0.9	8.7	0.0	0.0	4.5	0.0	0.0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4.7	0.0	0.0	0.0	18.8	3.5	3.8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5.9	26.4	42.4	0.0	0.0	0.5	5.7	
기타	0.2	0.0	0.0	0.0	0.0	0.8	0.0	

^{***} $p < .001$

5.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아동의 연령별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가 4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다.

〈보표 2-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chi^2(df)$
계(수)	100.0 (47)	100.0 (3)	100.0 (4)	100.0 (4)	100.0 (5)	100.0 (16)	100.0 (16)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								55.0 (25) ^{***}
자녀가 원해서	32.1	0.0	81.4	0.0	0.0	63.0	15.5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42.4	57.4	18.6	32.9	100.0	30.3	41.7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10.2	0.0	0.0	0.0	0.0	3.5	26.3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2.2	0.0	0.0	0.0	0.0	0.0	6.5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6.5	42.6	0.0	0.0	0.0	0.0	10.0	
교사 가정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6.6	0.0	0.0	67.1	0.0	3.2	0.0	

^{***} $p < .001$

6. 가정 내 학습지

아동의 연령별 가정 내 학습지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선행 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가 4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20.3%로 나타났다. 1세와 2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세의 경우는 자녀가 원해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 5세의 경우는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표 2-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350)	100.0 (2)	100.0 (22)	100.0 (26)	100.0 (85)	100.0 (100)	100.0 (115)	$\chi^2(df)$
자녀가 원해서	20.3	0.0	8.2	23.9	31.3	19.9	14.6	
비용이 저렴해서	7.8	0.0	16.1	11.3	6.2	7.6	6.8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2.3	0.0	6.3	0.0	2.2	2.2	2.4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	43.3	61.3	3.5	18.9	29.2	49.7	60.8	100.3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14.9	0.0	34.6	25.5	19.7	11.4	8.4	(35)**
남들이 다 해서	5.3	38.7	0.0	10.8	5.3	4.6	5.0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4.3	0.0	11.7	7.0	5.5	3.6	2.1	
기타	1.9	0.0	19.6	2.6	0.6	1.1	0.0	

** $p < .001$

가정 내 학습지 혹은 독서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89.4%가 지원 받은 적이 없었으며, 7.8%가 지원 받은 적이 있고, 2.8%가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향후에 이런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3.8%가 계속 이용 의사가 있었으며, 10.6%는 지원이 종료되면 중단한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43.9%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하였고, 36.6%는 별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보표 2-10〉 가정 내 학습지 혹은 독서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수혜 여부			향후 계속이용 의사			서비스 확대 여부		
	지원 받고 있음	지원 받은 적 있음	지원 받은 적 없음	계속 이용	지원 종료되면 중단	모름	더 많아짐	별영향 없음	모름
전체	2.8	7.8	89.4	83.8	10.6	5.6	43.9	36.6	19.5

7. 교구활동 교육

아동의 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다.

〈보표 2-11〉 아동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54)	100.0 (4)	100.0 (7)	100.0 (6)	100.0 (20)	100.0 (8)	100.0 (9)	$\chi^2(df)$
자녀가 원해서	22.6	0.0	39.8	0.0	23.3	43.5	12.9	36.9 (30) ^{***}
비용이 저렴해서	2.5	0.0	0.0	0.0	2.5	0.0	9.0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	7.5	0.0	29.2	0.0	5.0	0.0	11.5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13.7	26.0	0.0	21.8	15.3	12.7	11.1	
남들이 다 해서	1.2	0.0	0.0	11.0	0.0	0.0	0.0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2.9	0.0	0.0	0.0	0.0	0.0	17.4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49.6	74.0	31.0	67.2	54.0	43.8	38.0	

^{***} $p < .001$

8. 통신 교육

통신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교육시간의 제약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이 다양해서’라는 응답도 19.6%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도 13.1%로 나타났다.

〈보표 2-12〉 통신 교육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22)	-	100.0 (3)	100.0 (4)	100.0 (5)	100.0 (5)	100.0 (5)	$\chi^2(df)$
자녀가 원해서	9.2	-	0.0	16.3	0.0	0.0	27.4	29.4(20)
교육 내용이 다양해서	19.6	-	0.0	0.0	9.6	31.5	44.4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26.8	-	0.0	66.6	0.0	51.3	10.8	

(보표 2-12 계속)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22)	-	100.0 (3)	100.0 (4)	100.0 (5)	100.0 (5)	100.0 (5)	$\chi^2(df)$
자녀가 위해서	9.2	-	0.0	16.3	0.0	0.0	27.4	
교육 내용이 다양해서	19.6	-	0.0	0.0	9.6	31.5	44.4	294(20)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26.8	-	0.0	66.6	0.0	51.3	10.8	
교육시간의 제약이 적어서	25.7	-	100.0	0.0	44.6	0.0	10.6	
비용이 저렴해서	13.1	-	0.0	17.1	33.8	11.1	0.0	294(20)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5.6	-	0.0	0.0	12.0	6.1	6.8	

9. 개별 돌봄 서비스

아동의 연령별 개별 돌봄 서비스와 교육·보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주된 이유로는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표 2-13〉 개별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0.0 (146)	100.0 (7)	100.0 (34)	100.0 (31)	100.0 (37)	100.0 (18)	100.0 (19)	$\chi^2(df)$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해서	77.7	73.4	68.5	77.2	73.4	84.9	97.5	
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위해서	6.1	20.4	4.2	12.7	5.5	0.0	0.0	196(15)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4.5	6.2	23.4	6.3	21.1	15.1	2.5	
기타	1.7	0.0	3.9	3.8	0.0	0.0	0.0	

연령별로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여부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99.7%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가 매번 교체되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와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높지 않다'는 이유가 차 순위로 나타났다.

〈보표 2-14〉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비율 및 이유(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전 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chi^2(df)$
계(수)	100.0 (182)	100.0 (301)	100.0 (300)	100.0 (300)	100.0 (301)	100.0 (300)	100.0 (318)	
아이돌보미 이용 여부								
이용함	0.3	0.1	1.0	0.6	0.0	0.2	0.0	8.2(5)
이용안함	99.7	99.9	99.0	99.4	100.0	99.8	100.0	
이용하지 않는 이유	(181)	(301)	(297)	(299)	(301)	(300)	(318)	65.0 (40)**
대기기간이 길어서	2.6	2.9	2.5	3.6	1.8	2.2	2.5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9.0	5.4	9.5	8.1	11.7	10.5	8.7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10.3	9.6	10.8	10.7	8.7	9.8	12.0	
민간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7.5	5.5	8.9	7.4	5.7	9.4	8.0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높지 않아서	15.0	12.8	14.8	17.7	15.1	13.0	16.4	
아이돌보미가 매번 교체되어 안정적이지 않아서	14.5	10.6	15.4	12.2	17.5	15.4	15.9	
필요하지 않아서	37.9	46.5	33.3	39.0	38.5	36.1	34.0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2.9	6.3	3.8	1.3	1.0	3.1	1.9	
기타	0.4	0.5	0.9	0.0	0.0	0.5	0.6	

** $p < .01$

부 록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기타 부표

부록 3. 심층면담자 특성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영유아 보육 · 교육 비용에 관한 조사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IV)」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유아학비 지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비용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표 종류	시도	국가기초구역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1												

①구/동
②시/동
③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시·도 ()로	()구·군 ()길	()동·읍·면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모	<input type="checkbox"/> ② 부	<input type="checkbox"/> ③ 조부모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월 일

 I.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댁의 자녀수는 각 구분별로 몇 명입니까?

① 영아 (2013~2016년 출생)	② 유아 (2010~2012년 출생)	③ 초등학교 이상	④ 전체
명	명	명	명

2. 귀댁의 5세 이하(2010~2016년 출생) 미취학 자녀를 ‘나이 어린 순으로’ 연령, 성별, 출생 순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아동번호	01(막내)	02	03
2)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개월수로 환산합니다. (2016년 7월 1일 기준)	년 월	년 월	년 월
	개월	개월	개월
3)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4) 출생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 지금부터는 아동별로 응답해주시요
 ※ 조사대상 아동의 보육연령, 생년월일, 출생순위를 가구조사표에서 이기하고, 이 자녀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아동번호	생년월일	출생순위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1. 이 자녀가 하루 반일 이상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관입니까?

반일 이상 보육·교육 기관 이용 유무	보육·교육 기관 종류
① 예	① 어린이집 → II로 가십시오. ② 유치원 → II로 가십시오.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III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IV장으로 가십시오.



II.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1. 현재 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디입니까?

	기관 명칭	기관 설립 유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기관명 _____	① 국·공립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기관명 _____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2.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표기합니다.)

출발 시간 (예: 07시 30분)	도착 시간 (예: 15시 30분)
()시 ()분	()시 ()분

2-1.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기관 이용 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이용 시간에 변화가 없다
- ② 이용 시간이 줄었다
- ③ 이용 시간이 늘었다

3.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3-1로 가십시오
- ②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3-1로 가십시오
- ③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4로 가십시오
- ④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3-2로 가십시오
- ⑤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3-2로 가십시오

3-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 ②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 ③ 다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 ④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기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7. 이 자녀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교육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종일반비 등의 납입 여부와 납입 주기 및 지출 비용과 이 비용 총액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연령 3-5세의 경우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매월)으로 나누어서 응답을 해주십시오.)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예	②아니오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보육료(※ 정부보조금 제외)							원	①전혀 부담 안됨 ②별로 부담 안됨 ③보통임 ④조금 부담됨 ⑤매우 부담됨
현장학습비							원	
행사비							원	
차량운행비							원	
급간식비(아침/저녁급식비)							원	
교재교구비							원	
기타()							원	

8. 표준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이용여부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이용함	②이용안함	①납입함	②납입하지 않음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야간보육									원	①전혀 부담안됨 ②별로 부담안됨 ③보통임 ④조금 부담됨 ⑤매우 부담됨
휴일보육									원	
주말보육									원	
24시간보육									원	

→ 13번으로 가기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모든 금액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9. 이 자녀가 현재 다니는 유치원에 내는 교육비/보육료,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의 납입 여부와 납입 주기 및 월평균 비용과 이 비용 총액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예	②아니오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수업료(※ 정부보조금 제외)							원	①전혀 부담 안됨 ②별로 부담 안됨 ③보통임 ④조금 부담됨 ⑤매우 부담됨
현장학습비							원	
행사비							원	
통학차량비							원	
급간식비							원	
교재교구비							원	
기타()							원	



VII. 교구활동 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

1. 이 자녀가 이용하는 교구활동 교육 종류와 교사 방문 여부, 교육시간, 월평균 비용과 교구 비용, 비용 부담 및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교사 방문여부	(교사방문시) 주당교사 방문 횟수	(교사방문시) 주당교육 시간	월평균 교육 비용	(교구구입시) 구입비용 (월)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없음	회	분	원	원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됨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없음	회	분	원	원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됨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없음	회	분	원	원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됨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이 자녀가 교구활동 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비용이 저렴해서
- ③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
- ④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 ⑤ 남들이 다 해서
- ⑥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 ⑦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 ⑧ 기타()



VIII. 인터넷, 전화교육 등 통신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

1. 이 자녀가 이용하는 인터넷 등 통신교육 종류와 교사 방문 여부, 교육시간, 월평균 비용과 교구 비용, 비용 부담 및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인터넷	전화교육	기타()	기타()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항 2				
2) 주당 이용 횟수	회	회	회	회
3) 주당 이용시간	분	분	분	분
4) 월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5) 비용 부담정도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됨				
6)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3. 이 자녀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은 월평균 총 몇 시간입니까? (※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십시오.)

월평균 총 () 시간

4. 시간제 보육을 위해 정부지원 외에 추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6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총액)

만원

5. 총 가구소득에 비해 시간제 보육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부담스럽지 않음 ② 적절함 ③ 부담스러움 ④ 해당없음

6. 지출비용 대비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② 주양육자 혼자 양육하기에 부담스러워서
③ 주양육자의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④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⑤ 자녀를 동반하기 어려운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⑥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에 비해서 저렴해서 ⑦ 기타 ()

※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8.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 전 연령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비용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응답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오)

※ 참고 : 2016년기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아동의 보육 연령에 따라, 0세 418,000원, 1세 368,000원, 2세 304,000원, 3~5세 220,000원입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0~11개월 200,000만원, 12~23개월 150,000원, 24개월 이상은 100,000원이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소액의 차등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정책구분	정책 선호	비용의 적정성	적정 인상 혹은 삭감 비용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잘 모르겠음	① 현재보다 인상 필요 ② 현재 수준 유지 → 문 X로 가십시오. ③ 현재보다 삭감 필요	_____만원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잘 모르겠음	① 현재보다 인상 필요 ② 현재 수준 유지 → 문 X로 가십시오. ③ 현재보다 삭감 필요	_____만원

※ 응답한 자녀 이 외에 미취학 자녀가 더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아동조사 설문’을 추가로 진행한 후, XI 문항에 응답합니다.



XI.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1. 귀하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 외에 자녀의 연령별로 주된 보육·교육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비용 등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불 비용은 지원금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

자녀 연령	주된 보육·교육서비스 종류	적정 서비스 시간	적정 지불 비용
0세 (2015.1.1 이후 출생아)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1세 (2014.1.1. ~ 2014.12.1.)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2세 (2013.1.1. ~ 2013.12.1.)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3세 (2012.1.1. ~ 2012.12.1.)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4세 (2011.1.1. ~ 2011.12.1.)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5세 (2010.1.1. ~ 2010.12.1.)	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② (혈연, 비혈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③ 시간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④ 기타(반일제, 시간제 학원 등)	① 하루_____시간 ② 하루_____시간 ③ 하루_____시간 ④ 하루_____시간	월평균 _____만원

2. 귀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춤형 보육이란, 만 0~2세반(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정책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시간 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맞벌이,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조손가정, 입원, 학업, 생계·의료급여 수급, 다문화 등)에는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중일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맞춤반을 이용(월 15시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적극 찬성 → 문 2-1로 가십시오.
- ② 찬성 → 문 2-1로 가십시오.
- ③ 반대 → 문 2-2로 가십시오.
- ④ 절대 반대 → 문 2-2로 가십시오.
- ⑤ 잘 모르겠음

2-1. 맞춤형 보육에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 ② 맞춤형 시간이 현재 이용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 ③ 종일반 지원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④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⑤ 교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⑥ 기타 ()

2-2. 맞춤형 보육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종일반 이용 시 자격 증명에 대한 불편함이 우려되므로(서류준비, 자격증명의 어려움 등)
- ② 맞춤형 이용 후 추가 이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 ③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조차 기관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 ④ 부모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⑤ 정부가 무상보육을 약속했기 때문에
- ⑥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종일반 보육의 질이 하락될까봐 우려되므로
- ⑦ 기타 ()

3.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7점을 기준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점이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1점에 응답해주십시오)

지표	필요성							점수
	← 낮음				→ 높음			
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기관 미용자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시간 연장형 보육(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육아 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육아정보·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3번 문항의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앞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4. 0~5세 전 연령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대상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 계층 → 4-1로 가십시오.
- ② 특정 연령의 자녀만 → 4-3로 가십시오.
- ③ 취약 계층만(장애 영유아,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 → 4-4로 가십시오.

4-1. 현행과 같이 전 계층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면, 지원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처럼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어야 함(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은 유지).
- ②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4-2로 가십시오.
- ③ 가구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XIII로 가십시오.



XII. 가구 일반 현황

1. 귀택의 가구 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가구원 수	총 명			
2) 가구 형태 (※아동기준으로 응답)	① 조부모+부모+자녀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⑤ 부부+자녀	⑥ 한부모+자녀	⑦ (한)조부모+자녀	⑧ 친인척+자녀 ⑨ 기타()
3)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6) 인천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8) 세종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input type="checkbox"/> 04) 대전 <input type="checkbox"/> 09) 경기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4)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군) <input type="checkbox"/> 3) 읍면지역			
5) 가구소득 (지난 한달 기준)	1)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본인, 배우자, 동거 자녀, 기타 가족)			월평균 만원
	2) 근로소득 외 소득 (이자, 배당금, 집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재산금융 소득) (임대료, 지대 등 부동산 소득) (고용보험, 국민·공무원연금, 공공부조 등 사회보험 소득) (비동거 자녀, 부모,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민간단체 지원금 등 이전 소득) (장학금 등 기타 소득)			월평균 만원
	3) 보육관련 기타소득 -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월평균 만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양육수당			월평균 만원
	- 육아휴직 급여			월평균 만원
4) 가구소득 총계			월평균 만원	
6) 월평균 지출액(2016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만원
7) 귀택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자녀 부모님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시시오.

구분		부	모
1)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비해당		
2)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3) 출신국	① 내국인 ② 외국인		
4)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수료 이상		
5) 취업상태	① 취업 ② 육아휴직, 일시휴직 ③ 학업 ④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⑤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⑥ 전업 주부(육아 및 가사) ⑦ 기타		
6) 직업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학생 ⑪ 무직, 주부(가사)		
7)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시간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 비용 지출 및 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가구의 보육·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안내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지출 및 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가구의 보육·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 **대 상**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약1,300개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로, 영유아 자녀의 보육·유아학비 지출 현황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으며,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평균 25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가구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분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참 여 기 간** : 조사는 7~8월 중에 실시되며, 1회 참여가 요구됩니다.
- **장 소** : 귀하가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시면,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본 조사의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1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영유아 가구를 위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세한 가구의 보육비·교육료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사례비 지급을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는 개인 식별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 통계 변수로써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며 이후 파쇄기를 통해 폐기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시건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참여 동의서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명	동의합니다	날짜	확인
		2016. ____ . ____	(서명/인)

조사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부록 2] 기타 부표

〈부표 2-1〉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서비스 이용자 평균)

단위: 만원, 명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출생연도	2004년생	37.5 (2)	30.9 (28)	21.6 (57)	20.9 (118)	25.8 (168)	28.3 (200)	30.4 (174)
	2005년생	26.7 (6)	44.1 (18)	21.0 (58)	24.6 (110)	26.8 (163)	31.7 (164)	33.0 (151)
	2006년생	20.0 (4)	35.4 (30)	27.5 (68)	22.1 (176)	29.1 (203)	30.4 (215)	27.5 (219)
	2007년생	15.0 (1)	38.2 (21)	21.3 (83)	23.3 (162)	30.2 (188)	30.6 (197)	
	2008년생	50.0 (1)	29.4 (32)	20.6 (102)	25.1 (158)	25.0 (185)	37.1 (196)	
	2009년생	40.0 (2)	23.8 (47)	24.8 (94)	17.4 (165)	37.2 (185)	37.8 (176)	
	2010년생	51.8 (6)	31.4 (42)	14.2 (125)	38.4 (175)	40.1 (188)		
	2011년생	39.8 (4)	20.0 (42)	35.6 (130)	34.5 (170)			
	2012년생	11.0 (7)	37.7 (65)	39.7 (138)				
	2013년생	26.3 (14)	37.9 (51)					
	2014년생	56.7 (3)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비용을 응답한 관측치 수임.

2)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02(15차년도)조사에 응답 값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부표 2-2〉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실질비용)

단위: 만원, 명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년 연 단 위	2004년생	1.3	6.4	8.7	16.8	26.1	28.6	29.2
	2005년생	2.9	6.3	9.8	18.9	24.9	30.5	29.8
	2006년생	1.1	6.6	9.8	16.8	26.6	27.7	25.1
	2007년생	0.3	5.1	9.1	18.7	26.6	27.5	
	2008년생	0.7	5.1	11.0	19.5	21.8	33.3	
	2009년생	1.3	4.0	12.2	14.3	33.1	32.5	
	2010년생	3.1	6.9	8.7	32.0	35.1		
	2011년생	1.2	4.5	22.2	27.6			
	2012년생	0.6	11.7	25.5				
	2013년생	3.4	11.7					
	2014년생	3.0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2(15차년도)조사에 응답 값이며, 굵은 글씨는 전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를 나타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부표 2-3〉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보육연령 (기준=0세)	1세	0.211 **	0.781 ***	0.475 ***	-0.044	-0.140 ***	-0.139 ***
	2세	0.478 ***	1.540 ***	1.113 ***	0.029	-0.142 ***	-0.167 ***
	3세	0.760 ***	2.235 ***	1.536 ***	0.148 ***	-0.054	-0.042
	4세	0.816 ***	2.328 ***	1.607 ***	0.208 ***	-0.001	0.019
	5세	0.641 ***	2.030 ***	1.320 ***	0.029	-0.069 *	-0.014
아동 성별	남성	-0.01	0.013	-0.005	-0.011	0.001	-0.001
아동 코호트 (기준= 04-06년생)	07-08년생	-0.078 ***	-0.147 **	-0.128 ***	-0.088 ***	-0.031 *	-0.057 **
	09-11년생	0.130 ***	0.367 ***	0.195 ***	0.073 ***	0.032 *	0.013
	12년생이후	0.331 ***	-0.330 **	1.194 ***	0.251 ***	0.048	0.079
엄마 연령 (기준= 24세이하)	25-29세	0.152	0.202	-0.085	0.424 ***	-0.109	-0.08
	30-34세	0.122	0.257	-0.111	0.361 ***	-0.085	-0.076
	35-39세	0.096	0.14	-0.195	0.362 ***	-0.089	-0.051
	40세이상	0.038	0.144	-0.219	0.287 **	-0.133	-0.115
엄마 경활상태 (기준= 미취업)	임금	0.065 **	-0.029	0.048	0.033 *	0.059 ***	0.138 ***
	비임금	-0.036	-0.077	-0.075	-0.093 **	-0.012	0.031
	무급가족	-0.148 *	-0.341 *	-0.206	-0.181 ***	-0.158 ***	0.175 **
엄마 교육상태 (기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0.084 ***	0.072	0.094 **	0.057 ***	0.059 ***	0.066 **
	대졸이상	0.007	-0.074	-0.042	0.008	0.061 ***	0.140 ***
가구소득		0.421 ***	0.602 ***	0.523 ***	0.349 ***	0.235 ***	0.261 ***
자녀수		-0.160 ***	-0.295 ***	-0.176 ***	-0.094 ***	-0.100 ***	-0.107 ***
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0.100 ***	-0.051	-0.101 *	-0.087 ***	-0.088 ***	-0.125 ***
	도	-0.105 ***	-0.144 *	-0.134 ***	-0.069 ***	-0.085 ***	-0.156 ***
상수항		0.268	-2.869 ***	-1.041 ***	1.048 ***	2.619 ***	2.704 ***

주: 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수는 1,918명이며, 총 표본은 5,594명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 $p < 0.1$, ** $p < .05$, *** $p < .001$

〈부표 2-4〉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보육연령 (기준=0세)	1세	0.226 ***	0.812 ***	0.555 ***	-0.038	-0.121 ***	-0.137 ***
	2세	0.511 ***	1.611 ***	1.201 ***	0.058	-0.120 ***	-0.171 ***
	3세	0.792 ***	2.343 ***	1.632 ***	0.182 ***	-0.036	-0.044
	4세	0.858 ***	2.367 ***	1.694 ***	0.239 ***	0.021	0.018
	5세	0.716 ***	2.213 ***	1.466 ***	0.056	-0.051	-0.016
아동 성별	남성	-0.009	0.007	-0.014	-0.004	-0.002	0
아동 코호트 (기준= 04-06년생)	07-08년생	-0.056 *	-0.083	-0.116 ***	-0.082 ***	-0.030 *	-0.058 **
	09-11년생	0.207 ***	0.565 ***	0.287 ***	0.074 *	0.047	0.011
	12년생이후	0.454 ***	0.003	1.360 ***	0.288 ***	0.056	0.065
엄마 연령 (기준= 24세이하)	25-29세	0.154	0.223	-0.089	0.376 ***	-0.102	-0.076
	30-34세	0.11	0.275	-0.126	0.320 **	-0.098	-0.066
	35-39세	0.085	0.185	-0.225	0.309 **	-0.103	-0.043
	40세이상	0.033	0.27	-0.196	0.255 *	-0.137	-0.107
엄마 경활상태 (기준= 미취업)	임금	0.066 **	-0.015	0.041	0.035 *	0.047 ***	0.131 ***
	비임금	-0.046	-0.078	-0.088	-0.075 *	-0.028	0.036
	무급가족	-0.123	-0.185	-0.215 **	-0.216 ***	-0.140 ***	0.161 **
엄마 교육상태 (기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0.087 ***	0.095	0.105 ***	0.061 ***	0.069 ***	0.068 **
	대졸이상	0.009	-0.044	-0.017	0.001	0.071 ***	0.139 ***
지원확대		1.620 ***	2.818 ***	2.635 ***	1.924 ***	0.877 ***	-0.091
가구소득		0.540 ***	0.823 ***	0.730 ***	0.495 ***	0.314 ***	0.258 ***
가구소득×지원확대		-0.293 ***	-0.512 ***	-0.464 ***	-0.329 ***	-0.154 ***	0.017
자녀수		-0.159 ***	-0.291 ***	-0.179 ***	-0.094 ***	-0.089 ***	-0.108 ***
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0.094 **	-0.039	-0.098 **	-0.085 ***	-0.072 ***	-0.132 ***
	도	-0.106 ***	-0.132 *	-0.132 ***	-0.073 ***	-0.080 ***	-0.162 ***
상수항		-0.443 *	-4.322 ***	-2.314 ***	0.206	2.121 ***	2.724 ***

주: 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수는 1,918명이며, 총 표본은 5,594명임.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 $p < 0.1$, ** $p < .05$, *** $p < .01$

〈부표 2-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1)

단위: %

	A4용지	색연필	크레 파스	물감	각티슈	물휴지	물티슈	색종이	가위	폴		
전체	4.7	14.8	12.6	3.1	23.5	17.7	52.3	7.1	9.4	9.3		
아동 연령별												
0세	0.8	7.8	0.9	0.0	25.9	15.4	60.3	6.6	0.9	6.6		
1세	4.5	9.9	9.1	2.1	22.5	13.1	69.4	4.7	8.8	9.4		
2세	3.5	9.5	9.7	1.0	20.9	18.4	59.4	7.3	9.5	9.0		
3세	4.9	15.1	11.9	2.9	21.2	17.3	48.3	4.7	7.6	8.1		
4세	4.8	17.2	15.0	3.0	25.9	18.6	42.8	5.9	10.6	9.0		
5세	6.3	22.3	18.5	6.8	26.1	20.7	43.3	12.6	11.8	11.2		
설립유형												
국공립	2.9	14.2	10.3	0.5	13.0	12.2	48.9	1.5	6.9	6.4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9.2	18.4	17.2	2.2	32.6	28.8	74.4	10.4	16.5	14.8		
민간	6.9	13.0	11.7	3.8	25.1	19.8	63.8	9.0	9.7	10.0		
가정	1.9	9.8	8.2	1.3	32.5	15.6	71.1	4.1	6.3	8.1		
직장	7.0	0.0	0.0	0.0	6.9	0.0	35.2	4.8	0.0	4.8		
국립유치원	3.1	21.9	20.2	4.0	28.1	20.6	38.9	8.9	14.6	12.6		
사립유치원	4.3	16.1	12.9	5.2	22.6	17.6	36.6	8.9	8.4	8.3		
	쌀	스케 치북	클리어 화일	현금	치약	칫솔	가져귀	이불	컵	수건	기타	없음 (수)
전체	0.1	9.7	6.7	0.9	49.5	15.1	5.7	1.0	1.3	1.4	3.1	31.8 (1,421)
아동 연령별												
0세	0.0	6.6	0.0	0.0	21.3	5.5	33.3	2.3	0.0	0.0	1.7	34.8 (56)
1세	0.0	6.3	2.9	1.0	52.2	14.3	15.4	0.3	2.0	1.4	5.3	25.3 (240)
2세	0.0	8.0	4.6	0.5	48.8	15.9	7.0	3.3	0.9	1.8	1.3	30.3 (266)
3세	0.3	8.9	7.7	0.5	49.1	18.2	1.0	0.8	3.1	2.2	2.0	32.0 (282)
4세	0.0	10.1	6.5	1.6	52.4	12.9	0.5	0.0	0.5	2.1	4.3	33.3 (281)
5세	0.0	14.9	12.2	0.9	50.9	15.9	0.7	0.5	0.5	0.0	3.4	36.2 (295)
설립유형												
국공립	0.0	6.0	2.5	0.0	49.0	20.2	8.4	1.0	0.8	1.7	4.1	33.2 (259)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0.0	16.3	11.5	1.4	61.7	15.0	7.9	1.0	0.9	0.8	1.0	18.6 (77)
민간	0.0	10.6	6.7	0.6	53.5	13.4	5.8	2.4	1.8	1.5	2.1	26.7 (404)
가정	0.0	7.0	0.6	1.6	41.9	13.2	20.9	1.1	2.2	1.0	4.1	18.1 (139)
직장	0.0	0.0	21.4	0.0	21.4	0.0	0.0	0.0	0.0	0.0	0.0	64.8 (29)
국립유치원	0.0	14.1	9.9	0.6	51.1	16.9	0.0	0.0	0.0	1.9	5.9	39.0 (192)
사립유치원	0.2	9.4	8.4	1.6	46.8	14.1	0.0	0.0	1.8	1.3	2.4	38.8 (320)

주: 중복응답

[부록 3] 심층면담자 특성

<부표 3-1> 심층면담자 특성

	이름	거주지	만 연령	자녀 수	자녀구성	직업	배우자직업	가구 소득
저 소득 층	함OO	송파구	35	2	5세, 7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270
	박OO	동작구	34	1	5세, 7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270
	기OO	성동구	32	2	1세, 3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270
	이OO	마포구	33	2	1세, 5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240
	오OO	광진구	36	2	3세, 7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270
	송OO	강동구	36	2	3세, 8세	전업주부	블루칼라	250
중 산 층	박OO	영등포구	31	1	4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450
	양OO	강북구	35	1	4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400
	이OO	은평구	37	2	4세, 5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400
	김OO	강북구	39	2	6세, 10세	전업주부	블루칼라	450
	한OO	구로구	41	2	6세, 10세	전업주부	화이트칼라	400
	이OO	성북구	31	2	4세, 5세	전업주부	블루칼라	300
맞 별 이	석OO	서초구	38	1	7세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500
	조OO	양천구	35	2	3세, 5세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600
	이OO	양천구	35	1	2세	화이트칼라	자영업	1000
	박OO	강북구	31	1	4세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1000
	유OO	금천구	37	1	5세, 7세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500
	김OO	구리시	30	2	2세, 8세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500
농 어 촌	이OO	파주시	35	3	9세, 5세, 2세	전업주부	블루칼라 (농업)	300
	조OO	가평군	40	2	6세, 4세	블루칼라	블루칼라 (농업)	-

주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0%이하인 가구(4인 가구기준 약 270만원)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100%이상인 가구(4인 가구기준 약 540만원)를 중산층으로 구분함.

연구협력진

고 영 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고 2016-28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V)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99-8 93330